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대개조 네트워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 재조명

◆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민청 태평홀(서울시청 지하 2층, 1호선 '시청역' 4/5번 출구와 연결)

1:30~2:00 등록

1:50~2:00 국민의례
환영사·축사

순국선열 묵념

박민식(국가보훈부 장관)

◆ 사회: 김학성(국가대개조 네트워크 대표)

2:00~2:20 발제1

우남정신의 21세기적 계승과 발전의 길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2:20~2:40 발제2

이승만과 독립운동
오영섭(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2:40~3:00 발제3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박명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서울신대 명예교수)

특송 한경석(총신대 교회음악과 교수)

3:00~3:20 중간휴식

기념촬영

3:20~3:40 발제4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의 성공적 지휘
남정옥(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3:40~4:00 발제5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외교, 정치, 경제 업적
이철순(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40~5:00 발제6

제1공화국의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발전의 토대다지기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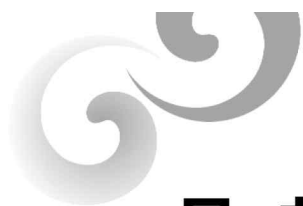
5:00~
(1시간) 패널토론

우남정신의 계승과 발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효숙(좌장, 리박스쿨, 시민단체), 김재동(목사, 교회), 김정민(박사, 학계)



◆ 공동주최 : (사)역사연구원, 국사교과서연구소,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승만학당, 리박스쿨,

한반도선진화재단, 역사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민연대, 우남네트워크, 대한민국사연구소 등



목 차 Contents

발제1 우남정신의 21세기적 계승과 발전의 길	3
이영훈(이승만학당 교장)	
발제2 이승만과 독립운동	21
오영섭(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발제3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	73
박명수(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서울신대 명예교수)	
발제4 이승만대통령과 6.25전쟁의 성공적 지휘	91
남정옥(전, 국방부군사면찬연구소)	
발제5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외교, 정치, 경제 업적	111
이철순(부잔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제6 제1공화국의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발전의 토대다지기	135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패널토론 우남정신의 계승과발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69
손효숙(좌장, 리박스쿨, 시민단체) 김재동(목사, 교회) 김정민(박사, 학계)	

<발제1>

이승만 정신의 21세기적 계승과 발전 -일민주주의의 재평가-

이 영 훈 (이승만학당 교장)

1. 문제제기

이승만은 독립운동가와 정치가이기 이전에 사상가 또는 종교가이다. 그의 평생에 걸친 독립운동과 건국활동은 그의 사상 내지 신앙(이하 정신으로 요약)과의 상호연관에서 이해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승만 정신에 관한 종전의 연구는 빈약하거나 피상적이었다. 이승만 정신은 동시대를 산 다른 독립운동가나 정치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것이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불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정신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립이라는 그가 이룩한 중대한 위업은 그의 정신이 올바른 방향에서 확고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독재자란 오명을 쓰고 불명예 퇴진한 것도 실은 그의 정신이 1950년대 그 시대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선 이승만 정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한국인의 정신적 갱생임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신적 갱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정치적 독립을 성취할 수 없으며, 나아가 근대 사회와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평생에 걸친 지론이다. 그가 추구한 한국인의 정신적 갱생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제창한 일민주의(一民主義)로 집약되었다. 종래 학계의 일민주의 평가는 이승만 정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일민주의를 재평가함과 더불어 그것을 21세기 오늘에 맞게 계승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이승만 정신

1) 백성의 압제

이승만은 부지런한 저술가였으며 당대인으로는 드물게 보는 방대한 양의 글을 남겼다. 독립운동기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활동기에 그가 남긴 수많은 글에서 그는 조선왕조가 망하게 된 기본 원인을 조선의 정신적 타락에서 구하였다. 그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

하여 조선이 억울하게 망했다는 통속적인 이해를 배척하였다.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그는 조선인의 마음을 얹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결박을 거론하였다. 양반과 상놈의 등분, 관리에 대한 노예적 복종, 주체적 사고의 결여, 공적 의리의 부재, 구습의 맹목적 추종, 거짓말하는 풍속, 자유와 독립에 대한 무지 등이 그것들이다. 수백 년에 걸친 전제정치가 그 원인이었다.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다시 원인을 이루는 악순환의 수백 년에서 조선의 정신은 타락하였다. 그것이 조선을 패망케 한 궁극의 원인이었다.

『한국교회핍박』에서 나아가 『태평양잡지』에 실은 수많은 논설에서 이승만은 자주 조선의 패망을 숨이 끊어져 가는 환자에 비유하였다. 또는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소멸해 가는 종족에 비유하였다. 이 환자가 다시 소생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 같은 이승만의 비유법은 해방 후의 건국 활동에까지 이어졌다. 해방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던 병자가 겨우 소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병균이 침투했으니 다른 아닌 공산주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민족을 살릴 길은 무엇인가.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을 독립 정신, 곧 자유 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치가 이 민족을 살릴 것인가. 이승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그는 영국, 미국과 같은 민주정치의 제도를 조선에서는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려는 우매한 황제 때문인가. 이승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악한 풍속에서 오는 ‘백성의 압제’라고 하였다. 풍속이 악한 백성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마치 범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과 같아서, 그 폐해는 황제의 전제정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제기한 ‘백성의 압제’라는 명제는 109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승만이 거론한 악한 풍속은 아직도 충분히 교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광화문 네거리를 불태운 촛불 난동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이승만 정신을 21세기적으로 계승할 한 가지 주요 계기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2) 장원한 천도

그렇다면 이 민족을 소생시킬 방도는 무엇인가. 이승만은 오로지 교화(敎化)라고 하였다. 조선인 하나하나가 악한 풍속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조선의 정신을 선량하게 교화할 것인가. 그것을 두고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서양의 장원(長遠)한 천도(天道)라고 하였다. 곧 서양의 기독교를 말하였다.

이승만에 의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문명은 요순(堯舜)시대에 더없이 진선진미했지만, 오랜 세월 진보를 멈추었다. 반면 서양 문명은 종교개혁 이래 비약적 발전을 거

습하여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서양의 발전은 통상, 과학, 기술, 민주정치의 덕만은 아니다. 1913년 『한국교회잡보』에서 이승만은 동서양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종교의 문제라고 주장했는데, 이 점은 21세기 오늘날 세계의 지성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진(眞)의 학설이다.

근대 세계사에 관한 이승만의 이해를 요약하면 결국 사후(死後) 심판과 복락을 약속하는 종교의 유무가 동서양을 가르는 근본 요인이다. 선한 사람은 천국 복락을 누리고 악한 사람은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하는 사후세계가 없다면, 인간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착하고 정의로울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가.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선하고 정의롭다면 그것은 기독교와 같은 장원한 천도의 덕분일 것이다. 서양이 부강한 것은 경제, 과학, 군사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죽음으로써 의를 추구하는, 성신(聖神)으로 거듭난,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승만은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 조선과 같은 동양에서는 그러한 장원한 천도가 없다. 필자의 추론이지만, 이승만이 보기에 동양은 현세의 복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는 물질주의 사회이다. 나라가 거의 다 망하는데도 임금이나 관료나 백성 모두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은 국가가 큰 공의(公義)로 성립해 있지 않은 가운데 사회의 도덕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다. 그 근본 원인을 추구하면 결국 장원한 천도를 결여한 동양의 현세주의 또는 물질주의 탓이다.

이상과 같이 이승만 정신은 전통 문명에 대한 일대 비판과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한두 정치가나 사상가가 단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사학의 용어를 빌리면 장기=구조의 수준으로서 수 세대에 걸쳐 약간의 변화가 관찰될 뿐인 영역이다. 이승만은 그러한 수준의 거대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 문명사적 전환은 아직도 좌충우돌로 진행 중이며, 수많은 장애와 적들이 출현하는 가운데 그 종당의 귀결이 어떨지는 예측하기 힘든 현실이다.

필자는 오늘날 이승만 정신을 계승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기독교입국론을, 그 역사적 지평을, 종교의 영역으로 좁게 설정해서는 곤란하다. 이승만 정신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종교개혁 이후 서양에서 발원한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그 개인들이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고 경쟁하면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고양해 가는 제반 행동과 도덕의 원리는 현대의 철학, 교육학, 경제학을 위시한 제반 학문의 힘을 빌려서도 얼마든지 인간의 정신을 변혁하는 가치로 다듬어지고 교육될 수 있다. 그것이 이승만 정신을 21세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식인들이 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3) 비교1: 신체호의 종족주의

오늘날 많은 한국인은 이승만을 부정부패를 일삼고 장기집권을 추구하다가 국민에 의

해 축출된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치세력은 이승만을 미국이란 외세를 업고 친일 반민족 세력과 합작하여 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으로 저주하고 있다. 실은 이러한 부류의 매도와 저주는 1910년대까지도 올라가는 매우 오랜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이승만 매도는 한국의 전통 문명에 뿌리를 둔 일종의 역사적 현상인 셈이다.

신채호는 가장 극렬하게 이승만을 비판한 최초의 인물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발기문으로 한 김원봉의 의열단도 마찬가지이다. 1919년 신채호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이승만을 최고지도자로 선출하자 그에 반발하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북경에 머물면서 반이승만 세력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한 이승만을 두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 매국노라고 비난하였다. 상해에서 활동한 일본 비밀경찰의 첩보에 의하면 북경의 반이승만 세력은 매국노 이승만의 처단에 현상금을 걸었으며, 그에 따라 의열단 청년 몇 명이 상해에 잠입하여 임시정부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신채호의 정신이 어떠했는지는 1916년에 쓴 자전적 소설 『꿈하늘』이나 의열단을 위해 쓴 「조선혁명선언」과 같은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2천만 조선인 모두가 한 몸으로 떨쳐 일어나 일본에 폭력으로 저항하기를 촉구하였다. 인간은 황금욕과 성욕과 명예욕에 약한 존재이다. 그런 유혹의 패배자가 되어선 안 된다. 심지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배신하더라도 그것들을 잘라내어야 한다. 그리고선 몸뚱이만으로도 때굴때굴 굴러 적진으로 돌격해야 한다. 신채호는 교육이니 실업이니 외교니 하는 독립운동 노선을 모두 지옥 불에 던져질 죄인으로 저주하였다.

그의 폭력투쟁론이 입각한 정신세계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인지는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필자는 그것을, 지금도 뿌리 깊게 이어지는, 전통 종교의 충실한 투영이라고 본다. 조선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과 유교의 구조적 접합이다. 그 전통 종교에서 삶과 죽음은, 곧 이승과 저승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이승의 어느 먼 구석에서 펼쳐진 저승에서 죽은 인간들의 혼은 생사와 동일한 관계로 살아간다. “이승의 양반은 저승에서도 양반이고, 이승의 종놈은 저승에서도 종놈이다.”

신채호의 정신은 이 같은 전통적 생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살아서 일본의 노비가 되었다면 죽어서도 일본의 노비 신세를 면할 수 없으니, 어찌 그 영원한 형벌을 차마 견딜 수 있는가. 신채호에 있어서 그 절대적 폭력투쟁을 이끄는 장수는 을지문덕, 강감찬과 같은 민족의 위인들이다. 그에게서 민족은 외적을 격파한 장수들의 집합적 혼령으로서 절대적 권위이다. 그의 민족에서 이기적 욕망의 단위로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을 압살하는 고대의 감옥과 같은 것이다. 필자는 이 같은 신채호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種族主義)라고 다시 정의함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에 대한 갖가지 매도와 저주는 이 같은 물개인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종족주의에 기초해 있다. 이승만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금도 뿌리깊게 이어지는 종족주의의 야만성을 폭로

하고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비교2: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이광수는 한국의 근대문학을 개척한 문학가이다. 1905년부터 5년간 일본에 유학하여 명치학원 중학부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3년간 평안도 정주 오산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1915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유학 중에 발표한 장편소설 『무정(無情)』은 그를 당대 제1의 문호로 만들었다. 1919년 3·1운동의 촉매가 된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는 그가 기초한 것이다. 그는 일경의 체포를 피해 상해로 탈출했으며, 안창호가 지도하는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그는 국무총리 이동휘의 독립전쟁 노선에 비판적이었다. 그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둘러싼 임시정부의 내홍(內訌)을 지켜보았다. 그는 임시정부에 절망하였다. 1921년 4월 그는 안창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단행하였다. 그 귀국의 변이랄까 1922년 5월 그는 장문의 논설 「민족개조론」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에서 이광수는 한국 민족의 도덕성은 크게 타락했으며, 조선왕조가 망한 것은 그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 민족성이 건강하게 개조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개인이나 민족이나 정직하고 근면하고 신뢰하고 협동하는 문명인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연후에 독립의 기초로서 비정치적인 단체를 결성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독립은 몇 사람의 지사가 벌이는 운동으로 성취될 바는 아니다. 그는 “정치적 독립은 실력이 있고 시세가 있는 때에 일종의 국제상의 수속으로 승인되는 것이지 운동으로만 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광수의 논문에 당대의 많은 조선인이 모멸감을 느꼈다. 그는 세론의 역풍에 시달렸지만 굴하지 않았다. 지식인으로서 그는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광수의 정신은 많은 대목에서 이승만의 그것과 겹치고 있다. 조선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독립의 전망에 대해 이광수는 이승만과 거의 동일한 이해와 감각을 가졌다. 그러나 이광수의 종말은 이승만과 달랐다. 이광수는 친일파의 거두로 변절하고 말았다. 무엇이 당대 제1의 문호를 그렇게 몰았을까. 한마디로 그는 이승만과 같은 자유 이념의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가 주창한 민족개조는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수준의 도덕적 변혁을 말하였다. 그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이념의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유 이념을 어느 개별 민족이 드러내는 특별한 성질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그는 영국인은 자유와 자치를 사랑하지만 프랑스인은 평등과 (피)지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자유는 앵글로색슨의 특별한 민족성이었다. 그는 한국의 민족성은 원래 건강했으며, 그래서 개조의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영국인과 같은 자유인으로 개조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추구한 민족개조는 물이념적이었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민주주

의와 같은 이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어느 이념의 소지자든 민족개조를 위한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광수는 신채호와 같은 종족주의자는 아니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와 시원을 같이 하는 문화적 민족주의에 경도되었다. 「민족개조론」 이후 그가 민족에 관해 발표한 여러 글은 그가 점점 민족 고유의 문화에 심취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1933년에 발표한 「조선민족론」에서 그는 민족은 ‘운명’이며 ‘영원한 실재’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그가 추구한 민족개조는 조선인이 도덕적으로 순백한 존재로 거듭나 지도자와 단체에 무한 희생하는 정신상태에 도달함을 말하였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였다. 1937년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였다. 1941년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 돌입하였다. 대동아공영의 제국이 눈앞에 펼쳐지자 이광수는 문득 일본 민족이야말로 그가 추구한 민족개조의 도달점임을 깨달았다. 그는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의 일부가 되는 편이 좋다는 선택에 망설이지 않았다. 민족개조를 위한 그의 고투는 역설적이게도 ‘친일 민족주의’를 귀결점으로 하였다.

해방 후 그는 또 하나의 커다란 병폐를 남겼다. 그는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의 회고록을 『백범일지』로 퇴고하고 출간하였다. 그 책의 부록에 「나의 소원」이란 글이 있는데, 실은 이광수의 작품이다. 「나의 소원」에서 이광수는 민족은 “영원한 혈통의 바다”와 같은 것이며 사상과 종교는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은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오로지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잘살기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이광수의 문화적 민족주의는 엉뚱하게도 테러리스트 김구의 정신으로 둔갑하여 오늘날 이승만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맥락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다.

5) 비교3: 안창호의 민족유일당과 대공주의

이광수의 정신은 실은 그가 상해에서 활동한 기간에 접촉한 안창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안창호는 당대 조선인들에게 이승만에 버금가는 추앙을 받은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다. 개인적으로 그의 인품은 훌륭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안창호는 조선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하나하나가 정직하고, 언행이 일치하고, 협동하고, 공사(公私)의 구분에 엄격한 인격으로 수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목적에서 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홍사단을 조직하였다. 이광수는 그 같은 안창호의 주장과 실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여러 차례 그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은 안창호라고 공개리에 표명하였다. 상해에서 이광수가 홍사단에 입단하면서 안창호와 주고받은 청문회의 내용은 두 사람의 정신이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인의 도덕적 갱생을 독립의 전제조건으로 추구하고, 독립을 위해 외교와 실력양성

등의 준비에 충실해야 한다는 초창기 안창호의 독립운동 노선은 이승만의 그것과 별다르지 않았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데에는 안창호의 역할이 컸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갈등하기 시작했으며, 끝내 결렬하였다. 1925년 임시의정원이 이승만을 탄핵한 것은 안창호의 주도에 의해서였다. 두 사람의 대립에는 출신 신분과 지역의 차이가 중요한 요인을 이루었다. 개인적 성품의 차이도 컸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이 있었으니 사상과 신앙, 곧 정신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었다.

안창호 역시 이광수와 마찬가지로 자유 이념과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신앙을 결여하였다. 자유 이념에 대한 안창호의 학문적 종교적 훈련은 그리 깊지 못하였다. 그는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입교하고 미국 생활을 체험했지만, “영국과 미국의 위대한 민주주의 전통을 거의 접할 수 없었거나 그 원칙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1921년 이후 안창호는 이승만의 독립노선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에 독립의 기회가 오며 그때까지 실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승만의 노선을 외세 의존의 허무주의라고 하였다. 1925년 이승만을 탄핵한 후 그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확보한 다음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념의 차이를 떠나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는 민족유일당을 결성하자고 외쳤다. 안창호에게 이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일본과의 투쟁을 위해서라면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계급혁명에 반대하지 말자고 하였다. 대공(大公)인 민족을 위해서라면 소사(小私)라 할 개인은 의당 그의 입장이나 이해(利害)를 버려야 했다. 1927년 이후 안창호는 이를 가리켜 대공주의(大公主義)라고 하였다.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안창호의 대공주의는 서서히 신채호의 종족주의에 접근하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안창호의 독립운동은 그가 상해에서 일경에 체포되는 1932년에 종결을 보았다. 만약 그가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생존했더라면, 필경 그는 임시정부의 김구, 김규식, 조소앙처럼 좌우합작을 주장하면서 이승만의 반공산주의 건국 노선과 크게 대립하였을 것이다. 민족이란 것만큼 그 속살이 불투명하거나 텅 빈 것이 없다. 그것은 인간을 격동시키는 감성의 체계일 뿐이다. 그 본성이 자애적인 개인이 민족으로 이름으로 대동단결할 수는 없다. 그러한 괴력을 발휘하기 위해 민족은 전체주의적일 수 밖에 없다. 안창호의 민족유일당 운동이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이념을 떠나 협동이 원래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에게서 신채호의 종족주의나 안창호의 대공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적 특질을 찾기는 힘들다. 그가 독립운동에 종사한 것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조선인이 그의 근본적인, 조물주가 부여한, 자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1924년 4월 이승만은 『동아일보』에 “철학박사 리승만”의 이름으로 「자유와 단결」이란 글을 기고하였다. 그 글에서 이승만은 우리 민족이 당하는 오늘날의 고통은 정치가들이 당쟁을 일삼고 백성이 자유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라고 한 다음,

“분쟁을 버리고 단결을 이루어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자”고 하였다. 이승만 역시 민족의 단결을 호소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장차 세계가 자유와 통상의 큰 물결로 하나가 될 것이며, 미국이 그 역사를 주도할 것으로 믿었다. 조선이 소생하는 길은 그 세계사의 주류에 편승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은 강대국이 충돌할 때 어느 일방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충돌하는 그날이 바로 그러한 기회이다. 이승만이 미일 충돌의 날이 올 것으로 믿은 것은 단순히 태평양의 제해권을 둘러싼 두 해양 강국의 군사적 충돌에 의해서만은 아니었다. 이승만은 그 이념과 신앙에서 두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생각하였다. 1908년부터 펼쳐진 이승만의 예언은 불과 33만에 그 실현을 보았다. 외세 의존의 허무주의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이승만의 독립노선은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안창호의 대공주의에는 이 같은 자유이념에 대한 믿음과 그에 기초한 당면 국제정치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

요컨대 민족은 주창자에 따라 다소간의 편차가 있지만 공통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반자유주의적, 전체주의적 성질을 지닌다. 이승만에 대한 온갖 매도는 민족주의의 그러한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승만 정신의 21세기적 계승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과제는 민족주의의 달콤한 향수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자유의 이성을 굳건하게 지켜낼 것인가라고 하겠다.

6) 비교4: 공산주의

이승만을 방해하고 그와 대립한 또 하나의 큰 적수는 공산주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끝내 분열하고 만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1923년 3월 이승만은 『태평양잡지』에 공산주의에 관한 그의 입장을 밝히는 「공산당의 당부당(當不當)」이란 글을 실었다. 세계 여러 나라로 공산주의가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거기엔 옳고 그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옛날과 같은 양반-상놈의 신분제가 사라지긴 했지만, 자본주의에 따른 빈부의 차별이 생겨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양반 노릇을 일삼고 가난한 노동자는 사실상 상놈이나 노예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없애자는 공산당의 평등주의는 옳다. 그렇지만 그러한 병폐는 법률을 제정하여 자본가와 노동자가 평등 세력을 이루게 함으로써 막을 일이다. 그를 위해 공산당이 재산을 골고루 나누고, 자본가를 없애고, 지식계급과 종교와 국가마저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산을 골고루 나누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으며, 자본가를 없애면 상업과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기술 진보가 중단될 것이며, 지식 계급과 종교 단체를 폐지하면 자유사상이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이승만은 자유 이념과 문명개화의 입장에서 공산주의의 근본 모순을 지적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을 통한 개혁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은 급진

적인 평민주의자였다. 1924년 7월호 『태평양잡지』에 실은 또 하나의 글 「사회공산주의에 대하여」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시의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산주의가 과연 옳고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 볼 일이라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공산주의와 관련하여 이승만이 우려한 것은 그 이념이 국가마저 없애자는 일종의 세계주의로서 독립을 추구하는 우리의 민족운동과 충돌하고 그것을 분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우리의 광복사업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결코 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같은 우려는 불행하게도 이후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현실화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끝내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이승만의 지도력을 부정하였다. 미 국무부는 조선인의 단결을, 곧 좌우합작을 촉구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이승만 휘하의 오랜 동지들이 그의 노선에서 이탈하였다. 그의 정치교문 로버트 올리버 박사는 전쟁 이후의 세계에서 공산주의와의 합작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면서 이승만을 설득했지만, 이승만은 완고하게 이를 물리쳤다. 그는 차라리 독립운동에서 은퇴할지언정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1945년경 이승만은 이미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공산주의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죽음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릴 큰 위험이었다. 독립운동의 대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끈질기게 벌인 분열 책동이 하나의 각성제였다면, 소련이 대전 중 점령지 폴란드에서 자행한 비극적인 대량 학살이 또 하나의 각성제였는지 모른다.

1945년 해방 후 조국에 돌아온 이승만은 그해 12월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방송을 통해 공표하였다. 거기서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양의 무리에 섞인 이리와 같은 존재로서 공산을 빙자하여 나라와 동족을 팔아 사리를 추구하는 사대주의자, 민족반역자, 거짓말쟁이로 규탄하였다. 1946년 그는 남한 일대를 순방하면서 “여러분의 형제가 공산주의자라면 그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원수”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선도한 반공(反共)과 방공(防共)의 노선으로 건립된 나라이다. 해방 공간에서 그러한 선각자는 이승만 이외에 다른 누구도 없었다. 이승만 정신의 21세기적 계승은 자유 이념에 투철한 가운데 반공산주의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작업에 다름이 아니다.

3. 일민주의

1) 취지

1948년 8월 건국 직후 이승만은 일민주의(一民主義)를 제기하였다. 동년 10월 이승만

을 따르는 대한국민회가 대한국민당을 발기할 때 일민주의를 당시(黨是)로 채택하였다. 동년 12월 여당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일민구락부를 결성하였다. 1952년 이승만을 총재로 하는 자유당이 만들어졌는데, 역시 일민주의를 제1의 강령으로 삼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민주의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1949년 4월 서울중앙방송국에서 행한 방송강의에서이다. 이승만은 그 강의를 공산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계로 시작하였다. 공산주의가 모두를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구호를 걸지만, 내실을 보면 민중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는 체제일 뿐이다. 이에 많은 나라가 공산당을 법률로 탄압하고 교육으로 경계하고 있다. 우리도 공산화를 배격해야 하는데, 민주주의만으로는 너무 평범하다. 이에 4대 정강의 일민주의로 한 정당을 세워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승만이 일민주의를 제기한 것은 장차 그것을 정강으로 받드는 한 정당을 결성할 목적에서였다.

1949년 12월 이승만은 다시 한 번 일민주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는 자신이 50년 전부터 혁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민주주의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공산당을 거부하고 동족 간에 투쟁하는 것도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일민주의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민주 정신을 깊이 심어 장차 무슨 야심가가 나타나 장난을 치더라도 우리 민국의 토대가 굳건하여 그 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일민주의의 ‘일민(一民)’은 자유 이념으로 잘 통합된 하나 된 국민 내지 시민을 말하였다.

이승만이 자신의 인생을 50년의 혁명가로 묘사했듯이, 그는 평생에 걸쳐 자유 이념의 민주주의로 그의 조국이 소생할 것을 추구하였다. 1948년 이윅고 새로운 민국이 세워졌지만, 나라의 기초는 여전히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야심에 찬 선동가들이 나라의 기초를 흔들 위험은 상존하였다. 이승만의 의중에서 그들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공산주의와의 타협을 통해 민족을 통일하자고 외치는 영웅주의의 정치가들이었을 터이다. 이승만의 우려대로 대한민국 75년의 정치사는 그러한 야심에 찬 선동가들이 빚어내는 혼란과의 투쟁이었다.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 선동에 속지 않을 자유 이념의 국민이 두터운 층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었다. 이승만의 일민주의는 한 마디로 신생 대한민국이 그의 만년 기초로서 ‘국민 만들기’ (nation building)의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

2) 제1강령: 문벌을 혁파하고 반상의 구별을 없애자

일민주의 제1강령은 문벌(門閥)과 반상(班常)의 폐지이다. 곧 인간을 출생의 등급에 따라 그 권리를 차별하는 신분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승만은 우리 민족이 모두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면서 하나로 통합 단결하기 위해선 신분을 차별하는 일체의 습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반과 상민을 차별하는 신분제는 일정(日政) 초기에 인

간의 사회적 평등을 규정한 법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식 영역에서는 사라졌다. 이승만은 20세기 중반의 한국 사회를 그가 계몽운동가로 활동한 19세기 말과 같은 것으로 감각했던가. 그는 고루한 계몽주의자에 불과했던가.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정기에 반상 신분제가 공식 영역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적 위세로서 양반 신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신분 의식의 존속은 부계(父系) 친족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였다. 일정기에 걸쳐 흔히들 문중(門中)으로 불리는 부계 친족집단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였다. 문중은 조선왕조의 높은 관직을 지냈거나 학행으로 이름을 떨친 조상에 대한 묘제의 거행과 족보의 편찬을 통해 친족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이 같은 친족집단의 행동 원리와 사회 전략에 바탕을 둔 신분 의식은 해방 후에도 여전하였다. 1950년대까지 농촌사회의 구성원은 그들의 원 신분을 예민하게 의식했는데, 이는 그들의 사회적 교류를 제약하였다. 농촌 주민의 결혼은 여전히 신분내혼(身分內婚)의 원리에 입각하였다.

1965년 사회학자 최재석은 지금도 읽을 가치가 충분한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란 책을 출간하였다. 그는 한국인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를 가족주의(家族主義)에서 찾았다. 사회는 가족의 확장 형태였다. 가족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민하게 상호 간의 서열을 의식하면서 높은 지위의 감투를 추구하였다. 가족의 경계가 명확하듯이 사람들은 그의 사회생활에서 친밀한 집단과 소원한 집단을 능숙하게 구분하였다. 친밀한 집단을 대표하는 것은 동족(同族), 동향(同鄉), 동창(同窓)이다. 가족주의 사회는 자립적 개인을 결여하였다. 가족이 친족의 일부분이듯이 가족주의는 전통 양반 의식의 또 다른 변형이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아직 역사의 지평선 너머에 있었다.

이상과 같은 현대 한국의 사회사를 돌이킬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제기한 일민주의 제1강령은 조선시대에 출생하고 활동한 초기 계몽주의자의 고루한 역사 인식만은 아니었다. 그가 보기에 나라가 새로 세워졌지만 그 정신은 그가 그토록 한탄했던 19세기 말의 타락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로운 문벌이 정당과 정파의 이름으로 생겨나고 있었으며, 그를 통해 새로운 신분으로서 벼슬과 학력을 두고 악착같이 쟁투하였다.

이승만은 제1강령을 해설하는 대목에서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모두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사상을 받들어 군주정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민주정체를 세웠듯이 우리도 그 같은 사상을 본받아 새 나라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자고 하였다. 이 나라 민주정체의 역사적 기원은 어디인가. 그에 대해 이승만은 명확히 대답하였다. 우리의 민주정체는 서양 민주국을 모범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지만 21세기 오늘날에조차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은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전통사회가 물려준 신분 의식에 눌러 있는 가운데 자유 이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민주의 제1강령은 초기 계몽주의자의 고루하거나 유치한 주문이기를 넘어 새로운 나라의 기초가 요구하는, 지금도 여

전히 유효한, 새로운 정신과 역사의식의 선포였다.

3) 제2강령: 빈자와 부자가 동등한 권리와 복리를 누리게 하자

자본주의의 병폐는 빈부 격차의 발생이며, 이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계급의 대립을 초래한다. 이승만은 이 같은 병폐를 방지하고선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같은 이승만의 생각은 1924년 『태평양잡지』에 실은 「평민시대」라는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거기서 그는 미국이 인민 평등의 공화주의로 생겨났지만, 재산이 수백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부자가 수도 없이 생겨나 가난한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양반과 상놈의 신분사회가 생겨났으며, 이에 새로운 평등주의로 공산주의가 대두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한 세계의 지성은 갈라져 있다고 하였다. 연후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는 우선 공화주의로 단결하여 우리의 독립을 성취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부자가 양반 노릇하고 빈자가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는 폐단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승만은 급진적인 평민주의자였다. 그 같은 그의 정치적 성향은 1946년 2월 그가 미군정 민주위원회의 의장으로 추대된 뒤 민주위원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에서도 명료하게 드러났다. 거기서 이승만은 우리가 건설할 독립국은 민중의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국법상 다 평등 대우를 주장할 터인데, 이를 위해 일본인과 반역자의 재산은 전부 몰수하여 국유화하며, 몰수 토지는 경작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며, 중요 공업과 광업과 은행, 철도, 통신 등은 국유로 하며, 고리대의 악습을 금지하며, 학령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며,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을 보호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다.

“부자와 빈자가 동등한 권리와 복리를 누리게 한다”는 일민주의의 제2강령은 이 같은 그의 평민주의 성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에 대해 해설하는 중에 이승만은 당면한 농지개혁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행하면 지주의 자본이 공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의 3대 요소로서 토지와 자본과 노동이 합작해서 서로 시장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장이익’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의 경제관은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었다.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그는 중요 공업은 국가가 통제하거나 경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당시 다수의 유력한 정치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족사회주의 내지 국가사회주의의 신봉자는 아니었다. 위의 ‘시장이익’이란 말이 시사하듯이 이승만의 입장은 자본의 부당한 횡포를 막자는 것이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의 주장대로 농지개혁은 농민이 지주의 횡포로부터 해방되는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토지 자본이 공업으로 전환하여 기업가가 육성되는 효과를 추구한 것이었다. 이 같은 이승만의 경제관은 일민주의를 제창한 1949년

그해에 일본이 남긴 방대한 귀속재산을 민간에 불하하여 자유기업의 경제체제를 수립하는 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수립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었다. 일민주의 제2강령은 이승만이 본질적으로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의 경제체제를 지향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점에서 당시의 지배적 풍조와 구분되는 선진적 경제사상이었다.

4) 제3강령: 남녀 동등은 민주주의의 큰 정강이다

일민주의 제3강령에서 이승만은 남녀 평등과 동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고래로 여성이 천시되고 학대되었지만, 근래에 민족운동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남성에 못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한 다음, 이때에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으로 구습을 버리고 공정한 신식을 택하여 전 민족의 반수가 되는 여성과 함께 세계무대에 경쟁 전진하는 것이 일민주의의 가장 요긴한 정강이라고 하였다.

여성의 인권은 15~19세기 조선시대에 걸쳐 악화의 길을 걸었다. 양반 신분의 여성은 재가를 금지당하였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음에 있어서 남형제와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였다. 친족집단의 구성에서도 남계와 여계는 동등한 비중을 지녔다. 남자는 처가로 장가를 들었으며,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였다. 17세기 이후 부계 종법(宗法) 원리의 성리학적 가례(家禮)가 농촌사회에 침투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조금씩 부정되었다. 여성은 점차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여성에 강요된 삼종(三從)의 도의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여성의 사회적 인격을 거의 부정하였다. 효부와 열녀에 대한 왕조의 정려(旌閭)는 적지 않은 여성에게 죽은 남편의 뒤를 따르는 순사(殉死)를 강요하였다. 여성의 인권이 질식함에 따라 가정과 사회의 윤리도 타락하였다.

일정 초기에 시행된 민법은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였다. 여성도 민법이 규정한 ‘사적 자치의 주체’로 성립하였다. 호적에 등록될 필요에서 여성도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민법은 가족과 친족 제도에 관한 한 조선의 전통을 존중하였다. 이에 여성이 남편의 횡포에 맞서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법이 보호한 여성의 인권은 점차 여성의 이혼 청구를 합법화하는 판례를 누적하였다. 1920년대에 개정된 민법은 여성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일정기에 걸친 여권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법의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일본식 가족의 호주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갖가지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아내의 법 행위에는 호주의 동의가 요구되었다. 혼인 중 아내가 취득한 재산도 많은 경우 남편의 소유로 귀속하였다. 형법이 규정한 간통죄는 남편의 고소에 의해 아내와 상대 남성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다. 남편이 간통한 경우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않았다. 민법이 규정한 혼인은 일부일처제이지만, 남성의 축첩(畜妾) 행위는 공연하게 인정되었

다. 초기의 호적에는 첩과 그의 소생도 가족의 성원으로 등록되었다. 축첩은 오랜 관행이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19세기까지 양반의 약 30%는 첩을 두었다. 적서(嫡庶)의 차별과 그에 따른 분쟁은 조선시대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을 이루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동등을 일민주의의 가장 요긴한 정강으로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서였다. 이미 1946년의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에서 이승만은 “일남일부(一男一婦)의 가정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실(小室) 두는 폐습을 금지하되 법령이 반포된 이후로 작첩(作妾)하는 자는 벌칙을 제정하여 금지할 것”을 공약하였다. 건국 이후 1949년 7월 국회는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축첩한 자는 공무원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적지 않은 의원이 오랜 세월의 인습을 갑자기 폐지하면 이혼과 가정 파탄의 큰 혼란이 야기되므로 차라리 국민 운동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반대하였다. 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83명의 큰 차이로 동 조항은 부결되었다.

1949년 11월 이승만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축첩방지법의 제정을 지시하면서 “하루빨리 이 욕스러운 폐습을 영영 막아서 우리가 범한 오랜 치욕을 삭제함이 개명한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직책”이라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곧 이은 전쟁의 탓인지 축첩방지법은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 대신 1953년 기존 형법의 간통죄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 대상을 ‘남편이 있는 부(婦)’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로 남녀동등의 취지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첩공무원의 추방을 지시했으며, 그때마다 공무원사회에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지만, 사회에 만연한 축첩 관행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는 어느 의미에서는 자유방임의 시대였다.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 시행 초기에 큰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 이승만은 그 혼란을 그의 개인적 카리즈마로 대응하였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그의 소신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시대는 민주주의가 부른 혼란으로 무너졌다. 축첩 공무원을 아무래도 처리할 수 없었던 데서 그러한 역사의 한계상을 읽을 수 있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축첩 관행이 축출되는 것은 5·16혁명 이후 군사정부의 강제력에 의해서였다. 1961년 6월 중앙부처 내무부에서만 511명의 축첩 공무원이 추방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사에서 천년을 이어온 중혼(重婚)의 풍습이 사회의 공식 영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와 더불어 중혼의 위협과 모욕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이 크게 해방되었다. 일민주의 제3강령은 이러한 역사적 추이를 지향하였다.

5) 제4강령: 지방색을 타파하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몇 가지 정파로 대립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은 기호파와 서북파였다. 곧 출신 지역에 따른 지방색이었다. 1925년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탄핵도 결국 서북파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서북파 사이에서는 “일본놈은 30년 원수요, 양반은 500년 원수”라는 말이 돌았다. 윤치호는 그 암울한 대립상을 그의 일기에다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을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갈라놓은 두 파벌이 이제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 가고 있다.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이다.” 필자는 안창호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서북인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기호인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아침 햇살에 물안개가 피어나는 것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지방색은 조선왕조 이래의 오랜 문화였다.

조선왕조는 서북인과 호남인을 차별하였다. 그 지방 출신으로서 과거에 급제한 비율은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낮았다. 더구나 청요직(淸要職)에 발탁된 인물을 거의 전무하였다. 그 지방에 대한 조세와 요역의 수취는 특별히 무거웠다. 사색 당쟁도 지방색과 무관하지 않았다. 울곡(栗谷)이 파주라면 퇴계(退溪)는 안동이었다. 우암(尤庵)이 호서라면 서애(西厓)는 영남이었다.

상해에서 하와이로 돌아온 이승만은 『태평양잡지』에 지방색에 관해 「남북론」, 「기호파가 무슨 파냐」, 「지방구별」이라는 세 편의 글을 실었다. 그는 「남북론」에서 여러 나라에서 있어 온 지방대립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호인과 서북인의 대립이 심각하여 장차 민국의 큰 화근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 5백 년에 걸쳐 서울 사람이 서북인을 몹시 차별하였음에 있는데, 이는 인권사상이 발달하지 못한 낡은 시대의 유감스러운 풍습이요, 우리가 합심하여 건설할 민국에서 그러한 차별은 다시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 한인(韓人)들은 가는 곳마다 기호파니 서북파니 하면서 갈라져 서로 보지도 않거나 심하게 다투고 있으니, 그 원인을 상고하면 몇 사람의 지도자들이 당파를 모아 영웅 노릇하고자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국권을 되찾기는커녕 민족마저 소멸할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이승만은 우리 한인은 모두 한 핏줄로서 성은 모두 한(韓)이고 이름은 모두 인(人)과 같으면서 지방색의 타파를 촉구하였다. 일민주의의 ‘일민’은 이승만이 이같이 지방색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드러낸 민족주의적 수사에서 비롯한 것인지도 모른다.

건국 이후 이승만이 일민주의의 제4강령으로서 지방색의 타파를 호소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 동일 핏줄로서 하나라는 민족주의를 넘어 자유의 이념으로 잘 통합된 국민과 시민의 형성을 지향한 것이었다. 제4강령의 해설에서 이승만은 조선 5백 년의 당쟁당론과 지방구별로 우리가 다시 분열하여 투쟁을 일삼는다면 우리의 앞길이 심히 참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애 성숙해 온 문화가 그렇게 쉽사리 없어질 리는 없었다.

기호와 이승만에 대한 서북파의 반감은 대한민국의 성립 이후에도 멈추질 않았다. 서북파는 이승만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승만과 심하게 대립한 민주당은 서북파를 잇는 도산계(島山系, 안창호의 흥사단계)와 호남파라 할 인촌계(仁村系, 김성수계)의 연합체와 같았다. 군부에서는 평안도 출신과 함경도 출신이 대립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함경파를 방패로 하여 평안파를 견제하였다. 1956년 대통령의 심복인 방첩대장 김창룡이 서북파에 의해 암살되었다. 그에 대해 김인서는 “이승만 박사가 함경도 바위로 쌓았던 경무대의 담장이 무너졌다”고 평하였다.

야당의 여러 파벌도 지방색으로 대립하였다. 신익희의 사망 이후 벌어진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서 도산계의 흥사단은 원로 단원인 조병옥을 버리고 아버지가 평안도 출신인 장면을 지지하였다. 조병옥은 충청도 출신이었다.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장면 정부의 핵심 인물은 대개 평안도 출신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인을 갈라놓은 영남파와 호남파의 지방색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관해선 모두가 잘 아는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한다. 요컨대 지방색은 한국사의 오랜 전통으로서 문화적 현상이다. 지방색의 발흥과 존속은 21세기 오늘날에서조차 한국인이 자유 이념으로 잘 통합된 국민 내지 시민이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색을 타파하자는 일민주의 제4강령은 자유 이념의 국민 내지 시민의 형성을 위해 한국인이 넘어야 할 가장 험하고 높은 역사적 장벽이 무엇인지를 선구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

6) 변질과 오해

이승만은 일민주의를 통해 국민을 민주적으로 통합할 강건한 정당을 결성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일민주의는 그리 강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1949년의 정국은 일민주의 운동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았다. 일민주의의 바탕에는 이승만이 평생을 통해 추구한 자유 이념이 진하게 녹아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대다수의 지식인과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제시한 일민주의를 민족사회주의 또는 국가사회주의의 취지로 받아들였다. 이승만의 친위세력을 자처한 대한국민당은 일민주의와 더불어 민족사회주의를 당시로 삼았다. 이승만이 일민주의를 제창하자 일민주의보급회가 서둘러 조직되었다. 동 보급회의 회장을 맡은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였다. 그들은 일민주의 정당을 조직하기 위해 농민을 보급회의 말단 조직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는 등의 폐단을 빚었다. 1950년 1월 이승만은 그러한 일민주의 운동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동 보급회와 결별하였다. 곧이어 6·25전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승만이 그의 일민주의에 대한 애착을 적극적으로 표한 적은 없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책임진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민주의의 4대 강령을 실질적으로 관철해 갔다.

이후 일민주의는 심한 오해와 매도의 대상이 되었다. 앞서 소개했듯이 일민주의는 건국 이후 이승만이 돌연히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 1924년 이승만은 하와이 동지회의 3대 강령을 마련하면서 이로써 계급, 종교, 지방 등 모든 구별을 타파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꾀한다고 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일민주의의 4대 강령은 동지회의 강령을 확대 부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거기엔 이승만이 『독립정신』을 비롯한 수많은 글에서 피력한 그의 자유 이념과 독립 방략이 충실히 녹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승만의 주요 저작과 논설을 충실히 읽지 않았다.

어느 경박한 연구자는 일민주의의 4대 강령은 당시 문교부가 추진한 신생활운동의 여러 조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식 수준의 실천을 강령으로 삼은 것은 이승만의 정치철학이 얼마나 빈곤했단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는 이승만은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를 신봉했으며, 그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속내를 감추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비교적 온건한 비판자라 하더라도 이승만의 일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결여한 전체주의 내지 파시즘의 사고형태라고 단정함에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4대 강령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장벽으로서 전통사회와 그 정신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4. 맺음말

이승만은 조선왕조의 패망은 조선의 정신이 타락한 탓이라고 보았다. 그는 **한국인의 정치적 독립은 정신적 갱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정신적 갱생은 자유 이념에 대한 종교적인 신봉을 말하였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신앙은 인간을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고 경쟁하고 공정하게 배려하는 정신을 고양한다. 나아가 사회, 경제, 정치를 보다 고급의 질서로 고양한다. 자유 이념의 이 같은 도덕적 효과는 현대의 철학, 심리학, 교육학을 비롯한 제반 과학이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그러한 **자유 이념의 갱생적 효과**를 신봉하였다. 자유 통상의 국제사회는 세계를 영구평화로 이끈다. 장차 세계사의 주류는 그렇게 흐를 것이며, 그 흐름은 최초로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성립한 미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상이한 정신의 나라이며, 두 나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때가 조선이 독립할 기회이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 민족은 자유 이념으로 그 정신이 잘 훈련된 문명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관철한 것은 이 같은 일념이었다. 그는 독립의 길을 여러 갈래로 전망한 유력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그 길이 현실적임을 입증한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과학적이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대통령으로서 그가 추구한 나라 또는 국민 만들기의 과업도 기본적으로 이 같은 정신적 갱생의 연장선상에 놓였다. 그가 제기한 4대 강령의 일민주의는 초등학생에게나 가르칠 유치한 생활윤리가 아니다. 일민주의를 전체주의 내지 파시즘으로 오독함은 저간의 한국 지성이 얼마나 유치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에 대한 갖은 오해와 매도의 근거에는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파생하는 종족주의 내지 민족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다시 말해 반개인과 반자유의 전체주의이다.

건국 후 이승만이 제기한 일민주의의 4대 강령은 한국인이 그의 선진 사회와 국가를 모색함에 있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장애가 무엇인지를 한국사의 구체적 맥락에서 제기한, 그 기본 정신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잠언(箴言)이다. 이승만 정신은 자유의 이념과 그로부터 유인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지성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인이 봉착하고 있는 온갖 어려움의 근본 처방임을 변함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발제 2>

이승만의 독립운동

-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끼친 이승만의 공헌을 중심으로 -

오 영 섭(대한민국사연구소 소장)

목 차

1. 머리말
2.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끼친 미·중 양국의 역할
 - 1) 카이로회담 이전 미·중 양국의 한국독립문제 인식
 - 2) 카이로회담 당시 미·중 양국의 한국독립조항 작성과정
3.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끼친 한국독립운동세력의 공헌
 - 1) 김구와 임정 요인들의 공헌
 - 2) 이승만과 친한파 인사들의 공헌
4. 맺음말

1.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의 판세가 연합국에 기울어가던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미국 대통령, 처칠(Winston Churchill) 영국 수상, 장개석(蔣介石) 중국 군사위원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전시회담을 벌였다. 이 회담은 전후(戰後)처리문제와 대일(對日)작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회담 겸 정치회담이었다. 이 회담의 결과는 12월 1일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선언에 담긴 한국독립 관련조항은 “위의 3대 강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것이었다.¹⁾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신탁통치안을 의미하는 모종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독립을 시켜준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조건부 독립승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 조항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래 국제적으로 독

1)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정일화, 『대한민국 독립의 문』카이로선언, 선한약속, 2010, 52-56쪽.

립을 보장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또 대한제국 멸망 이래 독립운동세력이 국내외에서 간단없이 벌인 피어린 투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일제 식민통치에 신음하는 한민족의 운명과 현대한국의 진로를 밝혀준 등불과도 같은 구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에 걸맞게 그간 역사학계는 카이로선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카이로회담 전후의 국제관계, 카이로회담의 개최과정, 카이로선언의 역사적 의미, 한국독립조항의 작성·수정·승인 과정, 중국의 장개석 위원장과 친한파 중국인들의 역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홉킨스(Harry L. Hopkins) 특별보좌관의 역할, 김구 등 중경임정 요인들과 미국의 이승만과 친한단체 등을 다룬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간 배경과 역할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장개석과 김구의 공헌을 강조한 연구²⁾와 루스벨트와 이승만의 역할을 중시한 연구³⁾로 구분된다.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끼친 공헌문제와 관련하여, “김구와 임시정부가 중국의 장제스를 움직여 한국독립조항을 얻어냈다는 주장이 거의 정설로 여겨진다” “김구와 임시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한국학계의 정설이다. 열강이 한국의 국제공동신탁통치 합의 대신 한국독립을 보장된 것은 백범과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이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다”⁴⁾ “카이로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제기한 것은 장개석이었고, 루스벨트가 이에 동의하여 실현된 것이다. 장개석의 제안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의 역할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여 루스벨트-이승만 역할을 폄하 내지 부정하고 장개석-김구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⁵⁾

2) 조일문,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 소고」, 『행정연구』 4, 건국대 행정문제연구소, 1978;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 국가보훈처, 1999; 신용하, 「백범 김구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백범 김구의 사상과 독립운동』, 서울대 출판부, 2003;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 III: 중경시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이상철, 「현대사 사료발굴-蔣介石日記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사료」, 『월간조선』, 2010년 10월호; 박명희,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중화민국정부의 태도」, 『동양학』 4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0; 余季彦, 「카이로(Cairo)회담 연구: 중국 국민당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1941-1943)」,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107, 2014; 이완범,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한국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관계” 학술회의 논문집, 2015; 배경한, 「카이로회담에서의 한국문제와 장개석」, 『역사학보』 224, 2014 참조.

3) 정일화, 『카이로선언』;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제1장 「이승만의 정치역정」, 일조각, 2013. 이 중 전자는 “중국은 아니다”라며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부정하고 루스벨트·홉킨스의 역할만을 매우 강조하고 이승만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후자는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거론하지 않고 루스벨트와 이승만의 역할만을 중시했다. 다만 전자는 단 3줄(495쪽)로 홉킨스가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감리교도인 이승만이 감리교지도자들과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루스벨트와 이승만의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다.

4) 이완범,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89, 143쪽.

카이로선언과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기왕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편향성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첫째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장개석·김구·루스벨트의 역할을 중시하거나, 루스벨트·이승만의 역할을 중시하거나 하는 연구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강조하고 중시하는 국가나 인사들의 자료만을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함으로써 자료 인용의 형평성을 기하지 못했다. 둘째 카이로회담 당시 한국독립조항을 작성한 두 주역인 미국과 중국이 카이로회담 이전에 이미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대강의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회담에 임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셋째,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미·중 양국의 합작품임과 동시에 미·중 양국정부를 움직인 채미·재중 독립운동가들의 애국활동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장개석을 움직여 얻어냈다고 김구-장개석의 역할만을 특별히 강조하는 반면 미국의 루스벨트나 이승만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하거나 폄하·부정하려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유념하면서 1)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이 카이로 회담 이전 미·중 양국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미 그 대강의 열개가 마련되었던 사실, 2)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김구가 장개석을 움직여서 성사시킨 것일 뿐 아니라 이승만이 루스벨트를 움직여 성사시킨 것이라는 사실, 3)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그 최초 제기자나 동의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떠나 결국 미국과 중국의 합작품이라는 사실, 4) 1943년의 7월 26일의 장개석·김구 만남은 친중국·친김구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한국독립을 ‘약속’한 자리가 아니라 독립운동진영의 통합을 당부한 자리였다는 사실, 5) 이승만이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루스벨트와 국무성에 압력을 행사하여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등을 강조하여 서술하려 한다.

2.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끼친 미·중 양국의 역할

1) 카이로회담 이전 미·중 양국의 한국독립문제 인식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해 마지않던 미일전쟁이 발발했다. 이어 12월 9일 중국정부가 정식으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12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했다. 태평양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자 한국 문제의 당사자인 임시정부는 물론, 3·1운동 이래 임시정부 승인요청을 받은 미국과 중국도 對韓정책을 새로이 정비하기 시작했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미국과 중국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독립문제를 조율했다. 미국측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와 주중미국대사가, 중국측에서는 장개석정부와 국민당과 주미중국대사가 소통창구가 되었다. 또 한국문제 관련 중요기사가

5)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51쪽.

상대국 신문이나 통신사를 통해 신속히 전달·번역되어 보도·방송되었고, 양측 관료나 민간인들도 전보를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특히 장개석의 최측근인 송자문 외교부장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미·중 양국의 대한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미·중 양국의 대한정책은 미국이 주도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서로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1년 12월 22일 미국무부는 주중미국대사 고스(Clarence E. Gauss)에게 임시정부의 세력과 조직, 임시정부에 관한 중국정부의 태도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전보를 보냈다.⁶⁾ 이때 국무부가 한국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12월 9일 이승만이 국무부에 제출한 전권대표 신임장과 임시정부의 공한(「대일선전성명서」 및 임시정부 승인요구 서한) 때문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진주만사건 직후부터 국무부의 한국문제 대책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하여간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고스는 1942년 1월 3일 “중국내에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자가 별로 없으며, 또한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당의 태도는 열성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

1942년 2월 23일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탄신기념 라디오연설 중 한국에 대해 “한국과 만주의 주민들은 일본의 가혹한 폭정을 몸소 겪고 있다”고 하였다. 그 연설의 말미에서 루스벨트는 “침략국의 무장해제, 민족자결주의, 4개항의 자유(언론·종교의 자유, 궁핍·공포로부터의 자유)는 대서양연안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⁷⁾ 이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민의 노예적 처지에 대해 동정을 표한 최초의 발언이자,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이 한국의 독립문제에도 적용됨을 시사한 최초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이 시점에 루스벨트가 한국상황과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일정한 지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월 2일 미 국무장관대리 웰즈(Benjamin S. Welles)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민족주의자들의 활동에 관한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웰즈는 “최대한의 동정심을 갖고 그러한 운동을 바라보고 있다”고 답하면서 “한국문제를 심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⁸⁾ 이는 국무부가 이승만의 신임장과 공한 제출, 루스벨트의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대한 동정 표명, 워싱턴 라파예트호텔에서 열린 임시정부 승인요구 대회인 대한인자유대회(2.27-3.1) 등을 반영하여 한국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월 20일 미국무부는 고스 주중대사에게 “일본의 압제를 종식시키려는 한국인의 노력에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시하는 일반성명(general statement)을 발표하는 것이

6) 한철호 역,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54쪽.

7)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I, pp.186-188; 『大公報』, 중경, 1942년 2월 15일.

8)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Radio Bulletin No.51, 1942.3.2.

타당한가의 여부”를 전보로 물었다. 3월 28일 고스는 “한국에 대한 일반성명이 중국이나 한국에서 결코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문제는 인도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식민지 민족들의 독립열망 문제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아울러 그는 “중국 외교부가 분명히 임시정부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⁹⁾

미국무부 극동국은 주중미국대사와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4월 1일 비망록을 작성했다. 여기서 극동국은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중요하고도 구체적인 사태진전의 산물로서 그러한 선언이 있을 때까지 국무부가 한국의 궁극적인 독립에 대해 결코 더 이상 성명을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극동국은 (1) 중국이 임시정부의 승인을 주저한다는 점, (2) 분열상태에 있는 한국인 단체가 머지않은 장래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임시정부와 같은 특정한 한국인 단체를 한국의 정부로 승인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¹⁰⁾ 이로서 미국정부는 임시정부를 당장 승인해서는 안되며,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중국의 정책을 참작해가며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 신중론을 수용하였다.

4월 초순 태평양전쟁협의회(Pacific War Council)¹¹⁾ 참석차 미국으로 건너온 중국 외교부장 송자문은 루스벨트정부와 한국문제를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태평양전쟁협의회에서 한국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그는 태평양전쟁협의회에 참여한 연합국의 회원들이 한국독립을 바란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그는 “일종의 정치적 조치로서 태평양전쟁협의회가 종전 후 어느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실현시켜 준다는 결정을 천명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고, “임시정부 승인도 이와 동시에 혹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¹²⁾

태평양전쟁협의회가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결정을 발표하자 송자문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무부 극동국은 “한국에만 국한된 그러한 성명은 실속이 없으며 또한 시기적으로도 성명을 공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극동국은 인도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필리핀 군도와 한국의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¹³⁾ 4월 13일 국무장관대리 웰즈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송자문의 제안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당장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1) 한국군의 조직과 무장을 촉진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2) 중국·영국과 협의하여 모든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독립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 3) 더 적절한 시기까지 임시정부의 승인과 장래 한국의 독립에 관

9)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55-56쪽

10)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56쪽.

11) 중국은 ‘태평양군사회의’라고 불렀다.

12) White House Memorandum for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1942.4.8.

13) Memorandum, 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 1942.4.11.

한 일체의 선언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7월 23일 ‘전쟁과 인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은 피압박민족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밝혔다. 한국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 연설은 결과적으로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 열망에 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제시해 주는 회답용으로 활용되었다. 아래의 헐장관의 연설은 독립할 능력과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국가로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미국 건국 이래의 기본방침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우리는 인종·피부색·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나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민족들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늘 믿어 왔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 우리는 자유에 따르는 의무를 스스로 떠맡으려고 준비함으로써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그러한 자유를 열망하는 모든 민족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항상 노력해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그들 스스로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고 자유를 준비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든 민족들이 자유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모든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과거에도 우리의 목적이었으며 미래에도 우리의 목적이 될 것이다.¹⁴⁾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가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41년 10월 14일 외교부 고위관리들이 모여 ‘한국문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치·군사·경제 등 임시정부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¹⁵⁾ 이어 중국은 1941년 11월 15일 「한국광복군구개준승(韓國光復軍九個準繩)」을 임시정부에 요구하여 11월 19일 승인을 받아냄으로써 광복군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장악했다. 이처럼 광복군이 중국군에 편입된 것은 전후(戰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야욕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임시정부가 중국정부로부터 정무비, 당무비, 군비(軍費), 교민생활비 등 일체의 경제원조를 제공받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이후 중국정부와 임시정부간에 임시정부 승인 및 재정지원 확대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민간측이 먼저 제기하였다. 1941년 11월 17일 최고의 민의기구인 국민참정회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정부가 한국의 復國운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당한 시기에 정식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3·1운동 이후부터 한국독립을 지지하던 중국 인사들이 성심으로 제창하던 내용을

14)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II*, p.642;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66쪽.

1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중국 외교부의 한국문제토론회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2008, 10-12쪽.

계승한 것이다. 또한 국민참정회는 1942년 2월 자유한국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여 한국인의 국권회복운동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청원서를 중국정부에 제출했다.¹⁶⁾

1942년 3월 22일 중국정부내 유력인사인 입법원 원장 孫科(손문의 아들)가 동방문화협회 주최 강연회에서 ‘한국독립문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원조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하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4월 1일 미국에 체류중이던 송자문 외교부장은 장개석 위원장에게 미국과 중국 두 나라만이라도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선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임시정부 승인 문제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¹⁷⁾ 4월 2일 외교부가 임시정부 승인문제 검토 보고서를 올리자 장개석은 ‘緩’(늦출것)이라고 서명하고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렸다.¹⁸⁾

4월 6일 손과 원장이 임시정부 성립 23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외교부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제안서를 최고군사위원회(위원장 장개석)에 올렸다. 이에 고스 주중미국대사는 중국의 그러한 움직임이 영국과 소련을 자극할지 모른다고 우려하였다. 4월 9일 장개석은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며, 미국과 사전교섭을 마치거나 최소한 중국의 결정을 사전에 미국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했다.¹⁹⁾ 장개석이 미국을 의식한 것은 당시 미국이 중국정부가 임시정부에 대한 즉각적 승인조치를 취하지 못하게끔 단념시키려고 애썼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옹호하는 것과 임시정부같은 한국의 특정단체를 승인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4월 16일 송자문 외교부장이 루스벨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태평양군사회의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중국의 장개석에게 전보로 보고했다. 루스벨트는 송자문에게 “인도문제가 해결되면 임시정부를 정식 승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인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본세력이 창궐하는 시점에 어느 일국이 임시정부를 단독으로 승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이 문제를 중국측의 결정에 맡기겠으니, 적당한 승인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자”라며 손과 등 중국내 일부 친한인사들의 임시정부 승인요구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미국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²⁰⁾

4월 25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견을 연구해 보고하라는 장개석의 전문에 따라 보고서를 올렸다. 여기서 외교부는 “영국이 인도문제를 해

16)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국민참정회가 건의한 자유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식승인안 문제」, 92-96쪽.

17) 호춘혜 저, 신승하 역,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단국대 출판부, 1978, 268쪽.

18)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102-103쪽.

19)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48-50쪽.

2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51-54쪽.

결한 후 한국독립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루스벨트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앞장서서 한국독립을 승인해주는 문제는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한국독립을 승인할 적당한 시기가 언제인가를 면밀히 주의하여 연구한 다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보고드리겠다”고 하였다.²¹⁾

7월 20일 중국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는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장 王寵惠, 중앙당 비서장 吳鐵城 등 최고전문가 7인으로 전문소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문제를 처리토록 하였다. 8월 1일 열린 제1차 전문소위원회는 1) 한국에 관한 최고지도원칙은 군사위원회가 작성한 방안에 따르며, 2)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원칙적으로 타국보다 먼저 승인하지만 시기는 정부가 결정하여 택하며, 3) 임시정부 승인을 표면화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단지 하나의 단체로 승인하며, 4) 한국독립단체에 대한 차관은 관대·자유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등 4개항을 결의했다.

8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전문소위원회는 임시정부 지원방법과 경비문제, 한국독립단체 지도기관의 통일화문제, 임시정부 승인문제 등 3가지를 논의했다. 그 결과 3가지를 결의했는데, 제3항은 “적당한 시기에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그 시기는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결정케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의는 중국정부가 한국문제 처리를 위해 권한을 부여한 최고전문가들의 결의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소위원회의 결의는 8월 22일 군사위원회를 거쳐 장개석에게 전달되었다.²²⁾

10월 9일 장개석은 오철성에게 1) 한국문제는 전문소위원회의 다수가 협의 처리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 2) 타국보다 먼저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확정할 것, 3) 한국 내부 당쟁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말고 하나의 정당만을 고집하지 말고 원조한다는 요지를 참고할 것,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독립역량이 있는 모든 독립단체에 제공할 것 등을 지시했다. 전문소위원회는 장개석의 지시를 근거로 「扶助朝鮮復國運動指導方案」을 작성한 후 장개석의 결재를 거쳐 12월 27일부터 시행하였다.²³⁾

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扶助朝鮮復國運動指導方案」은 “적당한 시기에 타국보다 먼저 임시정부를 승인하며 그 수속과 유리한 시기는 책임자가 총통에게 건의하여 총통의 지시로 외교부가 처리하며, 한국광복군은 잠시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는 해방 전까지 중국의 대한외교의 기본방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문건이었다. 비록 장개석이 10월 11일 중한문화협회 창립대회에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축사를 보내기는 했지만,²⁴⁾ 이 시점에서 중국의 대한외교의 기본방침은 임시정부 승인을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2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보류 지시에 관한 외교부의 의견」, 105쪽.

22) 호춘해 저, 신승하 역,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93-96쪽.

23) 호춘해 저, 신승하 역,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98-99쪽.

24) *New York Times*, 1942.10.12.

1942년 12월 15일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송자문 외교부장에게 2가지를 통보했다. 첫째, 중국 경내에서 활동중인 한국혁명세력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둘째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다른 나라에 앞서 중국정부가 가장 먼저 승인하기로 원칙적인 결정을 보았으며,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경우 선언 공포 시기는 총통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에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임시정부를 승인하되, 적절한 시기를 강구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보았다.²⁵⁾

1943년 들어서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는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지지하는 이승만과 친이승만 단체나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거부하는 한편, 중국정부에게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표면적으로 국무부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기초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을 수정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미국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 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행동에 나서주기를 바랐다. 이때 중국정부는 대일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권고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1943년 3월 12일 워싱턴의 송자문 외교부장이 “중국은 한국이 독립되기를 바라지 병탄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관리들은 일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²⁶⁾ 그러나 사실은 3월 29일 송자문과 웰즈 국무차관 간에 오고간 대화내용에 따르면, 당시 미·영·중 3국 간에는 전후 한반도 독립과 신탁통치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삶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국을 신탁통치하에 두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립을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었다.²⁷⁾

4월 17일 주미중국대사 魏道明이 미국정부가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국무부에 질의하면서 협상을 시도했다. 5월 12일 벌(Adolf A. Berle) 국무차관보는 위대사와의 면담에서 “특정 국가의 임시정부를 승인하면 다른 국가의 임시정부 승인요청이 쇄도할 것이며, 한국임시정부가 과연 한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구상하고 있지만, 한국임시정부의 승인문제는 당분간 보류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위대사는 “중국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이같은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한 한국임시정부 승인 사안을 당분간 현상태대로 보류하는데 찬성한다”고 하였다.²⁸⁾

벌차관보와 위대사의 면담내용은 사실상 미국정부와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25)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5:중국의 인식』, 54쪽.

26) *New York Times*, 1943.3.13.

27)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 (Hamilton)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3.4.22., *FRUS, 1943, Vol. III*, p.1090; 이완범,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 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114쪽.

28)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Assistant Secretary Berle, 1943.5.12.

었다. 처음에 위대사의 면담제외에 국무부 극동국은 이를 받아들이자고 할 국무장관에게 제안했고, 헝장관은 이를 승인해 주었다. 위대사는 장개석의 최측근으로 위싱턴에 체류하며 중미관계를 조율·협의해온 송자문의 지시를 받아가며 활동한 인물이었고, 장개석의 부인이자 최고의 정치고문인 송미령이 1942년 11월 26일부터 1943년 7월 4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루스벨트와 여러 차례 회담을 하였기 때문에 위대사의 주장은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나 다름없었다.²⁹⁾ 따라서 카이로회담 개최가 본격 논의되기 직전 미국과 중국의 한국독립 및 임시정부 승인에 대한 기본입장은 그 문제를 유보한다는 것이었다.

1943년 6월 30일 루스벨트 대통령이 장개석 군사위원장에게 전보를 보내 회담을 제안했다. 7월 8일 장개석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제의한 회담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카이로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들이 카이로에서 만나기로 한 것은 카이로가 미국과 중국이 중간지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대일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전후 소련의 영향력 확대방지를 위해서 중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협상대상국 자격으로 카이로회담에 참가하는 경우 국제적 지위가 승격된다는 점에서 회담에 거는 기대가 컸다.³⁰⁾ 특히 중국은 예비의안을 매우 상세히 작성했을 정도로 회담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당시 미국은 1943년에 들어서 태평양전쟁의 흐름이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이전의 입장을 완화하여 탄력적인 대한정책을 강구했다. 10월 2일 국무부 정책입안위원회는 한국독립문제를 논의한 후 “한국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으로서 연합국이 한국의 특정단체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한국이 자유독립국이 될 권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주는 선언을 하자”는 방안을 국무장관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정책입안위원회는 “그렇게 하나면 연합국이 대서양현장의 원칙을 한국에도 적용하려고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한 그 해결책이 ”한국인들이 장래 어느 시기에(at some future time) 완전한 독립을 준비하는데 연합국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지게 한다”는 점을 넘기지 않시켰다.³¹⁾ 이러한 건의는 한국을 독립시켜주되 신탁통치를 상정했던 카이로 회담 당시 루스벨트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³²⁾

11월 19일 카이로로 향하는 신예전함 아이오와(Iowa) 함상에서 루스벨트와 군수처부는 합동기획참모부가 작성한 카이로회담 의제 시안을 중심으로 제반 문제를 검토했다.

29) 장개석은 루스벨트에게 보낸 1942년 11월 16일자 전보에서 “송미령은 부인일 뿐 아니라 15년간 생사와 환란을 함께한 동지이니, 일체의 외교업무를 송미령과 솔직담백하게 논의하고, 장개석을 만나는 것 같이 송미령을 대우해 달라”고 하였다.

30)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147쪽.

31)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75-76쪽.

32) 10월 5일 카이로회담 준비모임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탁통치 가능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는 “세계의 많은 부분을 국제신탁통치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과 “여러 가지 상이한 신탁통치안을 식민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참모들에게 말했다. “Talk with FDR, Meeting at the White House,” 1943.10.5; 이완범,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112쪽.

이때 시안 A의 ‘소련의 참전과 중국의 태도’라는 조항에 이르러 마샬(George C. Marshall) 육군참모총장은 이 문제를 장개석과 토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루스벨트는 “중국은 외몽고에서 소련과 동등한 권리를 원한다. 장개석은 만주를 반환받기를 원한다. 이 항목의 토의는 틀림없이 분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유지역(free zone) 방식으로 처리될지 모른다. 장개석은 한국에 대하여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신탁관리국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원한다”고 답변했다.³³⁾ 루스벨트의 발언은 국무부 정책입안위원회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이기는 했으나 한국을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의 시행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근본의미는 동일한 것이었다.

중국이 카이로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한 것은 11월 10일 이후였다. 이때 중국 군사위원회 참사실과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청은 전후처리와 정치문제를 담당하고, 미국의 스틸웰(Joseph W. Stilwell) 중국戰區 참모장은 대일작전에 관한 군사문제를 담당했다. 군사위원회와 국방최고위원회는 각기 장개석에게 중국측의 입장을 반영한 자세한 보고서를 올렸는데, 여기에는 한국독립을 승인해야 한다는 항목들이 들어있었다. 이중 최고국방위원회가 올린 「전시정치합작방안」에 담긴 한국독립문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미·영·소는 즉시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거나 조선의 전후 독립을 보장당하는 선언을 발표한다. 기타 연합국가는 동일한 보조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설명: 조선의 독립을 즉시 승인하거나 혹은 전후 조선의 독립을 보증하는 것에 관하여,

소련은 현재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그것을 표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은 인도문제에 끼칠 영향으로 인해 이에 대해 틀림없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소련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정형하에서 만일 중국이 단독으로 승인한다면 앞으로 세계인과 더불어 동맹국가로서 분열되는 나쁜 인상을 줄 것이니,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단점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소련의 충돌이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 소련정부가 혹여 우리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면 소련이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소련보다 먼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아울러 현재 중경에 있는 조선혁명정부와 관계를 발생시킨다면 앞으로 소련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해도 조선정부와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는 불편한 것이 있다. 이것이 단독으로 승인하는 이점이다.

33) U.S. Department of State, “Minutes of the President’s Meeting with the Joint Chiefs of Staff,” 1943.11.19, *FRUS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1943*, 1961, p.257.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독으로 조선혁명정부를 승인하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할 것이니, 적당한 시기에 먼저 승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³⁴⁾

위의 주장은 루스벨트의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주장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중국이 한국의 독립승인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이 대목은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어찌하여 루스벨트의 한국문제 발언에 적극 찬동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우선권을 차지하고자 타국보다 한국독립을 먼저 승인한다는 기본원칙을 카이로회담에서 그대로 실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11월 18일 장개석은 카이로회담 참석차 이집트로 가는 길에 인도 아그라에 머물렀을 때 다시 한국독립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루스벨트와의 회담에서 1) 국제정치 조직, 2) 원동위원회 조직, 3) 중·영·미 3국 연합참모단 조직, 4) 점령지 관리방안, 5) 버마 반공을 위한 총계획, 6) 조선독립, 7) 동북 및 대만의 중국 귀속문제 등 7가지를 논의할 방침이었다. 이때 한국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있는 여섯 번째였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중 양국은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한국독립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거듭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며, 그러한 고정을 거쳐 카이로회담 직전에 양국은 한국을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는 제한적인 독립허용구상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카이로회담 당시에 갑작스럽게 안출된 것이 아니라 진주만사건 이후 거의 2년 간에 걸친 미·중 양국간의 한국문제 해결방안 마련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2) 카이로회담 당시 미·중 양국의 한국독립조항 작성과정

카이로회담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열렸다. 11월 22일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의가 열렸고, 11월 23일 오전 11시에 미·영·중 3국 정상과 주요 참모들이 배석한 본회의가 열렸다. 루스벨트 숙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영국의 마운트배튼(Lord Louis Moundbatten) 경이 버마작전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의 대일작전을 설명하자 장개석과 처칠이 그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로써 역사적인 카이로회담의 막이 올랐다. 이날 오후 3국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연합참모회의가 열려 회담을 이어갔다.

카이로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경우 3국 정상이 모두 모인 것은 3번, 미·영회담 2번, 미·중회담(11.23, 11.25) 2번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열린 연합참모회의의 경우 3국이 모두 참석한 회의는 2번뿐이고, 미·영이 참석한 회의가 3번이었다. 사실 중국측이 참가한 2

34) 秦孝儀 主編, 「戰時政治合作方案」,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1943.11, 504-505쪽;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41쪽.

3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5:중국의 인식』, 「蔣介石일기 중 한국관련 부분」, 288쪽.

번의 연합참모회의도 미·영 양국이 주도했다. 중국은 미국에 군사원조를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회담에서 군사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없었다. 또한 영국이 미국과 유럽 전선문제를 주로 논의하려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이 배제되었다. 이처럼 카이로회담은 미·영·중 3국의 정상회의와 연합참모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³⁶⁾

카이로회담 당시 한국독립문제와 관련된 쟁점은 2가지이다. 하나는 11월 23일 저녁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에서 한국독립문제가 처음으로 연합국 정상간에 논의되었을 때 루스벨트와 장개석 중 과연 누가 그 문제를 먼저 제기했으며 루스벨트와 장개석은 한국독립에 대해 각기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만찬회동 직후에 루스벨트가 홉킨스(Harry L. Hopkins)에게 작성을 지시하여 홉킨스가 기초한 선언서(‘公報’) 초안의 한국독립조항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루스벨트와 장개석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만찬회동에서 논의된 한국독립문제부터 살펴보겠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회담 둘째 날인 11월 23일 저녁 8시 루스벨트 초청으로 열린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비공식 만찬회동에서였다. 이때 참석자는 미국측은 루스벨트와 그의 특별보좌관 홉킨스, 중국측은 장개석과 그의 부인이자 통역자인 송미령,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장 王寵惠 등이었다. 통역을 거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만찬회동은 밤 11시가 되어야 끝났다.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만찬회동은 연합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한국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戰後 한국독립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이때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대담내용은 미국측 자료에는 남아있지 않고 중국측 자료에만 남아있다. 미국은 양국 정상이 비공식 만찬회동을 가졌기 때문에 회담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중국측은 「국방최고위원회 비서장 왕충혜가 중경에서 蔣위원장에게 올린 카이로회담에 관한 일지」(이하 「카이로회담일지」), 중국이 공동성명초안기초위원회에 참고하라고 홉킨스에게 보낸 「중국정부의 메모」(Memoranda of the Chinese Government), 그리고 「장개석일기」를 남겼다. 이들 문서는 장개석이 만찬회동 종료 직후에 그리고 왕충혜가 카이로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작성한 것이다.³⁷⁾

현전하는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 관련문건은 중국측 자료집에 실려있다. 이중 「카이로회담일지」와 「중국정부의 메모」는 미국무성 자료집에도 실려있는데, 이는 원래 미국측 문건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무성에 전달한 것이다. 1956년 국무성의 *FRUS, Cairo*

36)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155-156쪽.

37) 「카이로회담일지」와 「중국정부의 메모」는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527-528쪽; 이 문서의 영역본은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 Chinese Summary Record, Translation, Nov. 23, 1943, 8 P.M., Roosevelt's Villa,” *FRUS*, pp.323-325에 실려있고, 「장개석일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5:중국의 인식』, 「蔣介石일기 중 한국관련 부분」, 288-289쪽에 실려있다.

and Tehran 편집자는 카이로회담 기록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기록이 없음을 알았다. 이에 편집자는 카이로회담 때 선전부 부부장으로 참가한 董顯光 위싱턴 주재 자유중국대사에게 자료를 문의했다. 이에 따라 자유중국정부가 중국어로 작성한 루스벨트-장개석 대담요약문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왔고, 이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전달했다. 국무성은 이를 “중국측이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영어로 번역해 보낸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FRUS, Cairo and Tehran*에 수록했다.³⁸⁾

그런데 만찬회동 관련자료에 대해 “중국측이 영역하여 미국무성에 전달한 「중국정부의 메모」와 「카이로회담일지」는 미국의 공식문서에는 없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문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된 듯한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장개석의 방문을 받고 루스벨트가 먼저 한국독립을 강하게 말했거나 그런 분위기로 말하자 중국측은 마지 못해 이런 취지로 수용하면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와있다.³⁹⁾ 이는 중국측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장개석과 김구만이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영향을 끼쳤다는 기왕의 학설을 비판하려는 것이다.⁴⁰⁾ 그러나 아래서 논급한 것처럼, 이들 자료에는 중국측에 불리한 대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이 관련자료들을 날조하거나 분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개석일기」와 「카이로회담일지」에 의하면,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에서 10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다. 이 10가지는 만찬회동에 동석했던 두 사람이 만찬회의 직후에 혹은 카이로회담 종료 후 수일 후에 작성한 것이다. 이 두 자료에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만찬회의 직후에 바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작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개석일기」는 솔직하게 기술한 개인일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카이로회담일지」보다 10일 정도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된 내용들은 사소한 오류나 과장은 있을지언정 분식이나 날조는 없다고 판단된다.

<표> 미·중 양국의 만찬회동 협의내용 비교

	「카이로회담일지」	「장개석일기」
1	중국의 국제적 지위문제	일본의 국체(천황제) 문제
2	일본 천황제 문제	소련공산주의와 제국주의 경계문제
3	일본의 군사점령 문제	동북 4성,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탈취 영토의 반환문제
4	전쟁배상 문제	중국 손실에 대한 일본의 배상문제
5	일본 점령 영토반환 문제	신강과 그 지역에 대한 투자문제
6	군사협력문제	소련의 대일작전 참가문제

38) 정일화, 『카이로선언』, 71, 478쪽.

39) 정일화, 『카이로선언』, 73, 481, 488쪽.

40) 중국자료를 영역할 때 장개석의 직함을 ‘국방최고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총통(Generalissimo)’으로 번역했는데, 이는 1956년 장개석이 중화민국 총통 재임시에 번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한국·인도차이나·태국 문제	한국독립문제
8	중국에 대한 경제원조 문제	중미 연합참모회의 조직문제
9	외몽고와 탄누 투바(tannu Tuva) 반환 문제	베트남 독립문제
10	미·중 통합사령부 구성 문제	여순 군항의 반환과 중·미 공동 여순군항 사용문제

「카이로회담일지」와 「장개석일기」의 만찬회동 관련내용을 비교해 보면, 카이로회담은 군사회담을 목적으로 출발했으나 실제로는 정치회담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카이로회담에서 군사문제로는 연합군의 버마작전문제나 유럽전선에서 연합군간의 협조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군사회담을 위해 참가한 영국은 카이로회담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회담의 주역은 미국과 중국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국의 영토환수문제나 일본의 배상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미·중 양국이 카이로회담에서 대일작전문제와 전후처리문제에 초점을 맞췄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카이로회담의 중국측 자료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모두 한국을 독립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의사나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누가 먼저 그러한 의사를 표명했으며, 그러한 의사에 어떤 단서를 달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관해 현존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 「카이로회담일지」 : 장개석은 루스벨트와 만찬을 갖기 전인 11월 23일 오후 왕충혜와 외교부 참사 郭斌佳가 카이로회담에서 중국의 토의주제로 설정한 ‘극동문제에 관한 질문’ 4개항을 염두에 두었다. 1) 4국(미·영·소·중·필자) 또는 연합국의 기구설립에 관한 문제, 2) 과도기간의 국제안전에 관한 문제, 3) 독일의 항복에 관한 문제, 4) 원동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4개항은 중국측이 준비한 정치문제에 관한 주요의제였다. 왕충혜는 장개석이 이러한 방침에 따라 루스벨트와 회담을 벌여 아래와 같은 3개항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제3항에서 미국과 중국이 일본 패망 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기로 약조했던 점이 주목할 만하다.

1. 일본이 탈취한 중국의 영토는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
2. 태평양에서 일본이 강점한 도서(島嶼)들은 영구히 박탈해야 한다.
3. 일본이 패망한 후 조선은 자유와 독립을 획득해야 한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후 일본의 중국公私재산을 중국정부가 완전히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 찬성을 표시했다. 그러나 어떻게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재건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쌍방이 양해하기로 하고, 중·미 양국은 조선 인민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기로 한다.⁴¹⁾

(B) 「중국정부의 메모」 : 11월 23일 만찬회동 직후에 ‘공동성명초안기초위원회’가 참고용으로 홉킨스에게 보낸 「중국정부의 메모」이다. 이는 11월 23일 오후 왕충혜와 외교부 참사 郭斌佳가 카이로회담에서 중국의 토의주제로 설정한 ‘극동문제에 관한 질문’ 4개항 중 마지막 조항의 부속구절이다. “중국, 영국, 미국은 戰後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한국독립의 인정을 위한 협정에 소련이 참여한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China,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agree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Korea after the war. The adherence of the U.S.S.R to this agreement for the recognition of Korea's independence is welcomed at any time.)⁴²⁾

(C) 「카이로회담일지」 : 왕충혜가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의 협의사항으로 정리한 10개항 중 제7항이다. “한국, 인도차이나, 태국문제에 관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한국, 인도차이나 및 태국과 같은 식민지에 대한 장래 지위에 관해 상호이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개석 총통은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허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President Roosevelt advanced the opinion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reach a mutual understanding on the future status of Korea, Indo-China and other colonial areas as well Thailand. Generalissimo Chiang stressed on the necessity of granting independence to Korea.)⁴³⁾

(D) 「장개석일기」 : 11월 23일 장개석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대담을 마친 후 대담내용 10개항을 일기에 적어놓았는데, 이중 제7항이다. “루스벨트가 조선의 독립문제를 중시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문제를 거론하며, 조선 인민이 속히 독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 주기를 청하였다.”(時夜與羅斯福總統商談後記.” 朝鮮獨立問題 余爲此事特別注重引起羅氏之重視 要求其贊助余之主張 使朝鮮人民達成獨立之目的).⁴⁴⁾

이상에서 열거한 4가지 한국독립 관련사료들은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 직후 및 약 10일 후에 작성된 것이다. 이중 (A)는 미·중 양국 정상이 일본이 패망할 경우 일본이 차지한 만주와 대만을 비롯하여 태평양의 도서들까지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후 한국을 자유 독립국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사료이며, (B)는 미·중·영이 한국독립을 인정하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중국정부 입장을 언급한 사료이며, (C)는 루스벨트가 한국독립문제를 미·중이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장개석이 여기에 동의하면서 “한국

41)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3)』,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 黨史委員會, 1981, 528쪽; 조덕천, 「카이로회담의 교섭과 진행에 관한 연구」, 158쪽.

42) 정일화, 『카이로선언』, 481쪽.

43) 정일화, 『카이로선언』, 480쪽. 카이로선언의 한국문제에 관해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다.

44)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사료」, 538쪽.

의 독립을 허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사료이며, (D)는 장개석이 루스벨트에게 한국독립문제를 중시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중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료이다.

위의 사료들을 토대로 만찬회동에서 한국독립문제를 누가 먼저 제기했는가 하는 문제를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A)·(B)는 양국간 협의사항이나 중국측 입장을 수록한 것이다. (D)는 장개석이 루스벨트에게 조선독립문제에 힘써 줄 것을 거론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는 장개석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루스벨트 주장에 대해 장개석이 당부와 요청을 덧붙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강하여 인용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료와 달리 (C)는 루스벨트가 의견을 제시하고 장개석이 그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루스벨트가 먼저 한국독립문제를 제기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해서 만찬회동에서 한국독립문제는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루스벨트가 먼저 제기하고 장개석이 그에 호응하여 다소 적극적인 당부와 요청을 곁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두 정상은 이런 정도의 대답을 나누는 수준에서 한국문제 논의를 마친 것으로 판단한다.

만찬회동 당시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발언을 살펴보면, 한국독립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입장은 중요 사료에서 차이가 난다. (C)는 루스벨트가 한국의 ‘장래 지위’에 관해 상호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장개석이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독립을 허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였다. 이는 장개석-김구의 역할만을 강조해온 기왕의 연구와 달리 장개석이 한국의 완전독립을 먼저 주장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찬성했음을 입증해줄 뿐 아니라,⁴⁵⁾ 이로 인해 미·중 정상간 전후 한국독립문제에 관해서 이견이 약간의 생겼음을 보여준다. (D)는 장개석이 루스벨트에게 조선의 독립문제를 중시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여 한국독립을 중시한 것을 장개석 자신의 각별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C)와 (D)에 나타난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주장들로 미루어 만찬회동 당시 루스벨트나 장개석이나 자국의 국가이익이나 국제역학을 참작한 상태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제기·논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개석이 ‘한국독립을 허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대목은 아마도 중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주되 한반도를 속지로 만들려는 영토야욕을 노정한 구절이라고 판단된다. 미·중 정상은 카이로회담 준비단계에서 일본 패망 후 한국을 독립시켜주되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문제에서 이미 암묵적으로 동의를 이룬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한국문제를 논의하였고, 이때 장개석이 한국에 대해 영토야욕을 나타내는 것을 루스벨트가 경계하면서 양자간에 약간의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유명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58쪽.

장개석이 주장한 ‘한국독립을 허락할 필요성’에 관해 루스벨트는 만찬회동 다음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그는 양국 참모들이 배석한 처칠과의 공식회담에서 “전날 장개석을 만나 이야기했을 때 그는 토의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 같았다. 특히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만주와 한국의 재점령을 포함한 광범한 야망(wide aspirations)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⁴⁶⁾ 루스벨트의 공개발언으로 인해 “장개석은 만찬회동 당시 한국독립을 지지하기보다는 옛 영토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식으로 한국의 점령의사를 밝혔으며, 따라서 카이로회담 당시 장개석의 기여도는 그가 회담에 참석함으로써 한국문제 토의를 가능케 만들었다는 점에 불과하다”며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에 끼친 장개석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주장이 나와있다.⁴⁷⁾

그러나 루스벨트-장개석 만찬회동 당시 장개석이 한국독립문제에 관한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의사표시를 했던 사실은 복수의 기록에서 확인되느니만큼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만찬회동 이후에 장개석이 직접 기술한 일기에 루스벨트와 나눈 대담내용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적어놓았고, 이중 7번째 항목에 한국독립문제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장개석과 루스벨트 간에 한국독립문제가 논의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루스벨트가 처칠과의 회담에서 장개석의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지적한 것을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불인정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중국이 한국독립을 당연시한 다음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에 대해 영토야욕을 나타낸 것을 루스벨트가 경계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만찬회동 후부터 카이로선언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나타난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입장을 알아보겠다. 11월 23일 만찬회동 후 루스벨트는 홉킨스 보좌관에게 토론 내용에 의거해 선언문(‘公報’)을 기초하라고 지시했다.⁴⁸⁾ 당시 카이로선언문의 최초 작성을 장개석이 왕충혜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루스벨트가 홉킨스에게 지시한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는 루스벨트가 만찬회담을 주도하였고 결들여 한국독립 논의도 루스벨트가 주도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에게 군사원조의 확대와 영토환수문제의 협조를 요청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1월 24일 오후 홉킨스는 백악관 문서기록관인 코르넬리우스(Albert M. Cornelius) 해군준위에게 선언문 초안을 불러주며 타이핑하게 하였다. 홉킨스는 타이핑본을 일부 수정하여 초안을 작성했다. 이 초안에 “우리는 한국인이 일본에 의해 반역적인 노예상태에 놓인 것을 명심하면서 일본 패망 후 한국을 ‘가능한 가장 빠른 순간에’ 자유롭게 독립된

46) 정일화, 『카이로선언』, 73, 484쪽. The President said...It seemed that the Generalissimo had been well satisfied with the discussion held the previous day. There was no doubt that China has wide aspirations which included the re-occupation of Manchuria and Korea.

47) 정일화, 『카이로선언』, 71-74, 483-384쪽.

48)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8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5:중국의 인식』, 「蔣介石日記」, 289쪽.

나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라는 한국문제조항이 수록되었다. 이처럼 홉킨스가 카이로 회담 선언문을 기초하면서 루스벨트와 상의도 없이 한국독립조항을 집어넣은 것은 루스벨트와 홉킨스가 카이로회담 이전에 한국독립문제에 관해 일정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홉킨스는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일부 수정한 후 공동선언문 초안을 루스벨트에게 제출하였다.⁴⁹⁾

루스벨트는 홉킨스가 작성한 공동선언문 초안의 내용 자체는 고치지 않았다. 다만 그는 5곳 정도 문장을 수정하고 가필했다. 이중 한국과 관련된 구절이 2군데였다. 하나는 한국독립문제를 중국문제에 뒤이어 같은 단락에서 서술하지 말고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라고 표시한 것이다. 이는 루스벨트가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독립조항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possible earliest moment)’를 ‘적절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로 바꾼 것이다. 이는 한국에 대해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구상했던 루스벨트의 기본입장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중국·영국·소련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홉킨스가 기초하고 루스벨트가 수정한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중국과 영국의 재검토를 거쳐야 했지만, 그럼에도 국제간 선언문에서 한국독립문제를 처음으로 거론한 문구라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카이로회담 당시 장개석-김구의 역할만을 강조해온 기왕의 연구를 비판하고 루스벨트-홉킨스의 역할을 새로이 강조함으로써 카이로회담 한국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논급했다.

한국독립이 카이로선언에 들어간 것은 의외였다. 신비스럽기조차 한 것이다. 선언서 초안을 구술한 홉킨스는 아무런 참고문헌이나 루스벨트가 내린 지침 같은 것을 전혀 갖지 않은 채 문장을 작성했던 것인데, 왜 한국독립을 카이로선언에 넣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정황적으로만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독립문제가 정식 의제로 거론된 바도 없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홉킨스가 한국문제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⁵⁰⁾

위의 주장은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간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점에서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2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첫째는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간 것은 매우 갑작스럽거나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라 진주만사건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미·중 양국 정부가 한국임시정부 승인문제와 한국독립문제를 고려·조율하다가

49) 정일화, 『카이로선언』, 30-34쪽.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50) 정일화, 『카이로선언』, 36쪽.

카이로회담 직전쯤에 이르러 한국을 독립은 시켜주되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던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는 루스벨트나 홉킨스가 한국문제에 관해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주만사건 이래 중경의 김구가 임정요인들과 함께 친한파 중국인들과 연대하여 중국정부에 한국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을 청원했던 것처럼, 워싱턴의 이승만은 자신이 일기당천으로 분투하는 가운데 친한파 미국인 명사들과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였고, 이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로 하여금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을 넣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11월 24일 오후 4시경 루스벨트 수정안이 홉킨스를 통해 송미령을 거쳐 장개석에게 전달되었다. 장개석은 루스벨트 수정안에 대해 도서의 명칭에 오류가 있다는 사소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전체적으로 만족을 표시했다. 장개석은 자신의 일기에서 “미국대표가 루스벨트 총통이 작성한 초안을 가지고 와서 부인에게 건네며 내 뜻을 물었다. 나는 그 안의 모든 사항이 완전히 전날 밤 내가 루스벨트 총통한테 제기한 요지 그대로임을 알고 마음속 깊이 루스벨트가 중국을 대하는 성심성의를 자세와 정신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⁵¹⁾ 또한 11월 25일 왕충혜는 루스벨트 숙소에서 3국 정상과 수행원들의 단체사진을 찍은 후 홉킨스를 만나 중국은 루스벨트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⁵²⁾

“적절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 한국을 자유독립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루스벨트의 장래독립구상은 기본적으로 신탁통치를 전제로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개석은 즉시독립론을 제기하지 않고 전날 밤 루스벨트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일체의 이의나 반대도 없이 루스벨트의 제안에 찬동을 표했다. 오히려 일기에서 장개석은 루스벨트가 자신의 제안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칭송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보면 카이로회담 당시 장개석은 김구·조소앙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즉시독립을 루스벨트에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구상했던 루스벨트와 장래독립구상에 동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강조해온 기왕의 연구는 절반의 타당성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11월 26일 오후 3시 반경 왕충혜 국방위원회 비서장, 캐도건(Alexander Cadogan) 영국 외교차관, 해리먼(William A. Harriman) 주소미국대사를 비롯해 3국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때 캐도건이 루스벨트 수정안에 대해 4가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중 3번째가 한국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였다. 캐도건은 한국독립조항 중에서 “하나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한다”는 구절을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구절로 수정하

51)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사료」, 538-539쪽. 루스벨트 수정본의 중국어본은 다음과 같다. “日本對朝鮮人民之奴隸待遇 吾人初未忘懷 日本潰敗後 於適當時期 吾人決定使朝鮮成爲一自由獨立之國家.”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9쪽.

52)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秘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29쪽.

자고 주장했다.⁵³⁾ 이는 1902년 영일동맹 이래 일본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영일의 특수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임과 동시에 한국독립이 인도독립을 고취할 기폭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왕총혜가 “한국은 원래 일본의 침략으로 병탄되었고, 일본의 대륙정책은 한국을 병탄하 데서 시작된 것이다. 단지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한다고만 하고 기타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문제를 남길 뿐이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캐도건이 한국독립문제를 완전히 빼버릴 것을 주장하여 중국과 영국 간에 대립이 벌어졌다. 그러나 해리스가 한국독립문제에서 소련은 아무 관계가 없고 소련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며 왕총혜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결국 3인은 루스벨트 수정안을 유지하자는데 동의하고, 또한 미·영·중 3국은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다는 구절을 추가하기로 하였다.⁵⁴⁾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왕총혜가 전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의미하는 ‘적절한 시기에(at the proper moment)’라는 구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1월 26일 오후 4시 15분 이든(Anthony Eden) 영국 외상이 도착하여 처칠 수상의 가필 수정본을 제시했다. 처칠본은 루스벨트 수정안의 어색한 문장을 유려한 문장으로 바꾸고, 단어수를 축약하여 간명하게 만들었다. 이때 한국문제조항은 ‘일본에 의한 한국인의 기만적 노예상태’를 ‘한국인의 노예상태’로, ‘적절한 시기(proper moment)’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로, ‘자유와 독립의 국가’를 ‘자유와 독립’으로 축약했다. 이로써 한국독립조항의 최종본은 “위의 3대 강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로 낙착을 보았다. 이중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라는 구절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상정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독립시점과 독립방법에 대해 루스벨트 수정안보다 모호성과 불투명성이 강화된 것이었다.

11월 26일 카이로선언이 채택되었으나 바로 발표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영국이 테헤란에서 소련의 스탈린(Iosif V. Stalin)과 함께 3거두(‘Big Three’) 회담을 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테헤란회담(11.28-12.1) 중 스탈린은 처칠에게 카이로선언과 그 모든 내용을 전폭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은 당연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능력이 생길 때까지 강대국의 보호를 상정한” 제한적인 독립승인서인 카이로선언이 미·영·소·중의 동의를 거쳐 12월 1일 공포되었다.⁵⁵⁾

53)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0쪽.

54) 秦孝儀 主編, 「國防最高委員會祕書長王寵惠自重慶呈蔣委員長關於開羅會議日誌」(1943.11), 531-532쪽.

55)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76-77쪽. 1944년 1월 12일 루스벨트는 1) 스탈린이 카이로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찬동했으며, 2) “한국민은 아직 독립정부를 조직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으므로 40년간 후견정치(tutelage) 아래 두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스탈린이 동의했다는 사실을 태평양전쟁협의회에 통보하였다.

3.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에 끼친 한국 독립운동세력의 역할

1) 김구와 임정 요인들의 공헌

진주만사건으로 미일전쟁이 일어나자 재중한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復國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는 김구 주석과 조소앙 외무부장 명의로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여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상태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과 공동으로 항일전쟁을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김구는 郭泰祺 외교부장에게 공한을 보내 한국의 독립과 전세계 약소민족의 완전한 해방은 중국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⁵⁶⁾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임시정부는 미·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활동과 한국독립 요구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임정 요인들은 1) 장개석 위원장과 유력 정치인과 고관에게 편지나 문건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 면담을 가졌으며, 2) 친한파 중국인 명사들에게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며, 3) 한중우호단체를 결성하여 대규모 기념행사를 통해 한국문제를 선전하고 단체임원들에게 중국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로비를 하게 하였고, 4) 임시정부 주미대표 이승만에게 임시정부가 미국에 보내는 청원서나 기타 공문서를 전달하게 하였다.⁵⁷⁾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시기에 미국의 이승만도 이와 거의 흡사한 방법을 구사하며 미국정부를 상대로 외교독립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1942년 2월 9일 김구는 「한국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節略」(1942.1.30)이란 문건을 중국 국민당 조직부장이자 장개석의 최측근인 朱家驊에게 보내며 장개석과의 면담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2월 11일 주가화는 이 문건을 장개석에게 올리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으나 장개석 면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문건은 임시정부가 진주만사건 후 중국정부에 제출한 임시정부 승인요청 문건 중에서 내용이 정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⁵⁸⁾

「한국임시정부 승인에 관한 節略」에서 김구는 임시정부 승인의 당위성을 상세히 논급했다. 1) 3천만 한인이 일본과 싸우기를 원하고 있으니 중국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임시정부를 도우면 한인의 총동원을 촉진하여 동양의 평화가 이룩될 것이며, 2) 1920년 손문이 임시정부 외무총장 申圭植으로부터 국서를 접수하고 외교총장 吳廷芳에

5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임시정부가 대일선전을 포고했음을 알리는 공함」, 130-131쪽.

57) 1939년 5월 24일 이승만이 워싱턴 중국대사관에 찾아와 중경의 김구와 연락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김구와 연락처를 알면 자신의 전보코드인 KORIC으로 소식을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이승만과 김구의 교류가 재개되었다.

5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139-140쪽.

게 한국독립운동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게 했던 전례가 있으며, 3) 임시정부를 정식승인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청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4) 중국내 한인 독립단체의 분열 때문에 중국이 임시정부 승인을 꺼리고 있으나 분파주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극소수 단체를 제외한 중국과 북미 각지의 단체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5) 소련이 태평양전쟁에 개입하고 적색분자들이 준동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⁹⁾

2월 14일 항일전쟁기 중국내 최고 민의기구이자 친한단체로 알려진 國民參政會의 정례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문제를 중국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참정회는 이미 1940년 5월 “대만과 한국의 혁명운동을 후원하여 적의 조속한 붕괴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중국 행정원에 요청했을 정도로 한국독립을 지지하고 있었다. 당시 건의자 중에는 친한파 친주교 신부이자 한국독립운동 후원자로 유명한 于斌 주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중국이 신속히 자유대한민국임시정부의 복국운동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적당한 시기에 한국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국민참정회는 국민당정부보다 중국 각계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 기구였기 때문에 중국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⁶⁰⁾

진주만사건 이후 중국내 한인들의 임시정부 승인 및 한국독립 지지운동은 중국 민간의 명망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에 친한단체에 가담하거나 공식·비공식 행사에서 한국지지를 표명하는 인사들이 나왔다. 이에 영향받아 중국 일반 인민들도 한국의 독립문제에 큰 호응과 동정을 표하였다. 1942년 3월 1일 강서성 上饒의 한국인들이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할 때 중국 내빈이 100여 명이나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한국문제에 대한 장개석정부의 유보적 입장과 달리 한국의 독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전통적으로 唇亡齒寒을 강조해온 한중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었다.

3월 1일 임시정부는 3·1절 32주년 기념행사를 임시정부 소재지인 중경에서 대규모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중국정부와 국민당 인사뿐 아니라 당시 중경에 있던 미·영·소의 외교관들도 참석했고, 중경 주재 주요 통신사와 신문사 기자들도 취재를 하였다. 이때 임시정부는 1) 한국의 독립, 2) 임시정부 승인, 3) 한국의 27번째 참전국으로서의 인정, 4) 워싱턴에서 개최된 대한인자유대회(2.27-3.1) 지지, 5) 중국의 항일전선 장병 위문 및 경의 표시 등을 결의했다.⁶¹⁾ 이 행사는 워싱턴에서 이승만이 조직한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가 주도한 대한인자유대회를 모방하여 개최한 것인데, 이때의 요구사항은 전세계에 타전되었고, 중국과 인도에서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

3월 22일 입법원 원장 손과가 동방문화협회·국민외교협회·국제반침략회 중국지회가 공

5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임시정부 승인을 청하는 節略」, 136-138쪽.

60) 호춘해,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109쪽.

61) 『백범김구전집5:대한민국임시정부Ⅱ』, 대한매일신보사, 1999, 121쪽.

동 개최한 강연회에서 ‘한국독립문제’라는 연설을 통해 한국의 독립승인과 임시정부 즉각 승인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⁶²⁾ 또한 손과는 같은 날 중경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합국의 한국독립승인과 한국임시정부의 신속한 승인을 요구했고, 이는 United Press 통신망을 타고 전세계로 타전되었다. 당시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도 손과와 같은 강연회에 참석하여 임시정부의 한국독립 승인과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⁶³⁾

일찍이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했던 손문의 아들이자 중국정부의 유력인사인 손과의 건의는 국내외에 미친 반향이 컸다. 주중미국대사관은 손과의 강연원문을 영역하여 5벌을 항공편으로 국무부에 보냈다. 루스벨트는 손과 강연 다음날 저녁 방송연설에서 한국민이 일본에 노예상태로 고초를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3월 25일 김구가 이승만에게 전보를 보내 손과와 조소앙이 군중대회에서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요청 강연을 했다고 통지하자 이승만은 중경의 손과에게 전보를 보내 그의 강연에 감사를 표하였다. 루스벨트의 강연내용이 중경에 도착하자 행정원의 蔣廷黻 대변인이 외신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원래부터 한국독립을 승인하려 했으며, 이제 미국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연내용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⁶⁴⁾ 워싱턴 포스트가 중경 『中央日報』에 실린 손과의 강연내용을 인용 보도하자 웰스 국무장관대리가 고스 주중미국대사에게 손과 강연에 주의를 기울일 것과 『中央日報』가 중국 관변측 신문임을 유의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손과의 강연은 중국의 관료와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미국의 루스벨트와 국무부에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주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에서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중국의 유력인사 중에서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장개석의 지시에 따라 손과의 건의를 검토한 결과 임시정부 승인을 당분간 미룬다고 하는 유보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손과의 건의가 중·미 양국에 영향을 미친 경위를 훑어보면, 당시 중·미 양국이 외교채널과 통신사·신문사를 통해 한국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호 협의·조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월 9일 김구는 朱家驊 부장에게 장개석 위원장이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한국독립운동의 역량 강화와 추진력 증대에 필요한 신용차관 50만불을 중국정부가 제공하도록 중간에서 알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구는 신용차관 50만불을 계속 요청하였고, 7월 17일에는 재차 장개석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김구는 장개석을 직접 만나 신용차관 50만불 문제와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관해 답판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보

62) 호춘해,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273쪽.

63)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323쪽.

64) 『신한민보』, 「이승만 박사가 보낸 전보」, 1942년 4월 2일. 호춘해,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273쪽;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323-324쪽.

인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중국화 200만원의 차관제공만 결정하고, 장개석 면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지를 주지않았다.⁶⁵⁾ 미국에서 이승만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상대로 수차 면담 신청을 했다가 무시를 당한 것처럼 중경의 김구도 장개석에게 홀대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10월 11일 중·한 양민족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한중문화협회가 창립되었다. 이는 3·1운동 후 중국 각지에 조직된 중한협회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중국측에서는 정치적 비중을 지닌 손과·오철성·왕충혜·馮玉祥 등이, 한국측에서는 중국내 독립운동 대표자인 김구·조소앙·이청천·김약산 등을 비롯해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중한문화협회는 산하에 연락·선전·연구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회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명예이사로 중국 16명, 한국 8명,⁶⁶⁾ 이사로 중국 4명, 한국 7명, 감사로 중국 2명, 한국 2명을 두었다. 당시 장개석은 전세계 반침략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민족자유와 인류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중한문화협회의 창립을 축하하였다.⁶⁷⁾

중한문화협회는 이승만이 1942년 1월 워싱턴에서 조직하여 임시정부 승인 및 한국독립을 위한 로비단체로 활용한 한미협회를 모방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한미협회와 중한문화협회의 차이점은 전자에는 미국의 종교·교육·정치 분야의 명망가들이 가담한 반면, 후자에는 중한문화협회는 미국과 같은 명망가들 외에도 현직 고위관리들이 가담한 점이 이채를 띠고 있다. 이는 3·1운동 이래 임시정부 요인들과의 개인적 인연을 맺은 중국인사들은 장개석정부의 방침과 달리 한국독립운동에 온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여간 한미협회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의 대한정책에 압력을 가한 것처럼 중한문화협회는 중국의 대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1942년경까지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김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장개석 위원장을 비롯한 중국 국민정부 요로에 열강의 한국독립 승인 및 임시정부 승인 외교활동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벌인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임시정부의 이러한 맹렬한 외교활동에 응하여 중국의 국민정부는 한국의 독립은 물론이요, 임시정부도 승인하러 하였다. 중국 국민정부 행정원 정무처장 蔣廷黻은 1942년 8월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임 외교부장 宋子文은 1942년 11월 3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은 중국의 일종의 국제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은 중국 국민당정부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한 것이었다”고 하였다.⁶⁸⁾

위의 해석은 첫째, 김구와 임시정부가 ‘맹렬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나 장개석과 국민

6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147-153쪽.

66) 미국의 이승만과 서재필은 주은래·郭末若 등 중국 명사들과 함께 명예이사에 추대되었다.

6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154-156쪽.

68)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324-325쪽.

당정부는 한국측이 요구하는 임시정부 승인이나 한국독립 승인을 들어줄 의사가 없었으며, 둘째, 행정원 정부차장 장정불이나 신임 외교부장 송자문은 입법원 원장 손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주장한 것이며 이들의 주장은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중경의 임시정부는 김구·조소앙 등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1943년 3월 1일 중한문화협회 주최 3·1절 기념강연회가 열렸다. 이때 중국측의 司徒德·풍옥상 등은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혁명열사들의 애국정신을 칭송하고 독립의 그 날을 위해 계속 분투할 것을 격려했다. 이에 조소앙은 유럽의 망명정부들이 동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을 때마다 한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라며, 동맹국들이 한시바빠 임시정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때 김약산은 3·1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⁶⁹⁾

3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후 한국의 국제신탁통치(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루스벨트에 의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⁷⁰⁾ 루스벨트의 한국신탁통치구상은 영국 외무부와 미국무성 관료들이 1942년경부터 논의해 오던 문제였다. 루스벨트는 한국민의 자치능력을 의심하여 한국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영국 외상과의 회의에서 만주·한국·대만·인도차이나의 전후 처리문제를 언급하며, “한반도는 일정기간 국제신탁통치(International Trusteeship) 아래 놓여진 후 독립국가로 선포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루스벨트와 이튼은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방안’에 합의하고 소련과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다.⁷¹⁾ 이로써 전후 한국에 대해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한다는 루스벨트의 구상이 구체화되었다.

루스벨트의 신탁통치구상에 대해 *Chicago Sun*(태양보)는 4월 5일과 7일 두 차례 런던 특파원발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튼 장관과 한반도를 신탁통치 아래 두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4월 27일 *Chicago Tribune* 은 “영·미의 전후 세계 건립계획”이라는 제하에 “한국이 독립을 이루기 전까지 국제감호 아래 둔다”고 보도했고, 4월 29일 중경의 국민당 기관지 『중양일보』는 *Chicago Sun*의 기사를 번역 전재하여 “영미 양국이 한국의 독립을 연기하고 잠정적으로 국제호위(international guardianship)를 실시하기 결정했다”고 보도했다.⁷²⁾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방안 소식은 김구와 임정 요인들을 분격케 하였다. 임시정부는

6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대중국 외교활동』, 162-163쪽.

70) 3월 27일 회의 참석자는 루스벨트 대통령, 헐 국무장관, 홉킨스 특별보좌관, 웰즈 국무차관, 이튼 영국 외무장관, 헬리팩스(Edward F. Halifax) 주미영국대사, 윈넌트(John G. Winant) 주영미국대사, 스트랭(Strang) 영국 외무부 직원 등이다.

71) The Secretary of State(Cordell Hull), “Memorandum of Conversation,” March 27, 1943, *FRUS*, 1943, Vol. III, pp.36-37.

72) 이완범, 「연합국 카이로회담의 한국독립 약속과 신탁통치」, 98-99쪽.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국제감호설 배척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1) 우리 외무부에서 중국 외교부를 향하여 그 사실의 유무를 질문하고 아울러 반대의를 표시할 것, 2) 미·영·러 각국 원수에게 반대하는 전보를 보내고 중국에서는 당국자를 향하여 정식으로와 신문상으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 3) 선전부에서는 자방 간물과 타방 간물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반대하는 의사를 광포할 것, 4) 당·정·군 각 수뇌자를 소집하여 그 진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연구할 것 등이었다.⁷³⁾ 이에 따라 당·정·군 수뇌회의가 열어 신탁통치안 규탄을 이어갔다.

5월 10일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한국애국부인회·한국청년회 등 정당과 독립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여 ‘재중국자유한인대회’를 열고 전세계 반침략 정부 및 인민에게 보내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 한인대회에서 김구의 한국독립당 등은 “한국은 완전독립을 원하며 소위 국제감호나 다른 어떠한 형태의 외래간섭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이를 열강과 전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단체에 보내 열강의 패권주의를 규탄하였다.⁷⁴⁾

5월 7일 임시정부 외무위원 신익희는 중국어에 서툰 조소앙을 대신하여 중국 외교부를 찾아가 미·영이 주도하는 전후 한국의 국제공동관리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물었다.⁷⁵⁾ 임시정부 외무부장 조소앙은 임시정부 주미전권대표 이승만에게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5월 15일자 공한을 루스벨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이승만은 루스벨트에게 보내는 개인서한에 임시정부의 공한을 동봉하였다.⁷⁶⁾ 임시정부 선전부 선전위원 엄항섭은 『大公報』 6월 11일자에 “전후 한국문제에 대한 공개서한”을 투고하여 열강이 한국을 독립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했으나 이는 한국인의 통치능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국제공동관리안에 반대하고 한국독립을 주장했다.⁷⁷⁾

김구·조소앙 등 임정 요인들은 루스벨트의 국제공동관리안을 독립과 반대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루스벨트는 한국의 자치능력을 고려하여 독립으로 가는 과도기로서 국제공동관리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임정 요인들은 국제공동관리안을 일본의 보호국화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정 요인들은 한국의 완전독립 내지 절대독립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강의 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론 반대운동이 조금 수드러들던 7월 26일 오전 9시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수뇌들이 중국의 전시수도 중경의 중국군사위원회 2층 접견실에서 장개석

73)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1943년 발행일자불명, 「국제감호설 비판」, 243쪽.

74) 호춘해, 『중국안의 한국독립운동』, 257쪽.

7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한국의 국제공동관리문제」, 108쪽.

76) “The Chairman of the Korean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Rhee) to President Roosevelt,” May 15, 1943, *FRUS, 1943, Vol. III*, p.1093.

77) 『大公報』, 중경, 1943년 6월 12일.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때 참석자는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앙, 선전부장 김규식, 한국광복군 총사령 이청천, 한국광복군 부사령 김약산, 통역 安原生, 배석자 오철성이었다.⁷⁸⁾ 이 면담은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임시정부 인사들이 중국 지도자 장개석을 만난 유일한 사례이며, 루스벨트의 한국신탁통치구상이 보도되고 카이로회담이 확정된 후 이뤄진 한·중 유력인사들의 만남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개석과 임정 요인간에 한국독립문제가 논의된 자리라는 점에서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 연구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받아왔다.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에 관해서 장개석-김구의 역할만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7월 26일 면담에서 장개석이 김구 등에게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7월 26일 면담이 임시정부에 의해 이뤄졌고, 임시정부가 장개석을 움직여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보장선언은 결과적으로 김구와 임시정부가 세운 공로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⁹⁾

그러나 김구의 활동과 장개석의 ‘약속’으로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매우 편의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다. 7월 26일 면담에 대해서는 1) 장개석-김구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그 면담이 과연 김구(임시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인가, 2) 7월 26일 면담 때 장개석이 한국독립을 ‘약속’했다는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3) 면담 이후 임정 요인의 면담성과 홍보활동에 드러난 과장문제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7월 26일의 면담은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한국독립운동세력이 한국문제를 주도한 열강의 지도자를 만나 한국문제를 논의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첫째, 7월 26일 면담의 성사과정을 살펴보겠다. 김구는 1942년 2월 9일, 7월 17일 장개석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장개석은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정부를 여러 독립단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구의 면담요청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장개석은 김구가 첫 번째 면담을 신청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1943년 4월 27일 임정 요인들을 접견하겠다고 나섰다. 이때 중국 국민당은 “위원장께서 한국독립당 당수 김구와 조선민족혁명당 영수 김약산(김원봉)을 정기적으로 접견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였다.⁸⁰⁾

장개석이 4월 27일 임정 요인들과의 면담을 결정한 것은 여러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즉, 장개석이 접견을 결정한 시기는 1) 4월 중순 중국은 미국과 물밀협의를 통해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2) 4월 5일과 7일 *Chicago Sun* 지

7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장개석과 한국임시정부 요인의 담화회 기록」, 165쪽. 의정원 의장 홍진은 초청은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79) 신용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526쪽;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39쪽.

8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장개석 위원장의 김구·김약산 접견문제」, 72쪽.

를 통해 한국신탁통치문제가 보도되자 미국과 중국의 한인독립운동가들이 동요하며 중국 정부에 문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3) 임시정부에 대한 원조를 확대해달라는 김구·조소앙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중국정부는 한국 독립단체의 통합과 화합이 시급한 문제라고 고집하던 때였다. 하여간 장개석-임정 요인간의 면담은 임시정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개석의 필요에 의해 이뤄졌으며, 이때 면담의 주도자는 임정 요인이 아니라 당연히 장개석이었다.

김구의 애당초 단독면담 신청과 달리 장개석은 임시정부내 김구의 유력 경쟁자들을 면담장에 모두 불렀다. 장개석은 임시정부내 한국국민당계인 김구에게만 접견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한국독립당계인 조소앙, 조선민족혁명당계인 김규식·김약산, 광복군계인 이청천, 의정원 의장 홍진 등을 초청하였다. 이를 보면 장개석의 임정 요인 접견의 일차적 목적은 한국독립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정부가 누차 임시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단언한 임시정부내 각 당파의 통합과 화합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전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문제로 동요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장개석의 임정 요인 면담결정은 임시정부에 통지되었다. 그런데 면담 확정 이후 3달이나 지난 시점에 실제 면담이 이뤄진 이유는 자료의 부족으로 잘 알 수 없다. 다만 장개석이 김약산을 김구와 대등하게 면담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제까지 김구보다 지위가 떨어진다고 평가받던 김약산의 한인사회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해준 조치나 다름없었다. 이로 인해 김구는 장차 한국정치의 영도권을 김약산과 분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장개석의 결정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을 보였다.⁸¹⁾ 따라서 장개석과 임정 요인들과의 면담은 사실 김구에게는 불편한 면담이었던 셈이다.

둘째, 7월 26일 면담에서 장개석이 한국의 완전독립을 임정 요인들에게 ‘약속’했는가의 문제이다. 아래 자료는 임정 요인과 장개석이 한국문제를 주제로 대담한 것인데,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측이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문제를 논급할 때 매우 비중 있게 인용하는 사료이다.

「총재께서 한국 영수를 접견하고 담화를 나눈 개요(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
 총재: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은 조선과 태국의 완전 독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는 데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 혁명동지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하고 분투하여 復國運動을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김구·조소앙: 영국과 미국은 조선의 장래 지위에 대해 자주 국제공동관리방식(國際公管方式:신탁통치)을 채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중국 쪽에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인의) 독립 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장개석의 한국 각 당파 영수 접견」, 54-55쪽.

다.

총재: 영국과 미국 쪽에서는 확실히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반드시 논란(‘爭執’)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부의 정성통일(精誠統一)과 공작표현(工作表現)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중국도 힘써 주장(‘力爭’)할 수 있고, 이 일에 착수하기도 쉬울 것입니다.⁸²⁾

위 사료에서 1) 중국혁명의 최후 목적이 조선과 태국의 완전독립이라는 장개석의 발언은 인사치레에 가까운 것이다. 중국의 최후목적은 당연히 일본에게 빼앗긴 영토를 환수하고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며, 한국과 태국 문제는 중국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개석이 이어서 말한 “한국 혁명동지들이 일심으로 단결하고 분투 노력하여 復國운동을 완성하기 바란다”는 구절이 장개석의 본심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2) 미·영 양국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론을 주장하고 있으니, 한국의 독립주장을 지지하고 관철해달라는 김구·조소앙의 요청에 대해서, 장개석은 그 문제로 앞으로 논란이 많을 것인데, 한국독립운동세력이 먼저 내부통일을 이루고 공작방면에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중국도 힘써 한국독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독립세력이 먼저 단합과 통일을 이뤄야만 중국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가 붙은 발언이었다. 따라서 위 사료는 전체적으로 보아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사료라기보다는 復國운동의 완성과 국제공동관리론의 종식을 위해서는 한국독립운동계가 먼저 단결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한 사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개석일기」 1943년 7월 26일조를 보면, “한국혁명당 영수 김구 등을 만났다. 그들한테 내부단결에 힘써 달라고 권하고 격려하였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려 하고 있는 戰後 조선독립 주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다.⁸³⁾ 여기서 장개석은 “중국정부가 주장하려 하고 있는 전후 조선독립 주장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이때 장개석이 ‘중국정부가 주장할’이라는 확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가 임정 요인들에게 한국독립을 ‘약속’해주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만 장개석이 그런 정도나마 표현해준 것은 3·1운동 이래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인사들과 친한파 중국인들이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을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청원했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소앙에 의하면, 7월 26일 면담에서 임시정부는 장개석에게 3가지를 요청했다. (1)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줄 것, (2) 한국광복군 행동준승을 적당히 개정하여 광복군을

82)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번역문)165-166쪽, (원문)238-239쪽; 『白凡金九全集』 5, 대한매일신보사, 1999, 251-252쪽.

83) 이상철, 「장개석일기에 나타난 한국독립운동 관계사료」, 537쪽.

원만히 발전시켜 공동작전에 참가하게 해줄 것, (3) 경제상 원조를 늘려줄 것 등이었다.⁸⁴⁾ 이에 대해 9월 22일 조소앙은 신익희를 대동하고 장개석의 비서장 오철성을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정부의 지원금 문제로 인한 임시정부의 분란상에 유감을 표한 다음, 7월 26일 면담 때의 요구사항의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철성은 “앞으로 한국문제를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의례적인 발언으로 답변을 얼버무렸다.⁸⁵⁾ 특히 오철성이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해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은 7월 26일 면담의 성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셋째, 7월 26일 면담 이후 임정 요인들의 방송과 신문을 통한 면담성과 홍보활동에 나타난 과장 문제이다. 장개석을 면담한 임시정부 선전부장 김규식은 8월 5일 중경국제방송국에서 하와이 및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한인을 대상으로 행한 방송연설에서 장개석을 만난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장개석이 전후 한국이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견해이자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혁명 영수들이 더욱 단결하여 합작하여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⁸⁶⁾

그런데 김규식이 방송연설에서 “장개석이 전후 한국이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절은 다소 과장된 것이다. 다른 사료에 보면 “한국은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고 장개석이 말했다”고 되어 있다.⁸⁷⁾ 그러나 장개석이 자신의 일기에서 한국독립문제에 대해 “중국정부가 주장하려 하고 있는 전후 조선독립 주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다소 어감이 다르다. 장개석일기의 내용을 더 신뢰한다면, 장개석은 중국정부가 원하는 상황이 갖춰져야만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8월 5일 김규식의 방송연설은 장개석을 발언을 다소 과대포장한 것이며, 따라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과대포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개석-김구의 역할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7월 26일 장개석-임정 요인의 면담내용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당시 장개석의 주장은 1943년 7월 하순 시점에 장개석이 한국을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한다고 하는 루스벨트의 입장에 대해 동조한 바탕 위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완전독립시켜 준다는 장개석의 주장은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또 전후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장개석의 발언도 한국독립단체의 통일과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쓰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

84)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8호(1943.8.4), 243쪽.

8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2: 대중국 외교활동』, 「조소앙의 오철성 면담기」, 169-171쪽.

8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5: 중국의 인식』, 「전후 한국의 독립지위 획득에 관한 장개석의 발언」, 55쪽.

87) 『백범김구전집』 5, 266쪽. “Radio Broadcast Message to the Korean National Revolutonal Party in Hawaii and the Mainland USA.”

7월 26일 장개석과의 면담을 통해 임시정부는 임정 승인이나 완전독립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중국정부로부터 대중국교섭의 단일창구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8월 11일 장개석은 군사위원회를 통해 한국문제 처리에 관한 3가지 기본원칙을 하달했다. 즉, 1) 한국 각 독립단체의 통일을 강구하지 말고 우수한 당파를 골라 지원하되, 조직이 건전하고 역사가 유구한 한국독립당을 지원하여 영도적 지위를 갖추게 할 것, 2)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나 한국독립운동과 관련된 정치사무를 임시정부를 중심대상으로 삼아 진행할 것, 3) 군사문제는 임시정부 계통 아래서 통일적 군사역량을 배양하여 원활한 지휘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그간 중국정부로부터 여러 단체 중의 하나로 취급받던 설움을 떨치고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의 최고 영도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요컨대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중경의 김구와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의 승인문제와 한국독립문제를 중국정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분투하였다. 이들이 표방한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의 대한정책에 이들의 요구사항이 일부나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김구와 임시정부도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채택되는데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승만과 친한파 인사들의 공헌

1941년 12월 진주만사건 후부터 1943년 11월 카이로회담 전까지 이승만은 국제정치 의 중심지인 미국의 워싱턴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외교독립운동을 벌였다. 이는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모든 국민이 자유와 평등과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국가를 한국에 건설하려는 오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미국의 정부와 정치인, 종교인과 언론인, 군인과 명망가, 재미독립운동가들과 연대하여 외교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이승만의 특유한 독립운동방략으로 알려진 외교독립운동에 대한 성과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비판은 1925년 3월 임시대통령 이승만이 임시정부내 경쟁세력인 서북파에게 면직당한 후 『독립신문』에 실린 이승만의 ‘외교실패’를 강조한 논설에 집약되어 있다.⁸⁸⁾ 이로 인해 “이승만이 독립운동 한답시고 미국정부에 편지 몇 장 보낸 것 말고 달리 한 일이 뭐가 있냐”는 잘못된 세평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에 대한 비판은 진주만사건 후 외교독립운동을 재개한 후에도 다시 제기되었다. 1943년 1월 이승만의 경쟁세력인 북미국민회 인사들이 ‘외교실패’를 가장 중요한 사유로 거론하며 이승만의 ‘소환’을 임시정부에 품청하기로 결의했다.⁸⁹⁾ 이들은 같은 해 8월 “임시정부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고, 한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에서 계

88) 『독립신문』, 「李承晩君에게 一言을 與하다」, 1925년 3월 31일.

89) 『신한민보』, 「대한민국민회 제7차 대표대회」, 1943년 1월 14일.

속 패배했다”며 이승만을 ‘실패자 이승만(Syngman Rhee A Failure)’이라고 규정하고, ‘임시정부 주위싱턴 전권대표 겸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의 소환을 임시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이승만의 본거지인 미주한인사회에서조차 이승만의 외교실패를 아주 당연시하게 되었다.⁹⁰⁾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결여된 세평과 달리 이승만은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대략 2년간 외교독립운동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미국의 백악관·국무부·전쟁부·법무부·의회·신문사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외교독립운동을 벌였다. 이중 백악관과 국무부로부터는 냉대를 받았던 반면, 정보조정국(COI)·전략첩보국(OSS)같은 정보기관과 전쟁부와 법무부로부터는 환대를 받으며 한인청년들을 미군부대에 편입시켜 조직적으로 항일전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미주한인이 일본인같은 적성(敵性)외국인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⁹¹⁾ 아울러 의회와 언론과 방송사를 상대로 한국독립문제를 끊임없이 환기하여 미국민으로부터 한국민의 처지와 한국독립에 대한 깊은 동정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이승만은 미국의 군사기관과 법무부 등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냈던 반면, 미국의 대한정책을 책임진 대통령이나 국무장관과는 면담도 못하고 푸대접만 받았다. 이 때문에 이승만의 애국적 헌신이 도로에 그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의 대한정책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對美압력’이란 제하에 “1942-1943년간 한국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상당한 압력(considerable pressure)이 국무부와 대통령에게 가해졌다. 한미협회, 이승만, 미국 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했던 것이다”라고 하여 이승만과 친한 단체 및 미국 정치인들의 임시정부 승인요청이 미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고 자평하였다.⁹²⁾

한미협회, 이승만, 국회의원들의 임시정부 승인요청이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에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는 국무부 보고서의 내용은 의미심장하다. 그야말로 이승만을 푸대접한 것으로 유명한 국무부가 남겨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 자료는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전개한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이 기왕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상당한 성과

9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9: 주미외교위원부 I』, 「메모:실패자 이승만…」(1943.8.13), 국사편찬위원회, 2007, 158-169쪽.

91) 미국 전쟁부와 법무부를 통해 이승만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임병직, 『임병직회고록』, 여원사, 1964, 243-247쪽; 허정, 『인간 이승만』, 태극출판사, 1972, 181-184쪽.

92) 『미국의 대한정책』, 66-67쪽;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p.21. “Pressure Upon United States for Recognition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1942 and 1943 considerable pressure was brought to bear upon the Department and the President in behalf of the Korean cause. The Korean-American Council, Syngman Rhee, and various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urged recogni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를 거두었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부가 받은 압력은 다음 단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의의 수렴을 중시하는 자유민주국가 미국의 대한정책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자연스런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이승만 외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은 한미 협회나 국회의원들은 모두 이승만의 대미외교를 보좌 내지 후원했던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당시 한미협회는 이승만이 대미로비를 위해 저명한 미국인들을 규합하여 조직한 친한정치단체였고,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의 요청과 강청에 응하여 백악관과 국무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를 감안하면, 1942-1943년간 대통령과 국무부에 상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국무부가 거론한 주체들의 친한활동은 근거에는 사실상 이승만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1942-1943년 2년간 이승만은 개인자격으로,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자격으로, 그리고 친한단체와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임시정부 승인활동을 벌였다. 미 국무부는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가 임시정부 승인을 지지하는 압력들을 거부하면서 중국정부에게 (임시정부 승인문제에서)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지만,⁹³⁾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과 국무부는 이승만이 안겨준 상당한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이승만이 안겨준 상당한 압력은 카이로회담 당시 루스벨트가 한국독립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데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42-1943년간 이승만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외교독립운동을 펼쳤다. 이승만의 필사적인 외교독립운동의 목표는 모든 인민이 자유와 독립을 구가하는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임시정부를 승인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1) 중경임정이 한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2) 임시정부의 항일능력을 신뢰하기 힘들며, 3) 임시정부내 분파투쟁이 심한 상태이며, 4) 임시정부를 승인할 경우 미국내 피압박민족의 독립단체들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며, 5)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소·영·중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일관되게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의 임시정부 불승인정책에 대항하여 이승만은 사력을 다해 임시정부 승인활동을 벌였다. 즉, 그는 1) 임시정부 주위싱턴 전권대표 자격으로 혹은 개인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서한·전보 발송활동을 벌였고, 2) 친한 로비·선전단체인 한미협회와 기독교인들의 로비·선전단체인 기독교인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결성하여 임시정부 승인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3)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 지지활동을 벌이게 하였고, 4) 한인단체와 친한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대중집

93)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55-56, 61-62쪽;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214쪽.

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승인활동을 벌이게 하였으며, 5) 루스벨트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인사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한국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 동시에 펼쳐진 이러한 활동들은 그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제시기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벌인 구국운동의 전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이승만을 비롯하여 친한파 인사들과 단체들은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지지를 호소함에 있어서 유사한 전략을 취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인도주의에 기대의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1)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문명국가이며, 2) 한국민은 세계의 자유민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3) 한국독립은 동양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일본의 침략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구사했다. 이때 이들은 1882년에 맺은 한미수호조약 제1조 居中調停(good offices) 조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민족자결주의를 재확인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서양헌장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러한 조약과 선언을 이행해야 하며, 약소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찾아주는 것이 미국의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정부를 상대로 다각도로 전개된 이승만의 임시정부 승인활동은 각각의 논고를 통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각개 활동의 두드러진 그리고 특징적인 측면만을 간략히 약술하는 선에서 그치려 한다.

첫째, 이승만이 서한과 전보를 통해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벌인 임시정부 승인활동이다. 이승만은 1941년 6월 4일 임시정부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겸 주워싱턴 전권대표’에 임명되었다. 6월 6일 김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승만에게 대미외교의 전권을 부여하였음을 통보했다.⁹⁴⁾ 이에 따라 이승만은 워싱턴에 주미외교위원부(The Korean Commission)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선언 전까지 이승만은 수시로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임시정부 승인 요청 및 한국 지원 요청 서한과 전보를 보냈다. 국무부 산하 기관인 재중미대사관에 보낸 서한과 전보까지 합산하면 수십 차례에 달할 정도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못했으나 미국정부로 하여금 끊임없이 한국문제를 환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도로에 그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1941년 12월 9일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장 자격으로 국무부를 방문하여 혼백(Stanley K. Hornbeck) 정치고문에게 임시정부 신임장을 제출하고 동봉한 편지에 “운명의 충돌이 일어났으나 한국이 일본을 쳐부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의 대의에 도움이 될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94)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9: 주미외교위원부 I』, 8-9쪽.

이어 12월 17일 재차 혼백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942년 2월 4일 혼백은 이승만에게 신임장을 돌려보내면서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해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답하였다.⁹⁵⁾

2월 7일 이승만은 혈 국무장관에게 다시 신임장을 제출했다. 이는 1941년 6월 반송, 1942년 2월 4일 반송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무부는 신임장 수령을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때 혈장관은 직답을 피하고 별 국무차관보를통 해 임시정부 승인을 완곡히 거절하는 회답을 보내왔다. 이후 이승만은 혈장관에게 계속 면담을 신청하는 가운데, 3월 24일 혈장관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2월 7일 보낸 신임장은 1882년 한미조약에 근거하여 임시정부가 한국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6월 15일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장 명의로 연합국에 보내는 임시정부 승인요청 외교각서를 국무부에 제출했고, 12월 7일 임시정부의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의 완전무장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임시정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사코 임시정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⁹⁶⁾

12월 7일 이승만은 진주만사건 1주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때 전쟁부의 후원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유격대가 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임시정부의 현재와 미래의 목적을 기록한 비망록을 제출하고, 대서양헌장을 이행해줄 것을 완곡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무부 극동국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유익한 정보에 감사하다는 의례적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31일 이승만은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국무부 극동국에 국무장관에게 면담은 하지 말고 전화만 하라고 건의하였다.⁹⁷⁾

1943년 2월 16일과 17일 이승만은 혈 국무장관과 스티imson(Henry L. Stimson) 전쟁부장관에게 자유를 쟁취하려는 한국인들에게 태평양전쟁에 참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때 이승만은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미국이 민주주의 이상을 품고 있는 임시정부를 거부하면 태평양전쟁 종료 후 소련이 한반도에 ‘소비에트코리아공화국(Soviet Republic of Korea)’을 세울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별 국무차관은 혈장관이 워싱턴에 없기 때문에 면담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는 모든 민족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 지원할 것이다”는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을 전해왔다.⁹⁸⁾

한반도의 소련화 가능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의 반응이 없자 5월 15일 이승만은 루스벨트에게 조소앙의 편지를 동봉하여 임시정부 요청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이승만은 루스벨트가 1942년 2월 23일 방송연설에서 한국민의 고통을 언급한 것을 환기시킨 후 미국이 일본의 한국병탄을 묵인한 것은 1882년 한미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

9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103-105, 114쪽.

9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117, 139, 167-168, 192-194쪽.

9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195-199쪽.

9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195-199, 207-209쪽.

다. 나아가 진주만사건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동양평화의 방과제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일본의 침략정책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시정하고 조속히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소비에트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소련의 야욕과 마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승만은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한국민에 대한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여 한국민이 미국의 공동의 적인 일본과 맞서 싸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⁹⁹⁾ 이에 대해 루스벨트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8월 23일 이승만은 다시금 루스벨트에게 전보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민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버마민족과 기타 아시아민족에게 독립을 보장한다는 허위적 기만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지원을 베풀어 대일 전쟁이라는 공동목표를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⁰⁾ 10월 18일 이승만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명의로 주중미국대사 고스에게 서한을 보내 “소련에서 나온 급보를 바탕으로 소련이 한국을 소비에트공화국연방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국가들에 재앙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속히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중경의 광복군을 전쟁에 투입시켜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⁰¹⁾

둘째,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를 조직하여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에 압력을 행사한 문제이다. 이승만은 재미한인사회의 한정된 자금과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주미외교위원부의 조직을 간편케 하는 대신 미국인들로 구성된 한미협회를 전면에서 내세워 대정부로비 및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 교인 중에서 한미협회의 정치색을 우려하여 참가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음을 고려하여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로 기독교인친한회를 조직하였다.¹⁰²⁾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는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 지지요청을 위한 대정부 로비선전단체라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한미협회의 이사와 위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두 단체는 인적 구성면에서 겹치는 부분도 많았다, 다만 형태상으로 한미협회가 정치적 성격의 친한로비선전단체였던 반면 기독교인친한회는 정치색을 배제한 기독교인 중심의 친한로비선전단체였다. 이때 이승만이 두 단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게 보아 두 단체는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일선에서 후원 지지하는 전위단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협회는 워싱턴 시내에 사무실을 두고 1942년 1월 16일에 창설되었으나 실제로는

9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217-218쪽.

10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223-224쪽.

10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224-226쪽.

102)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35호』, 1943년 6월 16일.

1942년 1월 초경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설립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미국인들의 동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각 회보 및 통신문의 발송, 언론 보도자료의 배포, 대중강연 등이 제시되었다. 협회의 운영은 이승만이 위원장을 맡은 주미외교위원부의 지원과 회원들의 기부금에 의존했다.¹⁰³⁾

1942년 4월경 한미협회의 이사회와 전국위원회의 임원은 총 34명이었다. 이사장 해리스(Frederick B. Harris) 박사, 이사 크롬웰(James H.R. Cromwell) 회장, 스태거스(John W. Staggers) 변호사,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기자 등이며, 위원 더글라스(Paul F. Douglass) 아메리칸대학 총장, 윌리엄(Maurice William) 박사, 헐버트(Homer B. Hulbert) 박사, 피치(George A. Fitch) 부인, 페퍼(Claude Pepper)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커피(John M. Coffee) 위싱턴주 하원의원, 킹(Samuel M. King) 하와이 파견 하원대표 등이었다.¹⁰⁴⁾ 이들은 정치인, 종교인, 법률가, 교육가, 언론인 등이며 미국내 여론주도층에 해당하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었다.

한미협회를 주도한 인사들은 이사였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도 포함된 7인의 이사 중에서 핵심인사는 연방상원의 원목인 해리스 목사, 전직 캐나다 대사를 지낸 크롬웰 회장, 전직 기자출신으로 INC 통신사 운영자인 윌리엄스 대표, 주미외교위원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스태거스 변호사 등 4인이다. 이중 크롬웰은 전직 고관의 경력을 살려 국무부와 교섭을 대행하였고, 윌리엄스와 스태거스는 태평양전쟁 후 법무부에 이승만의 ‘대리인(Agent)’으로 등록하면서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20년 넘게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운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한국의 독립과 이승만의 집권이었다.¹⁰⁵⁾

1942년 1월 9일 해리스·스타거스·윌리엄스 3인은 국무부에 1882년의 한미수호조약과 1941년의 대서양헌장의 준수는 미국의 당연한 도덕적 의무라고 단언하고,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윌슨 대통령의 제자인 이승만 박사의 요구대로 한국독립과 임시정부 승인요청을 수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1월 16일 국무장관에게 임시정부 승인요청 서한을 보냈으나 국무부는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2월 4일 이들은 다시 해군부장관 녹스(Frank Knox)에게 1941년 12월 7일 이후 국무부와 접촉했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말하며 한국에 항일무력항쟁에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⁶⁾

4월 28일 한미협회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임시정부의 조소양, 중국층의 손과 등의 임시정부 승인촉구 문건을 첨부하여 보내며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4월 30일 한미협회는 “2월 23일 방송연설에서 루스벨트가 한국의 억압상태와 한국민의 노예

103)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 출판부, 2004, 428쪽.

104)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한미협회의 조직과 인물」, 148-149쪽.

105)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29쪽.

10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108-110, 115-116쪽.

상태에 관심과 염려와 애정을 보인 것을 치하하고,” 40년간 한국인의 독립투쟁사 기록을 제출하며 이를 자세히 검토해줄 것을 청하였다.¹⁰⁷⁾

5월 이후 한미협회는 임시정부 지지활동에 변화를 주었다. 5월 5일 한미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목적을 알리는 서신을 헐 국무장관에게 보냈으며, 윌리엄스는 국무장관 비서인 스톤(John Stone)에게 편지를 보내 크롬웰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자필서한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5월 6일 크롬웰은 볼드윈(Joseph C. Baldwin)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자신의 편지를 알려줄 것과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미국에 이익만 있고 손해는 없다는 사실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였다.¹⁰⁸⁾

5월 20일 헐 국무장관이 크롬웰의 임시정부 승인요청 편지에 대한 장문의 답장에서 국무부내 부처들이 한미협회가 제출한 청원서 내용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은 특정단체를 정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6월 3일 크롬웰이 다시 국무장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윌슨 대통령의 이상과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6월 23일 헐장관은 임시정부 승인문제는 중·영 및 기타 국가의 견해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크롬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⁰⁹⁾

7월 이후 한미협회의 크롬웰, 스태거스 등은 헐 국무장관, 벌 국무차관 등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심지어 크롬웰은 임시정부 승인문제와 관련하여 보내는 비공식 서한에서 임시정부 승인을 주장하는 중국 외교부장 송자문과 달리 임시정부를 승인을 반대하는 국무부의 태도는 ‘범죄적인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이기도 하였다. 또한 스태거스는 임시정부 승인이 일본에 미치는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국무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¹¹⁰⁾

8월 14일 한미협회는 국무부가 아니라 미국민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미협회가 로비의 범위를 대통령과 국무부에서 미국 국민으로 넓힌 것이었다. 이 선언에서 한미협회는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미국정부가 한미수호조약과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대서양헌장에 따라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나아가 한국을 국제연합군 결성선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진주만사건 1주년을 맞는 12월 7일 이승만은 한미협회 명의로 루스벨트에게 대서양헌장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¹¹¹⁾

기독교인친한회는 이승만이 외교독립운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미협회와 별도

10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43-147쪽.

10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49-154쪽.

109)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58-166, 171-172쪽.

11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77-183쪽.

11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85-187, 195쪽.

로 만든 단체이다. 1943년 2월 현재 기독교인친한회의 집행부를 보면, 회장은 한미협회 위원이자 아메리칸대학교 총장 더글라스, 서기 겸 재무는 구한말부터 이승만과 가까웠던 애비슨(Oliver R. Avison), 서기는 한미협회 위원이자 피치 선교사 부인, 재무에는 한미협회 이사 윌리엄스, 법률고문에는 한미협회 위원 스태거스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이사진에는 해리스와 이승만이 포함되었다.¹¹²⁾

기독교인친한회는 설립 당시에는 애비슨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애비슨은 2선으로 물러나고 한미협회의 이사와 위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활동했다. 이승만은 1942년 10월 한미협회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대신 기독교인친한회를 조직한 셈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친한회는 정치적 색채로 인해 기독교인들로부터 기피를 당한 한미협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의도에서 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독교인친한회 출범 직후 한미협회는 잠시 활동이 위축되었다가 1944년 이후 다시 주미외교위원부, 기독교인친한회와 함께 삼각대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

1943년 2월 9일 기독교인친한회는 회장 더글라스 박사와 재무담당 애비슨 박사 2인 명의로 미국의 기독교도(‘교우회 교인’)들에게 임시정부 승인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이래 인용문은 새로 결성된 기독교인친한회의 한국지지 활동의 방향과 목표가 잘 나타나 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현재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의 침략에 의해 해산된 상태입니다.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은 2,300만의 이 위대한 국가를 이제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동방의 이 지역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한국에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1943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1910년에 강제로 실행된 지배권력에 대항하여 일으켰던 1919년 3·1운동을 기리는 24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국의 서울에서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경에 자리잡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명한 워싱턴주재 공식대표인 이승만 박사는 한국대표로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기독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이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여론의 즉각적인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바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양에 있는 기독교를 위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승인에 대한 시도와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상·하 의원들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112)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31쪽.

이 편지문에 대해 귀하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사본은 우편을 통해 우리 사무실로 송달해주시요.

한국 기독교인친한회 회장 폴 더글러스(Paul F. Douglass)¹¹³⁾

위의 서한에서 기독교인친한회는 1) 한국에서 기독교의 소생을 위해서는 한국에 자유가 주어져야 하며, 2) 3·1운동 24주년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며, 3) 임시정부 승인을 받기 위해 미국정부와 협의 중이며, 4) 한국임시정부의 정식승인을 위해 상·하의원들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중 미국 상하의원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할 것을 권유한 것은 이승만과 한미협회가 서한을 통해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략적 변화를 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독교인친한회의 임시정부 승인요청 문건발송 권유에 대해서 뉴욕의 기독교인 핏치(Geraldine T. Pitch)가 상·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핏치는 1910년 미국이 일제의 범죄를 묵인하여 한국이 병합을 당했으니 미국은 국가적 명예를 지켜야 하며, 권유문에 제기된 사실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상원의원 2명과 하원들에게 전보를 보냈다고 하였다. 이는 기독교인친한회의 활동이 실제로 미국의 기독교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기독교인친한회는 5월 초 더글라스 회장 명의로 ‘사랑하는 세계 기독교의 친구’에게 서한을보냈다. 이 편지는 현재 미국 상·하 양원에 임시정부 승인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만일 결의안이 통과되면 1) 연합군이 전쟁에 2300만 한국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고, 2) 자유를 추구하는 한국인들을 격려할 수 있고, 3)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미국 기독교인들과 연합할 수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어 더글라스는 임시정부 승인을 위해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 코날리(Tom Connally)와 위원들에게 전보나 편지를 보내 결의안 49호를 입법화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더글라스는 이 운동은 최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사아는 바로 지금 크리스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당부하였다.¹¹⁴⁾

기독교인친한회의 임시정부 승인요청 권유활동은 한미협회·주미외교위원부의 권유활동과 짝을 이루어 1943년 3-4월 “미국정부에 의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을 규정하는 상·하 양원 합동 결의안이 제출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 지지활동을 벌인 문제이다. 이승만

113)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206-207쪽.

114) 박명수, 「태평양전쟁 시기 기독교인친한회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5, 2019, 264-265쪽.

은 진주만사건 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서한이나 전보를 보내거나 아니면 방문하여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협회같은 친한단체 임원들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미국정부에 요청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 2월부터 이승만과 친한단체들은 전략을 바꾸어 재미한인들과 미국인 기독교신자로 하여금 임시정부 승인요청 서한과 전보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는 미국정부가 상당한 압력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로 효과를 거두었다.

진주만사건 직후에 이승만은 장기영에게 평소 친교가 있던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임원인 질레트(Guy M. Gillette) 아이오아주 상원의원에게 임시정부 승인요청을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하였다. 1941년 12월 19일 질레트는 “국무성의 입장은 미국의 외교관 및 사절단의 본국철수문제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12월 22일 이승만은 스태거스·윌리엄스와 함께 질레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시정부 승인문제에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질레트는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서의 곤란한 일이다”며 거절의사를 나타냈다.¹¹⁵⁾

1942년 5월 7일 토비(Charles W. Tobey)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이 헐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임시정부 승인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때 토비는 서울에서 10년간 생활한 적이 있고 한미협회에도 관여하고 있는 인사로부터 부탁받은 사안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헐장관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2월 23일 방송연설에서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대해 동정을 표하고 대서양헌장이 피압박민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말한 것이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답신을 보내왔다.¹¹⁶⁾ 그런데 토비 의원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부탁한 인사는 자신이 한미협회 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이승만과 관계가 있던 인사로 보인다.

5월 12일 볼드윈(Joseph C. Baldwin) 뉴욕 하원의원이, 5월 13일 찬들러(Albert B. Chandler) 캔터키주 상원의원이 헐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크롬웰 한미협회 회장의 도움 요청 편지를 받고 헐장관에게 임시정부 승인요청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이에 대해 헐장관은 5월 5일자 크롬웰의 임시정부 승인요청 서한에 대한 5월 20일자 국무부의 회답서한을 첨부하여 보내며 국무부가 한국상황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¹¹⁷⁾

7월 6일 미시간주 하원의원 오브라이언(George O'Brien)이 상하원 연석의안으로 임시정부 승인요청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때 오브라이언 의원이 올린 결의안의 양식은 “77차 연방회기 제2차 H. J. RES 332 / 미하원 1942년 7월 6일 / 미시간주의 오브라이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합동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합동

115) 허정, 『인간 이승만』, 176-177쪽. 진주만사건 후 미 국회의원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1941년 12월 8일 파디스(Charles I. Faddis)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의원이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이 최초로 보인다.

11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55-156쪽.

117)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9: 주미외교위원부Ⅰ』, 202-203쪽.

결의안 미국정부의 한국 국민정부 승인을 규정함 / 미합중국 상하원 합동의회는 미국정부가 한국 국민정부를 승인한다는 것을 결의함”이었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7월 5일자 수신인 미상의 편지에서 “아직 우리가 준비 미완임으로 당분간 지연하기를 종용 청요(請要)하는 중이다”고 하였다. 오브라이언 의원이 다음 해 3월 다시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올린 것으로 미루어 이 결의안은 이승만과의 협의하에 일시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¹¹⁸⁾

이승만과 친한단체들은 1943년 2월 초순경 3·1절을 기해 대대적인 임시정부 승인촉구운동을 준비했다. 이때 3·1절 기념행사로써 1) 백악관과 국무부 앞에서 애도시위(mourning parade)를 벌이고, 상·하 양원의 의원들에게 편지쓰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려했다. 이중 전자는 미국 조야에 협한여론의 형성을 우려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반대로 취소되고, 후자의 방안을 집중 실행하기로 하였다.¹¹⁹⁾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전보나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요청을 하는 방식은 이미 1942년 늦봄경부터 한미협회 임원들이 추진해오던 방식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승만과 친한단체는 1943년 3·1절 제24주년을 기념하여 한미협회의 편지쓰기운동을 재미한인들과 미국인 기독교 신자들에게까지 넓혀갔다. 이러한 방식의 독립운동은 2월 9일 기독교 인천한회가 미국 기독교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상·하 양원 국회의원들에게 임시정부 승인촉구 편지를 보낼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부터 본격도에 올랐다.

주미외교위원부는 ‘제24주년 3·1절 기념에 대하여’라는 2월 15일자 통지문을 재미한인들에게 보내며 “금년 3·1절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하는 전보와 편지를 집중적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지금 와서 미 국회에 우리 문제를 제의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미구에 상·하 의원에서 한국문제가 제출될 터임으로, 한미협회에서 미국 친우들에게 통첩하여 미 국회 상·하 의원들에게 각각 전보나 편지로 우리 한국문제에 대하여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찬성하여 달라고 청요하는 중이니, 우리 동포들도 이때에 단체로나 개인으로나 좌기 상·하 의원들에게 전보로나 편지로나 청요하되, 그 부분(副本)은 위원부로 한 벌씩 부송하기를 바라나이다”고 하였다.¹²⁰⁾ 이때 조만간 미국회에 한국문제가 제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미의원들의 임시정부 승인촉구 결의안 제출작업은 이승만이나 친한단체와 사전 내용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주미외교위원부는 재미한인들이 미의원에게 보낼 편지를 양식과 주소를 예시하기도 하였다. 당시 예시된 의원들은 한국과 동양과 인연이 있는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저드(Walter H. Judd) 미네소타주 하원의원, 패링턴(Joseph R. Farrington) 패링턴 하와이준주 상원의원, 코날리(Tom Connally) 텍사스주 상원의원, 토마스(Elbert D. Thomas) 유

11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19: 주미외교위원부 I』, 92-93쪽.

119)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439쪽.

120)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24호』, 1943년 2월 22일.

타주 상원의원, 킬로어(Harley M. Kilgore)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등이었다. 아울러 하원과 상원의 사무실 주소를 수록하여 두었다.¹²¹⁾ 주미외교위원부가 미의원들에게 보낸 영문과 국문 요청 예시문 중에서 국문 예시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친애하는 의원님

올해 3월 1일 전세계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수립과 임시정부 창립 제24주년 기념식을 축하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망명상태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중정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침략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과거에 일본을 한 번 이상 물리친 유일한 민족이며, 지난 30년간 일본과 싸워온 유일한 민족이고,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입니다. 2,300만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청합니다. 우리의 임시정부를 승인해주시고 우리에게 원조를 제공해 우리가 일본을 물리치는데 있어서 우리 몫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명)

주미외교위원부 드림¹²²⁾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주미외교위원부와 친한단체들이 편지쓰기운동을 활발히 벌인 결과 불과 한 달 사이에 미의원들이 한국실정에 공감을 표하고 또 지역민을 의식하여 미국 정부에 임시정부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고, 미의회에 임시정부 승인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무부에 전화하는 등의 지원조치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응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월 17일 저지(Welter Judge)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미국정부는 반드시 한국정부를 승인해야 한다”고 말하였고,¹²³⁾ 3월 31일 오브라이언 의원은 상·하 의원 합동회의에 임시정부 승인 공동결의안을 109호를 제출했고,¹²⁴⁾ 존 비어(John Bery) 목사와 चेस्넛(B. Chesnutt)의 서한을 받은 오다니엘(W Lee O'Daniel) 텍사스 상원의원은 4월 8일과 4월 9일 국무장관에게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으며,¹²⁵⁾ 4월 22일 와일리(Alexander Wiley) 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은 임시정부 승인촉구를 위한 ‘상원 합동결의안 제49호’를 제출하였다.¹²⁶⁾

이승만과 재미한인들은 이상과 같은 다수의 결의안이 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121)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24호』, 1943년 2월 22일.

122)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24호』, 1943년 2월 22일.

123)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77호(1943.4.15.), 「미국 국회의 我政府 승인문제」, 242쪽.

124) 『주미외교위원부 통신 제34호』, 1943년 5월 19일.

125)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214쪽.

126)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215-216쪽.

후 다수 의결로 통과되기를 기원했다. 이렇게 되면 루스벨트나 국무부로서도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외무위원회는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국무부의 의사를 타진했다. 이때 하원 외교위원장 블룸(Sol Bloom)이 보낸 결의안에 대해 헐 국무장관은 “현시점에서 그러한 결의안의 의회통과는 어떠한 유용한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결의안이나 그와 유사한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혼란과 오해만 가져올 뿐이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승인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¹²⁷⁾

임시정부 승인촉구 결의안은 무산된 후에도 미의원들은 개별적으로 계속 국무부를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다. 카이로회담 직전인 11월 6일 이승만과 킹(William H. King) 유타주 상원의원은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국문제를 담당하는 극동국 국장 발렌타인(Joseph W. Ballantine)과 담당관인 디커버(Dickover), 솔즈베리(Salisbury) 등과 면담을 가졌다. 킹의원에 의하면, 이 방문은 “중경임정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 승인의 적법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극동국의 솔즈베리가 정리한 이승만·킹의원들과 극동국 관리들과의 면담내용은 1) 이승만 등은 임시정부 승인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2) 극동국 관리들은 미하원과 기타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임시정부 승인요청 서한들을 재검토하고, 3) 전쟁부가 한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려중에 있음을 이승만이 극동국에 통지한 것이다. 면담 정리자 솔즈베리는 “발렌타인 국장은 킹의원과 이박사에게 그들의 견해가 국무부 고위관리들에게 호의적인 관심을 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덧붙여 국무부가 한국문제에 관해서 킹의원, 이박사, 기타 인사들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여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¹²⁸⁾ 킹의원을 의식한 행사용 발언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국무부 극동국이 한국문제에서 다소 입장변화를 보인 것은 이승만이 미의원들을 움직여 한국문제를 제기하게 했던 결과로 봐야할 것이다.

넷째, 한인단체와 친한단체를 동원하여 임시정부 승인을 촉구하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개최한 문제이다. 이승만은 1942년 3·1절에 맞추어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했던 대한인총대표회의같은 대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을 수립했다.¹²⁹⁾ 이승만의 소집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대한인자유대회(Korean Liberty Conference)는 이승만이 수장을 맡은 주미외교위원부, 이승만이 조직한 한미협회, 재미동포단체의 통합기구이자 이승만도 관계하고 있던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따라서 이 대회는 이승만의 개최한 행사나 다름없었다.

127) 『미국의 대한(對韓)정책, 1834-1950』, 71-72쪽.

128)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226쪽.

129) 대한인자유대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 II』, 「한인자유대회 회의록」, 3-81쪽 참조.

1942년 2월 27일 오후 7시 반 백악관 근처 라파예트호텔(Lafayette)에서 열린 대한인 자유대회의 개회사에서 이승만은 대한인자유대회의 개최 목적으로 5가지를 들었다. 1) 1919년 혁명을 기념하고 독립선언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며, 2)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1942년의 혁명을 계획하기 위함이며, 2) 미국정부에 임시정부를 승인하도록 요구하기 위함이며, 3) 1942년 1월 1일 28개국이 워싱턴에서 조인한 연합국선언서를 찬성하고 한국도 연합국의 일국으로 정식 승인해 주기를 바라며, 4) 일본의 ‘아시아질서’라는 것을 예의 관찰하고, 한국인의 분열상을 과장하고 모함하는 일본의 선전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모였다고 주장하였다.¹³⁰⁾

대한인자유대회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3월 1일 오후 공식 회의 말미에 이승만·서재필의 정리발언에 이어 이승만이 만세를 외침으로써 회의를 폐회하였다. 저녁 8시 파운드리 감리교회에서 한국독립기원 만찬을 끝으로 회의를 완전히 마쳤다. 이 대회에는 미국 각 지방에서 참가한 100여명의 한인과 워싱턴 정계 인사들을 포함한 미국인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열린 라파예트호텔은 1918년 폴란드독립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였다.

대한인자유대회는 개최일자가 촉박하여 중경과 하와이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미국인 명망가들이 다수 참석했다. 한국인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호와 홍보담당 김용중, 서재필 박사를 비롯하여 장석운·송종익·장기영·황창하 등이 참석했다. 미국인은 한미협회 임원과 이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임원으로는 해리스 이사장, 크롬웰·스태거스·윌리엄스 이사 등이며, 위원으로는 더글라스 아메리칸대학 총장, 윌리엄 박사, 험버트 박사, 피치 부인. 커피 워싱턴주 하원의원, 킹 하와이 과견 하원대표, MBS 시사해설위원 이튼(Richard Eaton) 등이었다.¹³¹⁾ 이는 한국인은 재미한족연합회 인사들과 이승만의 측근 인사들, 외국인은 거의 모든 인사들이 이승만이 조직한 한미협회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한 한국인과 미국인들은 연단에 서서 미국 행정부를 향해 1882년에 체결된 한미조약 정신에 따라 임시정부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1) 민족과 국가의 자유가 쟁취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 2) 임시정부에 대한 진심 어린 지지와 지원을 계속할 것, 3) 미 국무부에 제출한 임시정부의 승인절차를 지지하며 국무부가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합법적 구성원임을 공포해줄 것, 4) 미대통령은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한국을 연합국의 일원으로 정식 받아줄 것, 5) 미 의회에 임시정부 승인을 청원할 것 등 5가지를 결의했다. 아울러 이 결의문을 중·영·소 및 기타 필요한 인물이나 정부에게 발송기로 하였다.¹³²⁾

130)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129-130쪽.

131)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한인자유대회 회의록」, 3-81쪽.

132)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20: 주미외교위원부Ⅱ』,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130-131쪽.

대회 마지막날 회의는 국무부 혼백 정치고문과 극동국의 랭던(Willioam Langdon) 참관했다. 그런데 랭던은 대회참관 보고서에서 출석자도 많았고, 언론홍보도 잘 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저항이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나 조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한국의 독립을 보호하지 못한 미국의 속죄를 촉구하는 주장이 많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미국인 명사들과 함께 임시정부 승인대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1919년 4월 필라델피아회의 이후 한국인들이 미국 동부에서 대규모로 개최한 대중 집회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회 실황이 윈크스(WINX) 방송국을 통해 미국 전역에 중계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사회에 한국독립문제를 환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1943년 4월 8일 주미외교위원부, 한미협회, 기독교인친한회 3개 단체 공동으로 임시정부 수립 24주년을 기념하여 대규모 기념행사를 워싱턴 아메리칸대학교 교정에서 개최하였다. 아메리칸대학교는 한미협회 이사이자 기독교인친한회 회장인 더글라스가 총장을 맡은 대학으로 한국의 벚나무를 심은 것으로 유명한 대학이다. 행사 주최측은 루스벨트 영부인 엘리노 여사를 초청했으나 참석하지는 않았다.¹³³⁾

4월 8일 아메리칸대학교 행사는 1년전 한미협회가 미국 내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포도막원의 벚나무가 일본 벚나무가 아니라 한국 벚나무임을 통지하여 바로잡은 것을 기념하여 아메리칸대학교 교정에 벚나무 4그루를 기념식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사에는 더글라스가 사회를 보고 이승만과 한미협회 회장 크롬웰이 연설하고 대학교 합창단 50명이 애국가를 불렀다. 300여명의 교민과 혼백 국무성 정치고문의 부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참석하였다.¹³⁴⁾ 미국언론이 이 행사를 널리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루스벨트 대통령과 관계가 긴밀한 인사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한국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은 문제이다. 이승만은 위에서 살펴본 공적 채널 외에도 사적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독립문제를 미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루스벨트에게 한국문제에 관하여 이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을 인사로는 루스벨트의 부인인 엘리너(Anna Eleanor Roosevelt) 여사, 파운드리감리교회 담임목사이자 상원 원목인 해리스 목사, 그리고 뉴욕 페트릭대성당의 스펠만(Francis J. Spellman, 1889-1967) 대주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엘리너 여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의 조카딸이다.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적십자사를 위해 봉사하였고,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으로서 인도주의 활동으로 명성을 얻어 정치와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역할모델이 되었던 인사였다.

133)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30호』, 1943년 3월 31일.

134) 『주미외교위원부통신 제31호』, 1943년 4월 8일.

그녀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루스벨트 측근 중의 측근으로서 누구보다도 루스벨트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역량과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다.

이승만은 1941년 8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자신의 베스트셀러 『일본내막기』가 출판되자 책에 친필로 서명한 후 루스벨트 대통령, 엘리너 여사, 혼백 국무부 특별고문, 홉킨스 대통령 보좌관 등에게 발송했다. 당시 혼백은 그 책을 읽고 오류사항을 이승만에게 알려주었다. 이를 보면, 아마 한국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제인권운동가인 엘리너와 1940년대까지 뉴욕의 사회사업가였다가 루스벨트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독실한 감리교 신자인 홉킨스는 같은 감리교 신자인 이승만의 책을 주의 깊게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¹³⁵⁾

1940년 일제의 양곡공출정책으로 인해 한국에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이 소식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전역의 신문에 보도되었다. 이에 미주한인들은 본국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시민들을 대상으로 구호금 모집에 들어갔다. 당시 대통령 부인 엘리너 여사는 주 1회 라디오방송에 출연하고 매일 일간신문에 기고하여 한국의 기근사정을 알리며 기부를 호소했다. 엘리너의 호소에 따라 자진하여 한국인을 돕고자 구호금을 내는 미국인이 부쩍 늘어났다. 그렇게 모은 구호금은 한국의 미국대표부를 거쳐 피해가 극심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었다.¹³⁶⁾ 아래는 당시 엘리너의 기부금 호소문이다.

세계에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멀리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적십자사에 수표를 보내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기다가 ‘한국인들을 위함’이라고 표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집도 없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이 꿈에 선하여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¹³⁷⁾

엘리너 여사는 한국 이재민 구호사업을 헌신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한국문제에 대해 분명히 기본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2년 2월 23일 방송연설에서 한국민이 일본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대서양헌장이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말한 배경에는 엘리너의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이 깔려있었다고 판단한다.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은 1945년 3월 9일 부인 프란체스카와 함께 엘리너를 만나 임시정부 승인과 군사원조 제공을 부탁한 일이 있었다. 이승만은 진주만사건부터 해방 전까지 워싱턴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외교독립운동을 벌였으나 대통령은

135)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59쪽.

136) 이승만 저, 류광현 역,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Japan Inside Out), 비봉출판사, 2015, 219-220쪽.

137)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219쪽.

만나지 못하고 그 대신 그 부인은 만난 셈이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가장 신망 있는 종교인 두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고 그들로부터 한국독립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얻어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사회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의 명망과 위상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한미협회 이사장인 해리스 목사와 뉴욕 패트릭대성당의 스펠만 대주교였다. 이중 스펠만 대주교는 강력한 반공사상과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이면에서 도운 중요 인사 중 한 사람이었다.¹³⁸⁾

한미협회의 이사장을 맡았고 기독교인친한회에도 관계한 해리스(1883-1970)는 저명한 감리교 목사로서 독실한 감리교도인 루스벨트 대통령과 홉킨스 보좌관에게 종교적·정치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는 1943년 1월에도 한미협회 이사장으로 올라 있었으나 1942년 4월 후 실제 활동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한미협회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로비단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1924년 워싱턴 파운드리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 임명되어 1955년까지 30년간 시무한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시무한 파운드리교회는 진주만사건 직후 루스벨트가 미국을 방문한 처칠과 함께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워싱턴 정가와 긴밀한 관계였다. 해리스는 1942년 10월 10일 연방 상원의 원목에 취임하여 정치적 비중을 지닌 인사로 부상하였다. 이를 통해 해리스는 이승만이 원하는 임시정부 승인문제와 한국독립문제를 미국의 정·부통령과 상원의원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이승만은 1939년 11월 워싱턴으로 이주한 후 이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해리스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1952년 한국 방문 시에 해리스는 이승만의 위대성으로 투철한 애국심, 전세계를 위한 자유, 철두철미한 반공주의 등 3가지를 들었다.¹³⁹⁾ 해리스는 미의회 상원의 원목이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한미협회나 기독교인친한회를 통해서보다 개인적인 이면활동을 통해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

스펠만은 미국 보스턴 대교구 보좌주교를 거쳐 1939년부터 뉴욕대교구 제6대 대교구장을 거쳐 1946년에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건국운동 및 이승만 정부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이승만과 김구의 독립운동을 이면에서 도왔고, 미군정기에 종군교구장 자격으로 한국을 자주 방문하여 미군정 관료들과 미군을 위로했으며, 대한민국 건국 직후는 물론 6·25전쟁기에도 매년 성탄절 직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미군과 유엔군을 위무하였다.

한국 천주교계에서 최초의 한국인 주교인 노기남 주교는 1945년 11월 5일 환국환영인사를 드리고자 이승만을 예방했다. 이때 이승만은 “내가 프로테스탄트이지만, 미국에 있

138) 문시눌, 「한국 건국에 美國 Spellman 추기경과 中國 우뱌(于斌) 대주교, 한국 노기남 대주교의 잊혀진 활동 略史」(1913.4.14.). “변기영 문시눌 사랑방:한국천주교회 창립사.”

139) 해리스 「이승만의 인품」, 공보실 편, 『세기의 위인』, 1956, 3-4쪽.

을 때 미국 가톨릭주교들, 특히 스펔만 대주교는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프로테스탄트보다도 더 적극 협조해 준 좋은 친구들이었소!”라고 미국 천주교의 공헌을 칭송했다.¹⁴⁰⁾ 노기남이 11월 30일 이승만을 명동성당 주교관으로 초빙하여 환국 환영만찬회를 열었는데, 이때도 이승만은 “미국내에서도 조선독립을 가장 주창한 것은 다른 어느 교파보다도 가톨릭교회가 제일 열렬하였다”고 말했다.¹⁴¹⁾

이승만의 발언을 보면, 미국 가톨릭계, 그중에서도 이승만과 친했던 뉴욕의 스펔만 대주교가 한국 독립운동운동에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상식과 달리 미국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지지·후원하는데 있어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열성적이었던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한국독립운동과 카이로선언에 끼친 스펔만의 영향은 아래 김구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1945년 12월 8일 성모무염시대 축일에 노기남 주교는 명동성당에서 김구·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를 표하는 환영 및 감사 미사를 드렸다. 이날 행사 중에 김구는 공개석상에서의 답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독립을 지원해준 장개석 총통과 그 정치 고문인 우빈(于斌) 대주교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였다. 나아가 김구는 “카이로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해외특사로 활약하던 스펔만 대주교의 성원이 지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를 보면 당시 카톨릭 신부들은 공산주의를 막고 신교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반공사상에 따라 중국에서는 우빈 대주교가, 미국에서는 스펔만 대주교가 한국독립을 후원하였고, 스펔만은 카이로회담 당시에 루스벨트의 해외특사로도 활약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1943년 12월 1일의 카이로선언은 열강이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공인한 국제적 선언이었다. 이 선언에는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독립조항이 실려있다. 이 독립조항은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을 보장한다고 하는 단서가 붙은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수십 년간에 걸친 독립운동세력의 피어린 항일투쟁을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카이로회담의 주역인 루스벨트와 장개석은 회담준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독립은 시켜주되 신탁통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유하고 있었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중국은 김구와 임시정부로부터, 미국은 이승만과 친한단체로부터 끊임없이 한국독

140) 노기남, 『나의 회고록』, 가톨릭출판사, 1969, 321-322쪽.

141) 『경향잡지』, 「이승만박사 노주교방문」, 1946년 10월호, 33쪽.

립과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임시정부 불승인방침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양국은 회담 개최 이전쯤에 각자 한국을 독립시켜준다는 방침에 도달했다. 따라서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회담 당시에 미·중 양국의 협상에 의해 처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회담 전에 이미 양국이 구상해온 열개를 회담을 통해 마무리지는 것이다.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조항이 들어간 것이 과연 누구 공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통설은 김구가 장개석을 움직여 한국독립조항이 선언문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한국독립조항은 김구와 임시정부의 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장개석 회담 당시 한국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루스벨트였고, 장개석은 루스벨트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을 뿐이며, 오히려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카이로선언문은 루스벨트의 지시로 홉킨스가 기초한 것인데, 이때 중국은 미국측의 초안에 실린 신탁통치 관련 구절('in due course')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이로회담에서 한국독립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중국은 한국의 즉각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미국이 기초한 신탁통치 구절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장개석-김구의 공헌을 강조하는 기왕의 통설은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카이로회담 이전 미국이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이승만은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독립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미국정부에 수십 차례 서한과 전보를 보내 임시정부 승인을 요청했고,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같은 친한단체를 조직하여 한국독립을 위한 로비·선전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이게 했으며, 재미한인과 미국인 기독교도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에게 임시정부 승인 촉구 편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대규모 독립행사를 개최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미국사회에 널리 알렸으며, 루스벨트의 대한정책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핵심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한국독립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대미독립외교는 국무부가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가 상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치밀하고 강렬했다. 실로 이승만의 대미독립외교가 미국정부의 대한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주만사건 후부터 카이로회담 전까지 미국의 이승만과 중국의 김구는 임시정부 승인과 한국의 완전독립을 위해 각기 미국정부와 중국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외교독립운동을 벌였다. 이때 양인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과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광복대업을 실현하려 하였다. 이승만과 김구는 그들이 속한 지역의 정부를 상대로 최선을 다하여 독립활동을 펼쳤는데, 이들의 독립활동이 결국 미국정부와 중국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일본 패망 후 한국을 독립시켜주겠다는 한국독립조항으로 승화되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기에 이승만과 김구가 보여준 지원과 협력 관계는 한국독

립운동사를 분열과 파쟁의 역사가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역사로 파악할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요컨대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조항은 넓게 보면 루스벨트-장개석의 합작품이지만, 좁게 보면 이승만-김구의 합작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발제 3>

이승만과 대한민국의 건국

박명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서울신대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한반도의에 나타났던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그 이전의 어떤 국가와도 다르다. 대한민국 이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국가는 군주국가였다. 임금이 주인이 되는 국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에는 왕이 없다. 그리고 세습도 없다.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를 임기 안에 통치한다. 이런 국가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 땅에 만들어졌다.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데에는 두가지 요인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미국의 역할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미국은 세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였고, 그 새로운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였다. 비록 소련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소련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수용한 만큼 겉으로 볼 때 새로운 세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오래 전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알고, 한반도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꿈꾸 지도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이승만이다. 그는 해방 후 귀국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해서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승만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다. 우선 큰 틀에서 이 둘은 다같이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 둘은 미국의 자유민주적인 질서가 한반도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승만과 미국은 구체적인 부분에 갈등관계를 갖고 있다. 해방 직후 미국, 특히 국무부사람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소련과 함께 자유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알타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은 영국보다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소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다.¹⁾ 하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소련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내심은 공산주의를 확산하고

1) 미국은 1945년 2월 알타회담에서 한반도의 신탁문제에 대해서 일본보다 소련과 먼저 상의했다. 제임스 I. 매테레이, [한반도 분단과 미국] (을유문화사, 1989), 42.

자 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련과 타협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런 미국과 이승만의 차이 때문에 해방 직후, 특별히 모스크바 외상회의 이후 미소공위 기간 동안에 이승만과 미국은 갈등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소련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1947년 트루만독트린으로 분명해 졌으며, 이것은 미소공위체제의 폐기와 더불어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승만은 공동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과 이승만이 같은 입장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과 이승만은 많은 갈등을 갖게 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승만이 해방 전후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를 규명하고, 이것이 해방직후, 미소공위 기간, 유엔결의 후, 그리고 5.10 선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에 앞서 이승만이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를 정리해야 한다.

I. 이승만의 건국구상: 독립, 민주, 통일국가

이승만이 어떤 나라를 꿈꾸었는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는 독립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다. 이승만이 말하는 독립국가는 단지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베스트팔렌 조약에 나오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근대국가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다. 이승만은 당대의 누구보다도 만국공법을 잘 알고 만국공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²⁾ 우리가 3.1 운동의 각종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민족은 국제사회와 국가간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중국의 중화질서도 일본의 대동아질서도 거부하고, 근대적인 주권국가를 꿈꾸었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은 근대적인 독립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독립국가는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이승만은 이런 독립국가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수많은 서양의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국가형태는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3.1 운동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승만은 1919년 4월 미국에서 상해에 전보를 보내 미국식 정부형태를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³⁾ 이것은 그가 1945년 7월 포츠담회담에 열리고

2) 이승만은 1910년 귀국하여 YMCA에서 만국공법을 가르쳤다.

3) 3.1 운동 당시 임시현장에 나타난 민주주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박명수, “일손의 민족자결주의가 대한민국 임시현장에 미친 영향: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국가건설,” 『성경과 신학』 91(1919.10) 참조. 박명

있을 때, 트루만대통령과 영국, 소련수상에게 임시정부를 인정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해 줄것과 함께 “우리의 한국 환국 후 1년 이내에 전국 총선을 실시하여 1919년의 서울선언(the Seoul Proclamation of 1919)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형태의 정부를 수립하기를 원하며”, 정부수립 다음에는 유엔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⁴⁾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은 이승만에게 또 다른 과제를 가져왔다. 그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이승만은 한반도가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먹이감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소련의 참전 대가로 한반도를 소련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얄타 밀약설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의 분할점령을 보고 이것은 남북분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승만에게는 독립, 민주, 이외에 또 다른 목표, 즉 통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승만은 1945년 8월 15일 소련 스탈린에게, 21일에는 영국의 애틀리와 중국의 장개석에게, 8월 27일에는 미국의 트루만에게 전보를 쳤다. 이승만은 네 나라 정상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국가는 “하나의 통일, 민주, 독립한국”(A United Democratic and Independent Korea)이라는 것이다. 이승만은 만일 이런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소련에게는 안보를 위한 보호장치(Safeguard), 영국에게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평화안전관(peace stabilizer)”, 중국에게는 “충성스러운 동맹”(faithful ally)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미국에게는 현재와 같은 공동점령은 언젠가는 내전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미군의 단독점령을 원하며 공동신탁통치나 어떤 위원회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승만은 8월 15일 소련에 보낸 전보에 응답이 없자 영국과 중국에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아울러서 이승만은 한국이 독립된 민주국가가 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직 미국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여기에서 이승만은 친미, 결중, 연영, 반소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⁶⁾

수는 이 논문에서 미국의 교포들은 이승만을 통해서 상해의 현순에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헌장 초안 1항에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a democratic Government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대한공화국은 미국의 정부를 모방하여 민주정부를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895.01/7-214-5:Telegram. “구미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이 트루먼대통령에게(1945.7.21.).” *FRUS* 1945. VI: 1031.

5) 『해방공간관련문서』 (이승만연구원 소장) A 9041-44 참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명수, “해방 직후 이승만의 민주통일국가 건설운동과 정읍선언,” [6.3 정읍선언 77주년 기념학술세미나] (한국프레스센터, 2023년 5월 23일), 19-21.

6) 이승만은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소련에 대항하여 영, 미, 중과 함께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전국이 결심을 표명할 시에는 영, 미, 중 각국은 절대 동정할 줄 믿는다.” “이승만박사 결의, 윤석오 증언,” 『동아일보』 (1945년 12월 29일).

II. 해방 직후 이승만의 건국구상

이승만이 귀국해서 가장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독립국가 건설이다. 이승만은 1945년 해방이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우리에게 해방은 주었지만 아직 독립은 주지 않았다, 이승만은 카이로 선언에 나타난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라는 말이 바로 신탁통치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인은 분열되어서 즉각 독립할 수 없으며, 일정한 기간동안의 신탁통치 기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교육시킨 다음에 민주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45년 10월 20일이다. 미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는 미국은 극동 정책을 수행하는데 소련과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조선은 다년간 일본에 예속되었던 관계로 지금 당장 자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우선 신탁관리제를 실시하여 그 간 조선민중의 독립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을 제창한다.”고 밝혔다.⁷⁾ 이승만의 건국운동의 핵심은 이런 미국의 우려를 극복하고 바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될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상황에서 이승만이 1945년 10월 중순 귀국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이다. 이승만은 일본에서 맥아더와 그의 참모들과 함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국제사회에 자신의 독립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 독립을 위한 기구로 발전시키려 하였다. 사실 맥아더는 미국무부과는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맥아더는 모든 동물은 자기 나름대로 자치능력이 있는데, 왜 한국인이 자치능력을 갖지 못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했다. 실제로 맥아더는 일본의 자치능력을 인정하고, 일본에게 자치를 허락하였다. 이승만은 귀국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인의 독립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박헌영과 임시정부의 비협조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김구와 함께 독립촉성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였다.

이승만이 귀국해서 가장 먼저 부딪혀야 했던 과제는 바로 민주주의 문제이다. 이승만은 박헌영에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정당이 다 하나로 뭉칠 것을 요청하였다. 심지어 그는 공산주의자들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10월 29일 이승만은 박헌영과 처음이자 마지막인 회담을 하였다. 이승만은 공산당 이외의 모든 단체가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헌영에게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박헌영은 친일과를 제거하고, “나라 안팎의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을 결집시켜 민족통일전선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승만의 요청을 거부하였다.⁸⁾ 여기에서

7) “미국무부 극동과장,미외교정책협의회에서 조선에 신탁실시 제창,” 『매일신보』 1945년 10월 23일.

8) “독립촉성/전선통일에 이박사와 박헌영씨 의견일치,” 『매일신보』 1945년 11월 2일. 해방정국의 좌익이 주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은 초기의 유화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력한 반공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승만은 모스크바외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12월 17일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아울러서 박헌영이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마치 자신들을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민심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소련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정체 하에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통일문제이다. 이승만은 해방과 더불어 큰 과제로 등장한 38선문제의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승만은 귀국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38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만든 것인 만큼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반도는 마치 한 몸과 같아서 둘로 나누어지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분단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단된 몸으로서 어찌 생존하여 적당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¹⁰⁾ 여기에 대해서 박헌영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 연합국의 반감을 일으킬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련과 미국은 조선독립을 국제회의에서 신성하게 약속하여 준 나라요... 연합국에 대하여 반감을 사게 될 염려가 있는 내용을 가진 결의문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다.”¹¹⁾ 이승만은 38선 철폐를 주장하였지만 박헌영은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다.¹²⁾

이승만은 단지 38선 철폐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한반도에 한국인이 주도하는 중앙정부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래서 북한에 사람들 보내서 조만식을 통해서 이승만, 김구, 조만식, 김일성 4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주장은 김일성에 의해서 거부되었다. 스티코프 일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³⁾

그[조만식]는 11월 15일 김일성과의 대답에서 “이승만, 김구, 김일성 등을 포함하는 중앙정부의 수립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식은 이러한 정부의 수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서울방문 계획을 김일성과 협의했다. 김일성은 “인민의 참여에 기초해서 밑으로부터 정권기관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변했지만 조

장하는 민주주의 전반에 관해서는 이강국 외, 『민주주의 12강』 (문우서관, 1946) 참조.

9) “이승만,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 방송,” 『서울신문』 (1945년 12월 21일).

10) 「이승만 기초 결의문 전문(4연합국과 미국민중에게 보내는 글)」, 『자유신문』, 1945년 11월 3일.

11) 「조공, 독촉중협 비판성명」, 『매일신보』, 1945년 11월 4일.

12) 박명수, “해방직후 우익민족주의자들의 38선 철폐 운동과 한반도 분단에 대한 좌익의 입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1(2019).

13)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363에서 재인용.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1945년 11월에는 인민의 참여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정권기관을 주장하며 남북지도자 모임을 만대한 김일성이 1948년 4월에는 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규식의 민족지도자 회담을 주선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식은 “12월 1일 이전에 중앙정부를 수립해서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식은 “김일성이 점령군의 철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승만은 해방 직후 귀국하여 독립, 민주, 그리고 통일국가를 세우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통한 반탁운동,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 그리고 38선을 철폐하고, 자유왕래를 주장하는 통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III. 모스크바 외상의 결의와 이승만의 건국운동

1.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과 문제점

해방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대책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회담이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3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한반도를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둘째, 독립시킨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를 만들 것인가? 셋째, 미소가 분할한 38선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넷째, 누가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모스크바외상회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모스크바 외상의 결정문은 다같이 한반도에 독립정부를 세운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신탁통치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군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세우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원래 미국정부가 추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신탁이라는 말 대신에 후견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소련은 먼저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정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후원한다는 것이다. 소련은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미 북한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후원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따라서 소련은 먼저 인민위원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미국은 군정체제의 확립에 강조점을 두었다.

둘째, 이 회담의 결정문은 6번이나 민주주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그 민주주의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다같이 자신들을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두나라는 민주주의를 달리 이해했다. 미국은 어떤 특정 계급의 제외없이 모든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반면에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소자본가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하는 인민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소련은 토지의 분배등 인민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이 민주주의적인 정당이나 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은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소련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모스크바외상 회담에서 38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소련은 이 문제를 중요이슈로 삼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미국은 원래 미군과 소련이 일본군 무장해제를 한 다음에 중앙정부를 만들 것을 주장했지만 소련은 이 문제를 예비회담에서 남북교류의 차원에서 다루자고 했다. 결국 소련의 주장이 통과되고 말았다.¹⁴⁾ 소련은 38선 철폐문제가 토론의 의제가 되는 것조차 반대했다. 예비회담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본국에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제 1차 회담 마지막에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소련은 여기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했다.¹⁵⁾

넷째, 해방 후 한반도문제를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모스크바 외상회담은 이 문제를 미국과 소련에게 맡기고, 미국과 소련은 이 문제를 한국인 정당이나 사회대표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다루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1:1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소련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1:1의 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협의회의 구성이다. 만일 협의회에 친미민주주의 세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산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가장 중요한 과제는 협의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독립국가 건설과 신탁통치 문제

귀국 직후 추진했던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맥아더와 하지에게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이들은 이런 입장을 미국 해군부와 전쟁부를 거쳐서 미 국무부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모스크바 외상회담에서 이런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신탁통치가 결의되었을 때 주한미군도, 한국인도 그것이 미국이 주도한 것인지를 몰랐다. 오히려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생각했다. 미군과 한국인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은 1946년 1월 하순, 모스크바 타스통신의 보도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반소와 반탁을 동의어로 생각했다. 그것은 소련이 미국보다 강력하게 신탁통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일제 시기 한국인이면 누구나 공감했던 단어는 독립이었고, 신탁통치는 이것을

14) 박명수, “‘중앙집권화된 행정부’와 한반도의 분단,” 『역사와 실학』 62(2017); 박명수, “한반도의 분단과 모스크바 외상회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2020) 참조.

15) 740.00119 Control (Korea)/5-946: Telegram, “하지 중장이 국무부 장관에게,” 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 665-667.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김구와 더불어 반탁운동에 앞장섰다. 원래 공산당도 반탁운동을 했지만 소련의 지시로 찬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찬탁/친소세력과 민주주의/반탁/친미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미군정은 겉으로는 신탁통치를 지지했지만 반탁세력이 반소세력임으로 반탁운동을 강력하게 제지하지는 않았다. 반탁운동은 해방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반소/반공세력이 집결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우익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불분명하던 전선이 분명하게 되었고, 일제 강점기 독립을 추구하던 한국인들은 반탁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하지만 소련은 이것을 이용해서 반소세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원래 소련은 이승만과 김구가 반소인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은 이들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반탁운동을 하는 사람은 모스크바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임으로 협의대표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4월 미국과 소련은 소위 5호 성명을 통하여 한반도에 민주주의적인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 반탁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승만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신청서를 냈다. 이렇게 우익 단체들의 수가 많아지자 소련은 다시금 가입 후에는 반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이승만과 김구는 동의할 수 없었다. 결국 제 1차 미소공위는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은 한때 이승만과 김구를 제외하고 김규식과 여운형을 내세워서 소련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1947년 3월 트루만독트린으로 인해서 대소봉쇄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승만과 김구를 협의대표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이승만과 김구는 끝까지 반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반탁의 입장을 포기하고 협상대표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이승만과 김구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평생 조선의 독립을 외쳐온 그들에게 탁치를 수용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승만은 신탁통치를 수용하는 박헌영과 김일성을 오히려 자신의 조국을 소련에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비판하면서 소련이 자신들의 조국이면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비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과 김구는 민족적인 대의명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승만은 제 2차 미소공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반탁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한민당조차도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소공위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미국은 이승만과 김구가 참여하지 않은 협의회는 필연적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제 2차 미소공위의 실패를 선언하였다.

결국 뒤에 언급하겠지만 협의대표 구성문제로 역시 제 2차 미소공위도 결렬되게 되었다. 미국은 이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신탁통치를 포기하고 곧 바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다. 미국은 제 2차 미소공위를 진행하면서 한국인들은 오래동안 일제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신탁통치는 곧바로 일본의 을사보호조약과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한

다고 하면서 신탁통치를 포기하였다. 이승만은 원래부터 주장했던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일관성을 지킬 수 있었다.

3. 어떤 민주주의인가?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

신탁통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민주주의이다. 1946년 1월 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하부조직에 보낸 서신에 의하면 모스크바결정은 카이로선언보다 더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모스크바 결정문에는 카이로선언에 나오는 자유와 독립 가운데 자유가 삭제되었다. 주소 미국대사 해리만은 소련에게 있어서 모스크바결정문에 나오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소련의 주장에 의하면 미소공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친소단체들이며, 여기에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반소인사들과 각종 건전한 시민계급을 친일파라는 명목으로 제외시키는 것이다. 소련은 당시 한반도에서는 부르주아와 친일파를 동일시하여 건전한 시민들을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미국이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946년 여름 미국 특사 폴리에 의해서였다. 그는 소련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반면에, 소련식 민주주의는 복지, 즉 분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폴리대사는 지금 한반도는 지금 미국과 소련의 이념 전쟁터가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미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이런 민주주의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1947년 제 2차 미소공위를 앞두고 미국 국무장관 마셜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는 제 1차 미소공위가 실패한 것은 “불행하게도 미소공위의 노력은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정의내리는데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금새 정체되었습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지를 않았다.¹⁸⁾

제 2차 미소공위 기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이승만이다. 그는 김구와 함께 5월 23일 미소공위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다.¹⁹⁾

16) 『동아일보』(1946년 5월 22일, 23일);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 연구』(청계연구소, 1989), 181-183.

17) 740.00119 PW/7-346, “에드윈 W. 폴리 대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1946. 6. 22); 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 706-710.

18) 740.00119 Control(Korea)/4-247: Telegram: “미소공위 재개를 위한 국무장관과 몰로토프 간의 협의할 내용에 대해 설명,” 모스크바, (1947년 4월 2일 오후 4); FRUS 1946. The Far East Volume VIII, 623-625. (밑줄은 필자의 강조).

19) “이승만-김구, 공위에 ‘신탁’해석과 ‘민주’정의에 관해 질의,” 『동아일보』(1947년 5월 23일).

미소양국이 한국에 민주주의적 독립정부를 수립하기로 목적을 삼는 바 민주주의라는 명사에 2종의 구별이 있으니 소련이 주장하는 민주정체가 하나이요 미국에서 실행되는 민주정체가 또 하나이다. 이 두가지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 두 정체를 혼잡해서 정부를 수립하면 장래 정부의 분열과 국내의 혼란을 면키 어려울 것이요 열국의 기대에 어그러지게 되는 까닭이다. 우리는 ---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기까지 공위협의를 참가하기를 보류하는 바이다.

1947년 5월 24일 이승만, 김구, 오세창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스럽고 공정한 선거로 결정된 다수파의 지배를 의미하되 소수파에도 언론자유와 반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련식 민주주의는 그 결과에 있어서 특정계급에 한하여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기존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권리를 인정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권이 외국의 간섭에 의하여 침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민 대다수를 정당히 대표하는 동시에 소수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한인최대의 조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⁰⁾

결국 미소공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소련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특정계급을 배제하고, 특정계급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3.1 운동 당시부터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4. 38선 철폐문제와 통일운동

미국으로서는 모스크바 회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하지만 소련은 이것을 거부하고, 대신 남북교류를 의제로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1946년 1월 26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에서 38선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통일회담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남한의 많은 단체들은 38선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왕래 가운데서 남북임시정부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임시정부와 한민당, 특히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은 38선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련은 38선 철폐자체를 거론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단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전기와 남한의 식량을 교환하는 정도의 논의를 하였고,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 “반탁투쟁위원회, 공위에 탁치와 민주원칙에 대한 해석 요망,” 『조선일보』 (1947년 5월 25일). 밑줄은 필자의 강조.

원래 미국무성은 1945년 8월 하순에 한반도에 중앙행정부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²¹⁾ 하지만 소련의 반대로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북한에 1946년 2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자 여기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2월 14일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을 만들었다. 미국과 이승만은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한반도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승만은 한편으로는 민주의원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 같이 38선 철폐와 더불어 북한의 지도자와의 대화를 주장하였다.²²⁾ 특별히 이승만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조만식과 연계해서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북한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였다.

1946년 3월 제 1차 미소공위가 열리자 이승만은 민주의원을 중심으로 미소공위에 참여하여 38선을 철폐하고, 조만식과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하였다. 이런 이승만의 꿈은 3월 14일 그의 연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 의원은 미소공위에 참여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38도선을 먼저 철폐하여 정치상 토의에 南北이 간격이 없게”하고, 더 나가서 “北道の 우리 모든 유력한 引導者들 중 曹晩植氏와 기타 某某氏와 함께 모여 앉아서 이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를 원합니다.”고 말했다.²³⁾

하지만 제 1차 미소공위는 이승만이 원하는데로 진행되지 않았다. 소련은 38선 문제는 언급하지도 못하게 하고, 동시에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통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의회대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4월 8일 기자회견에서 남북임시정부수립의 전제조건이 38선 철폐인데 이것이 소련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4월 중순 양측의 극적인 타협에 의해서 소위 5호성명이 제출되었고, 여기에 의하면 민주정부수립에 동의한다면 반탁은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 이승만은 다시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이승만은 38선 철폐를 미루고 남북한 정부가 먼저 수립되고, 그 정부에 의해서 38선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²⁴⁾ 이승만은 비록 38선이 철폐되지 않더라도 조만식을 비롯한 남북지도자들이 모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다면 이것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소련은 5호성명의 약속을 파기하고, 이승만과 김구를 반탁을 이유로 협의대표에서 제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마지막으로 다시 38선 철폐문제를 제기하였고, 이것으로 5월 초 제 1차 미소공위는 휴회되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선언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승만은 선 38선 철폐, 후 중앙정부수립을 주장했으나 5호 성명을 전후하여 선중앙정부 수립, 후 38선 철폐로 입장을 수정하였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1) 여기에 대해서는 박명수, “‘중앙집권화된 행정부’와 한반도의 분단,” 참조.

22) “이승만, 민주위원의 중대성에 대한 담화 발표,” 조선일보 1946년 02월 19일.

23) “이승만, 미소공위회담 진행을 지켜보자고 방송,” 『조선일보』 (1946년 3월 14일). 밑줄은 필자의 강조.

24) “이승만, ‘워싱턴 스타’지에 조선문제 기고,” 『서울신문』 (1946년 4월 16일).

이승만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였다. 그것은 남한에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38선 이북의 소련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하겠다는 것이다.²⁵⁾ 이승만은 결코 여기에서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승만은 결코 통일을 부정하지 않았다. 단 통일정부는 만드는 출발을 남한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5. 협의대표 구성의 실패와 이승만의 새로운 통일방안

이미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해방 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에게 위임되었고, 미소는 민주주의적인 정당과 사회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소련은 이 협의단체에 반소적인 인물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먼저 북한에서 조만식을 회유하여 친소인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자 호텔에 연금시켜 버렸고, 남한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반탁을 이유로 협의대표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은 표현의 자유이며, 따라서 반탁주장을 근거로 협의대표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을 제외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련은 이들이 협의대표가 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은 미소공위를 통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미국이 먼저 미소공위의 실패를 주장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2차 미소공위를 제안하였고, 여기에서 다시금 민주주의문제와 협상대표문제를 제기하며 소련에게 양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결국 이런 입장 차이는 양측 회담의 결렬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 미국측 대표 브라운은 만일 미국이 소련측의 입장을 수용하면 결국 인민위원전선이 주도하는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²⁶⁾

美國이 현재 共同委員會에 제안되어 있는 蘇聯의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 결과는 압도적으로 인민전선파가 우세한 장래의 朝鮮정부를 조직하게 될 것이다. --- 蘇聯의 제안은 근본적으로 反託鬭爭委員會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남조선의 24 우익정당을 협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북조선에서 협의를 신청한 25 정당 사회단체는 전부 인민전선에 가입하고 있으며 蘇聯이 지원하는 북조선과도인민정부의 대표자들이다. --- 美國대표는 항시 충분한 자유주의를 주장하여 왔다. 美國대표는 협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를 蘇聯대표가 일방적으로 제외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대표의 유일한 목적은 조

25) “이승만, 정읍환영강연회에서 단정수립 필요성 주장,” 『서울신문』 1946년 06월 04일.

26) “브라운, 공위 업무수행상태에 관해 연명,” 『조선일보』 (1947년 08월 02일).

선민민의 의사를 반영한 朝鮮의 건설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항복의사 표현 직후 38선을 먼저 제안한 것은 미국이지만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적전선을 남북통행을 금지하는 경계선으로 바꾸어버린 것도, 북한에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도, 그리고 통일을 위한 협의기구를 친소인사 및 중립적인 인물로만 구성하려는 것도 다 소련의 작업이었다. 이승만은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런 노력들은 실패로 끝나고,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남한에 먼저 임시정부를 세워 그 단합된 힘을 가지고 소련을 몰아내서 자유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IV. 유엔총회의 결의와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1. 미소공위에서 유엔총회로: 이승만의 독립운동의 승리

이승만은 모스크바 결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소련에게 너무나 많은 지분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서 이승만은 한반도문제를 한국인들과 상의없이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하에 통치해야 한다”는 서구민주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며 한국인의 참여없이 이루어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승만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승만은 1946년 미국 12월 그의 도미 중에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모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의하면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유엔의 감독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세워야 하며,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 남한에서 관선의원이 없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남한에 임시정부를 세워야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 정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부는 소련과 통일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이런 이승만의 입장은 미국정부에 전달되었고, 1947년 3월 5일 미국무부의 힐드링차관보는 이승만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미소공위를 파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회담을 해야 했다. 결국 미국은 제 2차 미소공위에서 다시 한번 소련을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갔다.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면서 지금까지 해방정국에서 중요한 두가지 문제, 즉 신탁통치와 임시정부수립을 포기하고,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오래

27) “Mr. President (December 17, 1946)”, [해방공간관련문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장), A- 0887.

동안 이승만이 주장하던 것이었다.²⁸⁾

1947년 봄, 미국은 미소공조 체제를 끝내고, 소위 트루만독트린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이어서 같은 해 6월 자유세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샬플랜을 발표하였다. 원래 이 모든 것은 유럽의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1947년 가을에 들어서면서 트루만독트린과 마샬플랜이 극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제 미국과 이승만은 오랜 갈등관계를 끝내고 협조관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1947년 가을 이승만은 미국언론으로부터 아시아에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 유엔총회의 결의와 자유민주 통일국가 건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하였다. 이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총회를 통하여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유엔의 결의안은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 즉 대서양헌장과 카이로 선언을 다시금 회상시키고 있다. 대서양헌장은 모든 국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의해서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소련은 이런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반탁을 이유로 이승만과 김구를 거부하였다.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든다고 했는데, 소련은 한반도에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대서양헌장과 카이로선언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서 이것을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1947년 유엔의 결의는 바로 이런 국제사회의 결의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는 “미국은 조선인에게 외국의 지배에서 일어나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를 갖도록 하자는 연합국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⁹⁾

우리가 유엔총회의 결의를 분석하여 볼 때, 이것은 이승만의 건국구상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유엔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수용하고 있다. 대서양헌장은 이미 전쟁 이후에 연합국은 더 이상 약소국의 식민지화를 거부하고, 독립된 국가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카이로선언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언급하였다. 한국인들은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신탁통치는 연합국의 국제적인 약속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제 2차 미소공위의 실패 후 한국인의 신탁통치 반대를 수용하고, 더 이상 지체없이 한반도의 독립을 추진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승만과 김국의 반탁운동이 성공한 것이다.

둘째, 유엔은 한반도에 서구식 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대서양헌장에 나오는 국가의 형태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결정되는 국가임으로 이

28) “US drops big 3 plan for Korea”, *Washington Daily News* (September 17); [해방공간관련문서]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소장), A-0910.

29) “하지, 공산당의 조선적화기도분쇄와 유엔위원회에 협력당부,” 『경향신문』 (1947년 12월 18일).

것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 자유가 모스크바결정에는 나오고 있지 않다. 모스크바협약에는 민주가 6번이나 나오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는 매우 모호한 반면에 유엔총회의 결정에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 반면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와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유엔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한반도에 중앙정부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미소공위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한국대표가 중앙정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선거는 남북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이며, 이 선거로 남북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통일중앙정부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다. 사실 미국의 언론은 유엔결의가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연합국은 그 분단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당시 기념식에서 연설한 유엔임시위원단의 대표 루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임을 분명하게 하였다.³⁰⁾

3. 소련의 유엔결의 부정과 이승만과 미국의 건국구상

이승만은 유엔과 함께 독립민주통일국가를 꿈꾸었다. 하지만 소련은 이같은 유엔총회의 결의가 자신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공산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소련은 유엔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였고, 북한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는 소련이 유엔임시위원단의 북한입국을 거부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먼저 중앙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요, 둘째는 이 문제를 남북지도자들에게 맡겨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첫째는 미국과 이승만이 지지하였고, 둘째는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현재 한국인들은 조속한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먼저 총선거가 가능한 남한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선거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도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완성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남한의 총선거는 한반도의 분단이 아니라 통일정부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남한에 중앙정부수립을 결의하였다.

당시 남한사회에서 우익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이승만과 김구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30) “유엔 대표 루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축사,” 『서울신문』 (1948년 8월 18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김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래서 원래 이승만과 김구를 함께 지지하던 사람들은 김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승만의 지도력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승만은 기독교인, 우익청년단체, 월남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유엔총회의 결의 이후 이승만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같은 건국구상을 가졌다. 그것은 근대 서구 민주주의의 개념에 입각한 정부수립이다. 이승만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민주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것은 또한 국제사회가 한국에 약속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승만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들이 반기를 들었지만, 소련은 자신들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면서 수용한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4. 한반도의 분단과 이승만의 복진통일

필자는 이 논문의 서두에서 이승만의 건국이념을 독립, 민주, 통일의 세가지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가운데 그는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승만은 처음부터 통일국가를 꿈꾸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38선 철폐를 주장했고, 그리고 이어서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나고, 남한만이라고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민족통일총본부를 만들어서 남한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것이 분단된 단독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에게 민족의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였다.

하지만 소련의 거부로 말미암아 그는 남북한 총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중앙정부를 세울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남한정부수립은 통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남한을 민주국가로 만들어 놓고, 이어서 북한도 자유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엔의 결의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한 다음에 시기가 오면 북한지역에서도 선거를 실시하여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것이다. 남한의 단독선거는 분단의 고착이 아니요, 오히려 새로운 통일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이같은 이승만의 생각을 잘 보여 주는 것이 1948년 3.1 기념사이다. 이승만은 새로 세워지는 정부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정부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중앙정부라고 주장하며, 이 정부는 미국의 통치를 받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국회를 조직하고, 국회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독립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가서 이승만은 남한에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통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다. 이승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³¹⁾

남조선에 정부수립이 되면 남북분열을 영구히 인정하는 것으로 남북이 병행할 수 없으므로 총선거는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사리에 당치 않는 말이다. 사람의 몸에 한편이 죽어가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를 피할 것인데, 다른 방책없이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면 살아있는 편까지 마저 죽어버리자는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북동포들은 사지에 빠져 하루가 10년같이 이북동포들이 살려낼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아무 것도 않고 방임하고 있다면 이는 인정도 아니요 동족상애의 도리도 아닐 것이니 우리는 할 수 있는대로 매진하여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줄기차게 북진통일을 주장하였다. 한민족의 사명은 북한을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그의 생각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욱 분명해 졌다. 북한이 38선을 무시하고 남침을 했으므로 38선은 이미 무효화되었으며, 이제 38선 이북으로 우리가 진격하여 북진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런 꿈은 다시 한번 1953년 정전협정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말았다. 미국은 이승만에게 정전협정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맺는 조건으로 이것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결코 한반도의 분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승만에게 있어서 통일은 그에게 남겨진 미완의 건국과제였다. 그는 정전조인에 즈음하여 북한 동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시오. 우리들은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민족의 기본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 강토와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UN은 목표를 위하여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정책을 변경하여 정전을 방해하지 않기로 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차후 발표할 것이다.³²⁾

31) “이승만, 3·1기념식에서 완전독립과 국권회복 역설”, [동아일보] 1948년 03월 02일

32) “이승만 대통령, 휴전조인에 즈음한 담화 발표”, [민주신보] 1953년 7월 29일.

맺는 말

필자는 이상에서 이승만이 갖고 있던 3가지 건국개념을 중심으로 1945년에서 1948년까지 그가 대한민국 건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는 처음부터 독립민주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했다. 평생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독립을 부정하는 신탁통치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는 미소에 맞서 신탁통치 수용을 거부했다. 아울러서 이승만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민주국가, 즉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소련식 민주주의는 한반도사람들을 소련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련과도 미국과도 싸웠다. 그리고 그 결과 독립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승만은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에 찾아 온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는 먼저 38선 철폐를 주장하고, 나중에 하나의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나 소련이 먼저 한반도 이북을 공산화하고, 남한까지 공산화하려는 상황에서 그는 전략을 수정하여 먼저 남한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통일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이승만의 가장 큰 과제는 남북통일이었다. 통일은 이승만의 미완의 과제였다.

해방 후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모스크바 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미소공위였다. 이승만은 미소공위체제로는 자유, 독립, 통일국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은 모스크바 결정에 있는 신탁통치와 임시정부를 포기하고 원래 대서양헌장과 카이로선언의 정신을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즉각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이승만이 오래동안 원했던 것이다. 필자는 해방 공간에서 이승만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끼친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미소공동위원회 체제를 유엔체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로 이런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다.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승만보다 더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가? 비록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승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수립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남 이승만 찬가)

조금 빠르게

서요한 작시
임공수 작곡
(2023. 6)

3 *mf*

1. 백 척 간 두 - 민 - 족 운 - 명 어 -
레 의 - 높 - 은 기 - 상 온 -
3. 머 - 나 먼 - 이 - 국 땅 - 에 찬란

7

개 - 메 - - 고 열 강 들 의 - 각 - 축 속 - 에 독 립 을 - 이 - 뵈
땅 - 펼 - 치 며 백 두 한 라 - 태 극 기 깃 - 발 하 늘 을 - 덮 - 었
한 - 태 - - 양 나 라 사 랑 - 념 - 의 충 - 정 어 - 이 - 비 - 할

12 *f*

네 자 유 민 주 - 시 - 장 경 - 제 동 - 맹 을 맺 - 고 맺 어 튼 튼
네 온 갖 제 도 - 수 - 립 하 - 여 안 - 정 을 이 - 루 - 고 대 한
까 영 혼 깃 든 - 결 - 음 마 - 다 눈 - 물 - 어 리 여 - 도 이 한

17 3

한 - 국 - 가 안 - 보 평 - 화 를 이 뵈 - 네
민 국 - 민 - 족 혼 - 을 온 세 계 에 떨 쳤 - 네
몸 - 빛 - 되 리 - 라 등 - 불 이 되 리 - 라

24 <후렴> *mf*

아 아 - 우 - 남 이 승만 나라 세 운 건국대 통 령 아

29

아 - 우 - 남 이 승만 목숨 바 친 - 대 - 통 령 아 름

33 *f*

다 운 - 나 - 의 조 - 국 불꽃 처 럼 타 올라 서 자 손

37 1.

만 대 - 영 - 원 토 - 록 세 계 속 에 빛 - 나 - 라 2. 겨 -

41 2. D.S.

라 토 - 록 세 계 속 에 빛 - 나 - 라 - -

<발제 4>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의 성공적 지휘

남정옥(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북한 남침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가능성?
- III. 남침 직후 이승만의 완벽한 초동조치
- IV. 대한민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군사 조치
- V.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원 약속
- VI. 북진통일을 전쟁목표로 결정하고 강력 추진
- VII.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 VIII. 유엔군(미군 포함)에 병력 및 노무인력 지원
- IX. 정부의 제주도 이전 및 해외 망명정부 결사 반대
- X. 반공포로 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XI. 맺음말

I. 머리말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은 북한군의 병력, 무기, 전술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처할 능력과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소련의 현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하고,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해 준 남침공격계획으로 시작된 6·25를 전차와 전투기 1대도 없고 병력도 절반밖에 안 되는 국군이 자력으로 막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대통령도 그 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갈량(諸葛亮)이가 국무총리였어도 공산군의 장총대포(長銃大砲)와 전차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은 미국의 군사물자가 오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다.”¹⁾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백선엽 장군도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해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절반 수준도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습으로 허망

1) 「계엄령선포에 대한 이대통령 특별담화」(1950.7.15), 국방부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 1951, C5- C6쪽.

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현저한 남북한 전력차이를 비교했다.²⁾

그렇지만 전쟁은 북한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하고 이어 미국이 참전하고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유엔회원국이 보낸 군대가 속속 한반도로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전쟁양상은 **국제평화를 파괴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응징전쟁’**으로 바뀌었다. 그 후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극적으로 타개해 나갔다. 그 중심에 이승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국군과 국민들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살려냈다.

이승만은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는 6·25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승만은 어떻게 했기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글은 이승만이 6·25전쟁에서 성공적인 지휘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남침 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분석한 다음, 전쟁 진행단계별로 이승만이 취한 주요 성공적 지휘 조치들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있다.

II. 북한 남침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가능성?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신생 대한민국에게는 모든 면에서 불리했다. 전쟁 이전 미국은 북한에게는 전쟁을 해도 좋다는 오관을 하계끔 하면서, 대한민국에게는 군사 및 안보 면에서 불리한 조치만을 취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동방위선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발표를 공개적으로 하고, 대한군사원조를 부결시키는 조치를 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예방을 위해 미국에게 요청한 태평양동맹 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 해군에게 진해항 제공, 미 전투병 주둔,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선언, 국군 단독으로 싸울 수 있는 전차 및 항공기 지원 등을 모두 거절했다.³⁾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은 적극적이었다. 소련은 현대전 수행이 가능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 전차 242대, 항공기 226대(전투기 197대 포함), 대포 751문(자주포 186문 포함), 모터사이클 540대, 함정 115척을 지원했다. 중국은 국공내전에 참가한 한인(韓人) 병사로 구성된 3개 정규사단(5사단·6사단·12사단)에 병력 약 6만명을 지원했다. 북한군 육해공군 병력은 20만명에 달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남북한 전력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대통령을 움직인 美軍 대위』, 한국문원, 1995, 245쪽.

3)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이담북스, 2010, 73-80쪽.

〈표 1〉 남북한 전력 비교(1950년 6월 25일)

구분	총병력	육군				공군	해군	
		전차	자주포	대포	모터사이클	항공기(전투기)	함정	해병대(육전대)
남한	10만	0	0	91문	0	연습/연락기 22대	36척	1,166명
북한	20만	242	186문	751문	540대	226대(197대)	115척	5,483명

북한군에 비해 국군의 전력은 초라했다.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차와 전투기, 자주포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사거리가 북한군 포병의 절반밖에 안 나가는 구형 105밀리 포 91문과 연습 및 연락용 비행기 22대가 있었다. 함정도 450톤급 미만의 소형 함정 36척이 있었다. 열세한 무기 및 장비에 국군 병력은 북한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명이었다.

국군의 전쟁지속능력도 문제였다. 무기 및 장비도 열세였지만 탄약보유량은 10일분 밖에 없었다. 전쟁발발 후 10일이 지나면 국군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탄약이 떨어져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 그리고 탄약을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국군의 전쟁대비계획도 현실적이지 못했다. 당시 국군은 방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다. 작전개념은 북한이 남침하면 38도선에서 최대한 적을 저지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축차적으로 북한군을 저지, 격멸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에 반해 북한군은 소련군사고문단이 작성해 준 남침공격계획(일명 ‘선제타격계획’)을 갖고 남침을 도발했다.

북한의 남침공격계획은 3단계 작전 하에 29일만에 남한지역을 완전히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제1단계는 38도선에서 수원-삼척선까지 5일만에 점령하면서 한강 이북에 있는 국군 주력을 섬멸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은 2일만에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2단계는 수원-삼척선에서 군산-대구-포항을 연결하는 선까지 14일만에 점령하면서 국군의 나머지 병력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제3단계는 군산-대구-포항 선에서 남해안까지 10일만에 점령함으로써 29일만에 한반도를 완전히 공산화하는 것이었다.⁴⁾

소련군사고문단이 29일만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군사전문가들의 판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방어전투』, 2005, 7-11쪽;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1, 2001, 135-137쪽.

단으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미군 1개 사단을 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일에서 60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⁵⁾ 그래서 소련군사전문가들은 미군이 개입하기 훨씬 전인 29일만에 전쟁을 끝냄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 아예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6·25전쟁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데 비해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우호관계는 돈독했다. 중국대륙의 공산화에 성공한 마오쩌둥(毛澤東)은 남침을 앞두고 “전쟁이 나도 미국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위해 3차 대전을 모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군이 참전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⁶⁾며 호언했다. 그 무렵 중국은 소련과 우호동맹상호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일방이 침략을 당하면 바로 개입하는 강력한 동맹조약이었다. 북한은 소련과 조소(朝蘇)지원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 동맹관계, 병력, 무기와 장비, 전쟁지속능력, 전쟁계획 등 모든 면에서 불리했다.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비록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끝나게 되어 있었다. 6·25전쟁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촉발되었다.

Ⅲ. 남침 직후 이승만의 완벽한 초동조치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는 27일 새벽 3시까지 약 48시간 동안 이승만은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벽하리만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남침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국가안보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중앙정보국(CIA) 그리고 미국방부 및 합동참본보부로부터 전쟁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 받아 전쟁을 지도할 전쟁지도 시스템이 없었다.⁷⁾

그럼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침착하게 전쟁에 도움이 될 일들을 찾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국가원수 및 국군통수권자로서 전시 상황을 처리해 나갔

5)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2, 2001, 258-259쪽.

6) A. V. 토르쿠노프 지음, 구종서 옮김, 『김일성-스탈린-모택동 기밀문서: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115쪽, 121쪽.

7) 남정옥, 『북한 남침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 행적』, 살림, 2015, 82쪽.

다. 이승만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전시 상황을 처리하는데 있어 이승만은 두 가지 원칙하에 행동하였다. 첫째, 대통령 자신과 정부, 그리고 군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일을 처리해 나갔다.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군이 싸울 수 있는 무기와 탄약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전시치안 및 피난민 구호 및 전시 행정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둘째, 순수한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군부(軍部)에 일임해 처리하도록 했다.

이승만은 6월 25일 10:30분에 신성모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남침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곧바로 국무회의 소집, 무초 미국대사 연락, 하와이에 머물던 구축함 3척에 대한 신속한 귀국지시(11:00시경)를 시작으로 무초 대사와의 회동(11:35), 주미대사관 전화(미국 지원 요청, 13:00), 비상국무회의(14:00), 미국에게 무기와 탄약지원 요청(오후), 미 극동 군사령부에 전투기(F-51) 지원 요청(오후), 무초대사와의 회동(22:00이후), 신성모에게 군사경력자회의 지시(22:00시 이후)를 거침없이 진행하였다.⁸⁾

전쟁 발발 이틀째인 6월 26일에도 이승만의 전시에 필요한 조치는 계속되었다. 새벽 3시에 맥아더장군에게 전투기 요청 전화(03:00)를 시작으로 무초대사에게도 무기지원 요청 전화(04:30), 내무부 치안국 방문(아침), 대통령 지시로 군사경력자회의 개최(10:00), 국회 본회의 참석(11:00~13:00),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 방문(14:00), 서울시 경찰국장 피란건의(21:00)가 있었다.⁹⁾

이승만은 27일에도 새벽 1시에 주미대사관에게 전화(장면 대사에게 트루먼 대통령 면담 지시)를 시작으로 맥아더에게 전화(주미대사관 전화 후), 신성모 장관과 조병옥 박사 등 대통령에게 재차 피란건의(02:00), 경찰의 청량리 적 전차 진입보고에 따른 대통령 내외 경무대 출발(03:00), 서울역 출발(04:00) 등이다.¹⁰⁾

8) 남정옥, 앞의 책, 81쪽.

9) 남정옥, 앞의 책, 81쪽.

10) 남정옥, 앞의 책, 81쪽.

〈표 2〉 이승만의 남침 직후 48시간 초동조치¹¹⁾

일 시	조치·지시·보고 사항	비고
6월 25일 04:00	북한군, 38도선 전역에서 전면 공격	
10:00	경무대경찰서장, 대통령에게 남침상황 최초 보고	창덕궁 비원
10:30	신성모 국방부장관,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쟁상황 보고	경무대
신성모 보고 후	이승만, 국무회의소집, 무초 대사 연락, 손원일 제독에게 구축함 이끌고 귀국 지시	황규면 경무대 비서에게 지시
11:35	이승만, 무초 대사와 경무대에서 첫 회담	미국지원 요청
13:00	이승만, 주미 한국대사관에 1차 전화(미국지원 지시)	손원일·정일권 재차 귀국지시
14:00	이승만 주재, 첫 비상국무회의	경무대
15:00	무초 대사, 이승만 요청으로 미국에 무기와 탄약요청	미 국무부
이후	이승만,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 요청	전화
22:00	이승만, 무초 대사와 2차 회담	경무대에서 무초에게 연락
22:00 이후	이승만, 신성모 장관에게 군사경력자회의 지시	구두 지시
6월 26일 03:00	이승만,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전화	전투기 등 요청
04:30	이승만, 무초 대사에게 무기 요청 1차 전화	
아침	이승만, 1차 치안국(내무부) 방문	
10:00	이승만 지시로 군사경력자회의(신성모 장관 주관)	국방부회의실
11:00	이승만, 국회 6차 본회의 참석	국무위원 전원
14:00	이승만, 육군본부와 치안국(내무부) 상황실 방문	
21:00	서울시경찰국장, 이승만에게 1차 피란 건의	서대문형무소 공산분자 수감
6월 27일 01:00	이승만, 주미 한국대사관(장면 대사)에 2차 전화	트루만 대통령 면담 지시
전화 후	이승만, 맥아더 장군에게 2차 전화	무기 요청
02:00	신성모 장관·조병옥 박사, 이승만에게 2차 피란 건의	이승만 역정
03:00	서울시경국장, 청량리 적 전차 진입보고/3차 피란건의	경무대 출발
04:00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서울역 출발	황규면 비서 대통령 수행

이승만은 남침 보고를 받은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새벽 3시 경무대를 떠날 때까지 2일도 안된 짧은 시간동안 국가생존과 군이 싸울 수 있도록 전시에 꼭 필요한 조치들을

11) 이 표는 『북한남침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23-78쪽)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모두 직접 챙겼다.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 및 전화 3회,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 2회, 주미한국대사관에 전화 2회, 국회 참석, 육군본부와 치안국 방문, 비상국무회의 주재, 군사경력자회의 개최를 지시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전시에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마치 전시매뉴얼을 보고서 하는 것처럼 빠짐없이 하였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이승만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IV. 대한민국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군사 조치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회생시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북한남침 직후부터 이 일에 매달렸다.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과 유엔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독려하여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로 한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남침 직후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은 그리 길지가 않았다. 국군의 탄약보유량이 10일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지원이 되지 않으면 국군은 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1950년 7월 4일을 넘기면 회생이 불가능했다. 그 기간 내에 미국의 지원약속과 참전도 받아내야 했고, 10일분 밖에 없는 부족분 탄약도 확보해야 했다.

이승만은 25일 오전 회담에서 무초 대사에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은 10일 이내에 떨어질 것(would be out of ammunition within ten days)’”이라고 말했다.¹²⁾ 무초는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그날 15:00시에 미 국무장관에게 “미 극동군사령관(CINCFE)에게 긴급전문을 보내서 한국군을 위한 탄약을 즉시 부산으로 보내 달라.”는 전문을 보낸 데 이어,¹³⁾ 미 군사고문단의 우드(Walter G. Wood, Jr) 중령에게 미 극동군사령부에 105밀리 포탄을 비롯한 박격포탄 그리고 소총실탄을 긴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그날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미8군사령관 워커 장군에게 요코하마에 있던 군 수송선인 키드레이(Keathley)호에 105밀리 포탄 105,000발, 81밀리 박격포탄 265,000발, 60밀리 박격포탄 89,000발, 소총실탄 2,480,000발을 적재하여 7월 1일까지 부산항에 도착하도록 지시했다.¹⁴⁾ 이들 탄약은 국군이 7월 이후 지연작전을 수행하는

12)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65.

13)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50.6.25.3pm),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외교 FRUS), 1950*, Vol. VII,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129; James F. Schnabel, p.65.

14)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66;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611쪽.

데 매우 긴요하게 사용됐다.

이승만은 지상전력 뿐만 아니라 당시 한 대도 없던 전투기(F-51) 10대를 맥아더 장군에게 요청하여 7월 2일 대구 비행장에 도착되었다. 한국 공군에 미국이 전투기 10대를 지원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승만은 6월 25일 오후 김정렬 공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미군으로부터 전투기를 지원받는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받고,¹⁵⁾ 무초 대사를 통해 미 극동군사령부에 전투기를 요청하여 전투기 10대를 인수받게 되었다.¹⁶⁾ 그 결과 우리 공군도 전투기를 몰고 지상 작전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공군의 전투기 시대를 열게 하였다.

또한 이승만은 호놀룰루 총영사인 김용식(金溶植)에게 미 본토에서 전투함을 구입해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손원일(孫元一) 해군총장에게 하와이에서 체류하고 있는 군함(3척)을 끌고 빨리 귀국하라고 지시했다.¹⁷⁾ 손원일 해군총장은 미국에서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 해군장병과 국민들이 모든 성금 15,000달러와 이승만 대통령이 보태 준 45,0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 전투함을 구입했다.¹⁸⁾

이를 알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남침보고를 받자마자, 당장 군함이 필요할 것을 생각하고 하와이에 1주일 예정으로 머물 예정이던 손원일 총장에게 “군함과 함께 빨리 귀국하라.”는 훈령을 내렸다.¹⁹⁾ 그렇게 해서 군함 3척은 7월 16일 진해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들 군함들은 대한해협 해전과 동영상륙작전,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해 전쟁 초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V.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원 약속

이승만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원과 참전을 받아내기 위해 6월 25일(13시)에 이어 6월 27일 새벽 1시에 주미대사관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²⁰⁾ 이승만은 장면(張勉) 대사에게 “우리 국민들은 잘 싸우고 있지만 무기가 없어서 큰 걱정이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군사원조의 시급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²¹⁾ 장면 대사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해 그날 27일 04:00시(워싱턴 시각 26일 15:00시)에 트루먼 대통령과 회동하게 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장면 대사

15)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1977, 823쪽.

16) 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공군본부, 2002, 33쪽.

17)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FRUS, 1950*, Vol. VII, p.130.

18) 오진근·임성재,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273-274쪽.

19) 오진근·임성재,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308쪽.

20)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옮김, 『비록 이승만 박사와 미국대사관: 이승만·미대사관·워싱턴을 잇는 외교내막』, 정호출판사, 1983, 40쪽.

21) 국방부, 『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617쪽.

에게 “한국정부, 국민, 국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 독립전쟁 때 독립군이 무기, 식량난에 어려움이 겪고 낙담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라파예트 장군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다. 또 1917년 유럽 제국이 독일의 침공을 받아 존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미국은 그 지원에 나선 적이 있다.”²²⁾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무기와 탄약을 수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장비는 곧 [한국의] 군사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줬다.²³⁾

트루먼은 그때의 상황을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때 장면 대사가 가지고 온 이승만의 서한을 소개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보낸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전문으로 보낸 서한은 다음과 같다.

“6·25일 이른 아침부터 북한공산군이 남한에 대해 무력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귀하와 미국 의회는 우리 국민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여 동양에 민주주의의 보루(堡壘)를 구축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강력한 국방군을 창설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귀국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공화국을 수립함에 있어 불가결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다시금 감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위급(危急)에 처하여 용감히 싸우면서 귀국이 지원을 증가해 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이 세계평화의 파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시의(時宜)에 맞는 원조가 있기를 요망합니다.”²⁴⁾

이승만은 그 바쁜 와중에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여 장면 대사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로부터 3일 후인 6월 30일 트루먼은 미 해·공군에 이어 미 지상군 파병을 결정했고, 그 다음날인 7월 1일 미 지상군 선발대인 스미스특수임무대가 한국에 도착하였다. 스미스부대는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파병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이승만의 노력으로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22)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158; 한표옥, 『한미외교 요람기』, 중앙신서, 1984, 87쪽.

2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 p.158.

24) Harry S. Truman, *Years of Trial and Hope*, Vol. II,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1956, 손세일 역, 『트루먼 회고록 : 시련과 희망의 세월』하, 지문각, 1968, 312-313쪽.

VI. 북진통일을 전쟁목표로 결정하고 강력 추진

이승만은 전쟁 당일 개성과 동두천이 함락되고, 이튿날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되는 불리한 전황(戰況) 속에서도 북진통일을 부르짖었다. 이승만은 개전 첫날 무초 미국대사를 만나 “6·25가 제2의 사라예보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²⁵⁾

이승만은 1950년 7월 10일 한미연합군이 힘겨운 지연작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제 38도선은 자연스럽게 해소됐다.”고 말했다.²⁶⁾ 그리고 1950년 7월 13일 이승만은 “북한의 공격으로 과거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분단된 한국에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²⁷⁾

또한 그는 1950년 7월 19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소련의 후원으로 수립된 북한 정권이 무력으로 38도선을 파괴하고 남침한 이상 38도선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이에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²⁸⁾ 이는 북진통일을 달리 표현한 이승만 특유의 화법이었다.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이승만은 북진통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했다. 그는 1950년 9월 20일 인천상륙작전 경축대회에서, “지금 세계 각국 사람들이 38도선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본래 우리 정부의 정책은 남북통일을 하는데 한정될 것이요. 소련이 북한을 도와 민주정부를 침략한 것은 민주세계를 토벌하려는 것이므로 유엔군이 들어와서 공산군을 물리치며 우리와 협의하여 싸우고 있다. 이에 우리가 38도선에서 정지할 리도 또 정지할 수도 없다. 지금부터 이북 공산도배를 소탕하고 38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철의 장막을 쳐부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²⁹⁾

1950년 9월 29일 서울 환도식이 끝난 후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게 “지체없이 북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맥아더 장군이 “유엔이 38도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이승만은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은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국군의 북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국군은 북진할 것이다.”고 말하고,³⁰⁾ 그날부로 정일권 육군총장에게 북진명령을 내

25) The Ambassador in Korea(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50.6.25), *FRUS, 1950*, Vol. VII, pp.129-131.

26) 외무부, 『한국외교 30년』, 외무부, 1979, 105쪽.

2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Embassy in Korea(1950.7.14), *FRUS, 1950*, vol. VII, p.387.

28) 한표욱, 『한미외교 요람기』, 94-95쪽.

29) 대한민국 공보처, 『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39-40쪽.

려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승만은 우리 국군이 평양에 먼저 입성하고, 유엔군에 앞서 진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³¹⁾

휴전정책에 반대하는 이승만은 미국에게 골치 아픈 존재였다.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이런 이승만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이 많이 빠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멀리 어디론가 멀리 가버렸으면 하고 남몰래 바라기까지 했다.”며 당시 이승만 때문에 겪은 어려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³²⁾

미국은 그들의 정책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이승만을 제거할 ‘에버레디 계획(Everready Plan)’까지 수립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에 이승만 만한 리더십을 갖춘 반공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³³⁾ 이승만은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호기로 판단하고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전쟁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집념과 무리수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로부터는 반드시 달성해야 될 전쟁목표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³⁴⁾

VII.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유엔안보리가 1950년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결의하고, 사령관 임명을 포함하여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국에게 위임하였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7월 8일 미 합참이 추천한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를 초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했고, 미 합참은 7월 10일 맥아더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맥아더가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데에는 합참의 추천도 있었지만 그 보다도 미 국무부 고문인 덜레스(John F. Dulles)가 “**한국에서의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을 고려할 때 맥아더가 적임자**라고 추천한 것이 주효했다.”³⁵⁾고 한다.

30)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기파랑, 2010, 166쪽.

31) 위의 책, 167쪽.

32)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Garden City, New York : Doubleday, 1967,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정우사, 1981, 176-177쪽.

33) 에버레디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반향적인 지도자를 제거하고 미군에 충성하는 지휘관으로 교체할 것 ② 불응하는 한국군에 대한 연료와 탄약 공급을 중지할 것 ③포와 공군지원을 철수할 것 ④유엔군사령부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할 것 ⑤유엔군사령부에 의한 군사정부수립을 선포할 것 등이다. 이 계획은 1953년 5월 29일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 회담에서 논의됐다(“Paper Submitted by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Taylor), May 4, 1953” *FRUS 1952-1954*, Vol. XV, Korea Part 1, 1984, pp.965-967).

34)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197쪽.

35)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p.

유엔안보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 설치를 결의할 때 한국에 군대를 파병하는 유엔회원국은 자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무총장 리(Trygve Lie)는 상징적으로 유엔군사령부에 게양될 유엔기를 유엔주재 미국 대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고, 미국 정부는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으로 하여금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유엔기를 전달하도록 했다. 이에 콜린스 장군은 7월 14일 일본 도쿄로 가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유엔기를 전달했다.

이승만은 유엔기가 유엔군사령관에게 전달된 7월 14일부로 주한미국대사 무초를 통해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유엔회원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유엔회원국의 자격을 얻게 됐고, 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울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유엔안보리가 규정한 북한의 국제평화 파괴 및 침략행위에 유엔군과 공동으로 대처하게 됐다. 이는 유엔의 전쟁에 대한민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지만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승만의 작전지휘권 이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날인 7월 14일은 정치 및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이 날은 국군의 육해공군총사령부 겸 육군본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이전했고, 그 전날 유엔군지상군사령부 겸 미 제8군사령부도 대구에 설치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14일은 유엔군작전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상징적인 날이었다.³⁶⁾

그런 점에서 이승만의 작전지휘권 이양의 타이밍은 절묘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로서 그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이승만이 아니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정확히 타이밍을 맞출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직 이승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시지도자로서 이승만의 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VIII. 유엔군(미군 포함) 작전에 병력 및 노무인력 지원

6·25전쟁에서 유엔군(미군)은 병력 및 인력충원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워커 미8군사령관이 지휘한 낙동강전선에서 그러했고,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을 실시할 때 그러했고, 밴플리트 미8군사령관이 지휘한 고지쟁탈전에서도 그러했다.

328.

36)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d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p.111.

낙동강방어작전에 투입된 주일(駐日) 미군사단들은 전시편제가 아니라 감소 편성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개 보병연대에 3개 대대가 있어야 하는데 2개 대대밖에 없었고, 또 대대도 3개 중대가 있어야 하는데 2개 중대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단이 1/3내지 1/2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주일미군 사단은 그런 상황에서 한국전선에 투입되었다. 정상적인 작전을 하기가 어려웠다. 미군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해 준 것이 바로 카투사(KATUSA)이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은 1950년 8월 15일 카투사(KATUSA) 제도를 도입하여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입된 미 지상군 사단의 전투임무수행을 지원하였다. 인천상륙작전부대로 운용될 예정이던 미7사단에 카투사 8천6백여명을 보충해 주었다.³⁷⁾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미7사단의 인천상륙작전은 물론이고 이후 실시한 서울탈환작전 그리고 낙동강방어선에서 반격해 올라오는 미8군과의 오산에서의 연결작전도 어려웠을 것이다. 최초 카투사들은 미국 각 사단에 250명씩 충원되어 미군속의 한국군으로 작전에 참가하여 유엔군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쟁 말기 카투사 병력은 23,932명에 이르렀다.³⁸⁾ 이들 카투사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낙동강방어작전에 투입된 미군에게는 애로사항이 또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먹을 식량과 물 그리고 전투에 필요한 탄약을 고지까지 운반하는 일이었다. 이것들을 전투병들이 고지까지 나르기에는 육체적 수고가 너무 컸다. 이는 전투 병력의 손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를 타개해 준 것이 노무자로 편성된 지게부대였다. 노무자들은 산악지형에서 전투병들의 노고를 덜어줌으로써 그들이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다.

고지쟁탈전을 전개할 무렵 산악지형에서 싸우게 될 미군에는 노무부대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 미군 3개 군단에 각각 1개 노무사단을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미군들은 전투에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노무부대는 1953년 초에는 약 10만명에 달하였다.³⁹⁾ 노무부대들은 고지에 방벽자재(철조망·마대 등), 탄약, 식량, 물 등을 지게로 저서 날라다 주었고, 내려올 때는 부상병이나 전사자들을 지고 내려옴으로써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미8군사령관을 지낸 스티웰(Stiwell) 장군은 “그들은 군인과 다름없이 적의 화력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보급소와 유엔군 병사 사이에 인간 교량 역할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였다.”⁴⁰⁾고 하였고, 전쟁 당시 미8군사령관이던 뱀플리트 장군도 한국인 노무부대가 “미군 전투병 10만명을 대신했다.”며 높이 평가하였다.

37)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1995, 258쪽.

38)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259-260쪽.

3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인사·군수·민사지원-』, 1997, 440-441쪽;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202-203쪽.

40) 국방군사연구소, 『점령정책·노무운용·동원』, 170쪽.

IX. 정부의 제주도 이전 및 해외 망명 정부 결사반대

이승만은 전쟁 중 정부의 제주도 이전 및 해외망명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했다. 미국은 전황이 불리해 질 때마다 이 문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정부의 해외망명지로 사모아, 피지의 남양군도, 하와이, 홋카이도 등을 고려하면서 제주도, 일본, 류큐열도(오키나와 제외), 대만 등도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었다.⁴¹⁾ 그렇지만 이승만으로서는 제주도로 가서 또 하나의 대만(臺灣)을 만들거나, 해외의 다른 지역에 망명정부를 수립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에게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었다.

낙동강 방어선이 최악의 위기에 빠진 1950년 8월 14일 적의 총공세에 의해 대구가 적의 공격권에 들어가자 무초 미국대사는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것을 건의했다.⁴²⁾ 무초는 그곳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고 최악의 경우 남한 전체가 공산군에 점령된다 해도 망명정부를 지속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초가 한참 열을 올려 얘기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모젤 권총을 꺼내어 아래위로 흔들면서 “이 총은 공산당이 내 앞까지 왔을 때 내 처를 쏘고 적을 죽이고 나머지 한 알 [발]로 나를 쏴 것이오.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없소. 모두 총궐기하여 싸울 것이오. 결코 도망가지 않겠소.”라고 강하게 말했다. 긴장한 무초 대사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돌아갔다.⁴³⁾

1950년 9월초 대구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인 영천이 적에게 점령당했을 때 미 제8군 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이 육·해·공군총사령관인 정일권 장군에게 망명 정부 이야기를 꺼냈다. 워커 장군은 정일권 장군에게 “이것은 극비 중의 극비입니다. 당분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군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잘 싸우는 2개 사단과 각계각층의 민간인 10만명을 극비리에 선정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⁴⁴⁾ 정일권은 “[이것이] 누구의 구상입니까? 워커 장군의 생각입니까?”라고 묻자, 그는 “맥아더 사령관의 극비 긴급지시입니다.”라고 말했다.⁴⁵⁾

워커는 9월 7일 영천방어가 가망 없어졌을 때 맥아더 사령관이 미 제8군의 전면철수를 고려하라고 했다면서 정일권에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군 2개 사단과

41) JCS Decision on Evacuation of ROK Personnel from Korea, February 4, 1951, RG.218, CCS 383.21 Korea(3-19-45), Sec., 81, N.A.;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북한군 침공과 한국군방어』제3권, 행림출판사, 1992, 303쪽 재인용.

42)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98쪽.

43) 프란체스카 도너 리,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 98쪽.

44)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1986, 85쪽.

45)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86쪽.

민간인 10만명에 대한 철수계획은 워커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다. 워커는 정 장군이 승낙하면 맥아더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수송할 선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철수장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 군도(群島)라고 했으나, 정일권은 괌 아니면 하와이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⁴⁶⁾

정일권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튿날 새벽 부산경무대로 이승만을 긴급 방문하고 미군 철수계획을 보고했다. 꺾꺾한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고 보고를 받던 이승만은 “망명의 설움을 안고 하와이에서 외롭게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던 나에게 이제는 겨레를 이끌고 다시 그곳으로 망명하라는 것인가!”라며 격노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누가 가자고 해서 나의 조국을 등질 비겁자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영천이 무너져 공산군이 여기 부산에 오면 내가 먼저 앞에 나서서 싸울 것이요. 내 침실 머리맡에는 언제나 권총이 준비돼 있다고 말하십시오!”라고 망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⁴⁷⁾

한국 망명정부 문제는 중공군 개입 이후 유엔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제기됐다. 중공군의 신정 공세에 따라 미국은 최악의 경우 망명정부를 유지하여 저항을 계속하도록 한국을 지원할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미국 정부가 1951년 1월 12일 마련한 유엔군의 전쟁지도지침을 보면, “유엔군은 일단 일본으로 철수시키되, 한국정부와 군경을 제주도도 이전시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었다.⁴⁸⁾

미국이 극비리에 추진한 한국 정부의 제주도 이전계획에 포함된 대상 인원은 행정부와 그 가족 3만6천명, 한국 육군 26만명, 경찰 6만명, 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 가족 40만명, 기타 요원 등 총 100만 명으로 판단했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⁴⁹⁾ 이승만은 꿈적하지 않았다.

6·25때 이승만 같은 국제정세를 꿰뚫는 강단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전황이 불리할 때마다 제주도 및 해외 망명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통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X. 반공포로석방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성과

46)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86쪽.

47)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 86쪽.

48)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1996, 351쪽.

4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352쪽.

였다. 전쟁 기간 중 유엔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자 한국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휴전회담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더욱이 1953년에 이르러 휴전협상이 타결될 단계에 접어들자 국내에서는 휴전반대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승만은 휴전회담이 성립될 경우, 국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분리시킬 준비를 할 것이며, 필요시 단독이라도 공산군과 싸울 것이라는 의사를 미 국무부에 통보했다.⁵⁰⁾

미 국무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승만의 북진 정책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면서 정전협정체결 및 수락 이후에도 미국은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앤저스(ANZUS) 조약과 같은 상호방위조약 및 동맹조약을 한국과 체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나토(NATO)와 같은 즉각 개입의 상호방위조약과 이를 휴전 전에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거부반응을 나타냈다.⁵¹⁾

나아가 이승만은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중공군의 북한 잔류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공(對共) 유화적인 휴전협정 체결보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산군과 유엔군의 동시철수”를 제의했다.⁵²⁾

아이젠하워는 답신에서 한국이 휴전협정 체결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통일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계속되고 있는 대공 유화적인 휴전의 위협성을 경고하고 그러한 휴전과 연결되는 상호방위조약은 그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공군의 한반도 철수 등을 주장했다. 이승만은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다.⁵³⁾

반공포로 석방은 이승만과 국군헌병총사령관 원용덕 장군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다. 원용덕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이 일을 처리해 나갔다. 이승만은 이를 위해 국군헌병총사령부를 국방부내에 설치하고, 원용덕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킴과 동시에 헌병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포로문제가 타결되기 2일전인 6월 6일 원용덕을 경무대로 불러 포로석방문제를 비밀리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원용덕은 포로문제가 타결된 6월 8일 경무대로 이승만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나의 명령이니 반공 한인 애국청년들을 석방하라. 가만(可晩).”이라는 친필명령을 내렸다.⁵⁴⁾

원용덕은 이승만의 밀명을 은밀히 추진했다. 국방부장관과 육군총장에게도 비밀로

50)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국방군사연구소, 1995, 99쪽.

51) 남정옥, 『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217쪽.

52) 온창일, 「한국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군사』 제40호, 2000, 127쪽.

53) 차상철,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학술회의 (2000), 206쪽.

54) 남정옥, 『이승만대통령과 6·25전쟁』, 205쪽.

했다. 모든 일은 육군헌병사령부와 포로경비부대를 통해 진행됐다. 작전은 6월 18일 24:00시에 일제히 개시되어 2만7천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6월 19일 06:00시 원용덕은 중앙방송국에서 반공포로석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들은 애국학생들은 헌병총사령부 정문 앞으로 몰려들어 “원용덕 장군 만세!”를 외쳤고, 이승만은 그런 원용덕에게 ‘義勇(의용)’이라는 휘호를 하사하고 그 공을 치하했다.⁵⁵⁾

반공포로석방에 놀란 미국은 1953년 6월 25일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국무부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하여 이승만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미국은 평화적 수단으로 한국을 통일하는데 계속 노력한다. 둘째, 전후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셋째, 장기적인 경제 원조를 제공한다.⁵⁶⁾

이를 토대로 이승만은 휴전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등 긴급 현안문제를 로버트슨 특사와 협의했다. 그 결과 한미 간에 정전협정 체결 후 상호방위조약 체결, 경제 원조 제공, 한국군의 20개 사단 및 그에 상응하는 해·공군력 증강에 대해 합의했다.⁵⁷⁾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인 1953년 8월 4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한국에 도착하여 8월 8일까지 이승만과 상호방위조약에 관해서 논의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됐고,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됐다. 미국은 어렵게 확보한 휴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승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한국의 전후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책임지게 됐다.⁵⁸⁾ 이승만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외교적 성과였다.

XI. 맺음말

이승만의 6·25전쟁에 대한 전쟁지도는 시종 일관성이 있었고,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전쟁 직후에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초동조치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 국군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도록 탄약 및 무기 확보와 같은 군사적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의 지원을 확실히 받아내는 외교적 성과를 조기에 얻어냈다. 이승만의 외교적 노력으로 국군에게 부족한 탄약과 무기가 전쟁 개시 1주일째인 7월 1일 부산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날 역시 미 지상군 선발대가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는 소련군사전문가들이 미 지상군이 참전하

55) 남정옥, 『이승만대통령과 6·25전쟁』, 205쪽.

56) 한배호, 「한·미방위조약체결의 협상과정」, 『군사』 제4호, 1982, 169쪽.

57)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 1945-1994』, 101쪽.

58) 온창일, 「전쟁지도자로서 이승만 대통령」, 233쪽.

더라도 최소 4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외교적·군사적 성과였다.

북한 남침 직후 이승만은 군사 및 외교적 조치와 함께 북진통일(北進統一)을 전쟁 목표로 결정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승만의 전쟁 기간 내내 전쟁지도방침의 핵심은 ‘국토통일’이었다. 38도선을 철폐하고 한만(韓滿) 국경선으로 밀고 올라가 통일하는 것이 이승만의 전쟁목표인 북진통일이었다. 이승만을 이를 위해 미국과 유엔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였다.

이승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고,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 카투사(KATUSA)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청년들을 지원하고, 산악지형에서 미군 전투병을 대신할 노무부대를 창설하여 지원한 것은 모두 북진통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의 의지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전선으로 밀릴 때도, 또 중공군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을 때도 전혀 꺾이지 않았다. 전황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이 정부의 제주도 이전 및 해외 망명 정부를 거론하였으나, 그때마다 이승만은 이에 결사반대하며 단호히 대처했다. 이승만에게는 ‘제2의 대만’을 만들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가 있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이 한국을 배제한 가운데 휴전을 강행할 때 이승만은 휴전은 분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자살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사형의 집행장’으로 여겼던 그로서는 중국의 장제스(蔣介石)처럼 나라를 잃게 될 정부의 제주도 이전 및 해외 망명정부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중공군 개입으로 어느 일방에 의한 군사적 승리가 어렵게 되면서 미국과 유엔이 휴전정책을 내세우게 되자, 이승만은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 우리나라의 생존권을 위한 나토(NATO)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주장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엔군에서 국군 탈퇴 및 단독북진과 반공포로석방이라는 극약처방을 함으로써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함께 국군의 전력증강과 경제원조 등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승만은 전쟁을 치르면서 특유의 투지와 기지, 애국심,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구사해 가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켜냈고, 미국으로부터는 마침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즉 한미동맹을 이끌어 냈다. 이승만이 전쟁에서 이루어 낸 성과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승만과 함께 전쟁을 지휘했던 한미 지휘관들의 평가를 분석해 보면 왜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차례로 역임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장군은 “이승만은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서는 타협을 몰랐고,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불가능한 일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마음속에는 깊은 애국심으로 가득했

고, 애국심에 의지해 오랜 망명생활을 보내고 귀국한 이후 눈 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고 회고했다.⁵⁹⁾

1953년 6월 18일 반공포로석방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 (Mark W. Clark) 장군도 이승만에 대해 “이승만의 생애는 하나에서 열까지 조국을 위한 애국에의 집념으로만 점철되어 왔다. 또한 그는 동맹국인 우방(友邦)일지라도 그의 정치 이념에 맞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하고 나선 일이 허다했다. 나는 이 점에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⁶⁰⁾

정전협정 체결당시 미 제8군사령관이던 테일러(Maxwell D. Taylor) 장군도 “한국의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베트남에도 있었다면, 베트남은 공산군에게 패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반공지도자로서 영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⁶¹⁾

6·25전쟁을 전후하여 육군참모총장을 두 차례나 역임했던 백선엽(白善燁) 장군도 “전쟁의 위기를 이승만이 아닌 어떠한 영도자 아래서 맞이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회고했다.⁶²⁾

이승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장래 운명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위국헌신(爲國獻身)했던 국가지도자였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로서,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전쟁지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전시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국가과업을 그 누구보다 훌륭히 완수했다. 그런 점에서 전쟁기간 이승만과 함께 싸웠던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의 존재는 커다란 축복이었다. 그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음을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끝>

59)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김재관 역, 『한국전쟁: 제2대 유엔군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176쪽.

60) Mark W. Clark, *From the Danube to the Yalu*, New York: Harper and Bros., 1954, 김형섭 역, 『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국제문화출판공사, 1982, 238-239쪽.

61) 프란체스카 도너 리 지음, 조혜자 옮김,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도서출판 촛불, 1992(5쇄), 57쪽.

62) 백선엽, 『6·25전쟁회고록 한국 첫 4성 장군 백선엽: 군과 나』, 351쪽.

<발제 5>

이승만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업적

이철순(부산대 정외과)

1. 머리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제1공화국 시기에 외교에서는 큰 업적을 남겼으나 국내정치나 경제 분야에서는 업적을 내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도리어 정권욕에 사로잡혀 독재로 일관했다거나, 경제 분야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는 어두운 이미지가 일반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러나 사실의 측면에서 과연 그러한가? 이 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평가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2. 정치 분야의 업적

1)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 건국

■ 이승만의 뒤늦은 귀국: 미국무부의 방해

- 이승만은 1945년 10월 16일 우여곡절 끝에 귀국. 그 과정에서 미 국무부 관리들은 이승만에게 여행증을 발급하지 않고 귀국을 오히려 방해함.
- 이승만은 1940년 이래 국무부를 뺏길나게 드나들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라거나 소련을 지속적으로 비방해 왔기 때문에 미소협조노선을 추구하는 미국무부는 그를 맹목적인 반공·반소주의자로 낙인찍고 그의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
- 그래서 미국은 이승만이 귀국하게 되면 미국의 대한정책 실천에 방해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함.
- 요컨대 이승만은 1947년 9월까지 미국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건국운동을 벌이게 됨.

■ 신탁통치 반대: 미소협조를 믿지 않은 정치현실주의자

- 1945년 당시 미국의 공식적인 대한정책은 미소협조에 기반을 둔 신탁통치 정책
- 철저한 반소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은 이 노선을 수용할 수 없었음. 그는 이미 1943년부터 미국의 신탁통치 정책을 반대한 전력이 있었음.
- 미국무부 관리 존 빈센트가 1945년 10월 20일 미국에서 신탁통치 관련 발언을 하게 되자,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이미 신탁통치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
-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가 공식화되었다는 소식이 12월 28일 국내에 알려지자, 이승만은 신탁통치안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하기 시작.
- 이승만은 탁치가 강요된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놓은 꼴이 될 것이며, 소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공산당의 탁치론은 영원히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팔아먹으려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성토.
- 나아가 이승만은 공산당은 결국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시키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경고함.
- 이승만은 신탁통치 반대 투쟁을 통해 좌익에게 유리했던 정국의 흐름을 우익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바꾸게 됨.

■ 좌우합작 반대

- 미국은 한국에서 미소협조에 기반을 둔 신탁통치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소련에게 호소력이 있는 좌우합작 정책을 제1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1946년 5월부터 추구하기 시작함.
- 그러나 1941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승만은 미국의 대소유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좌우합작정책에 대해서도 이미 반기를 든 적이 있음.
- 이승만에게 좌우합작이란 한반도가 소련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 결국 공산화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이 꿈꾸어 왔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음.
- 이승만이 이렇게 좌우합작에 반대했던 이유는 당시의 국제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임. 특히 그는 동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소련이 주도하는 소비에트화 정책에 정통하였음.
- 특히 1945년 초에 수립된 폴란드 좌우연립정부는 명목상의 정부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공산정권이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
- 이승만은 1945년 11월 폴란드에서 민족 간에 내란이 일어나 피를 흘리고 싸우기에 이르렀다고 폴란드 사태를 언급하였고, 12월에는 폴란드의 극렬분자들은 독립을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립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함.

- 사실 말이 좋아서 좌우합작이지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좌우합작 혹은 좌우연정(left-right coalition)은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전술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함. 만약 미국이 권유한 좌우합작을 받아들였다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왜냐하면 북한에는 우파세력이 절멸된 상태에서 남한만 좌우합작을 한다면 한반도의 세력 관계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좌파3對 우파1의 힘의 관계이기 때문임. 이런 상태에서 김구, 김규식이 주도한 남북합작까지 진행되었다면 한국의 공산화는 명약관화함.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의 해안이 돋보임.

■ 1946년 6월 정읍발언의 의미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두고 “이승만은 분단을 획책한 원흉”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

▲ 이승만의 정읍발언 내용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민주적인 제정당의 자격을 두고 미소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5월 16일 무기 휴회를 선언함.
- 이승만은 미소공위의 귀추를 관망하다가 미소합의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946년 6월 3일 유명한 정읍발언을 하게 됨. 즉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라고 선언함. 이 발언이 이승만이 분단 고착화 원흉으로 몰리는 한 원인이 됨.

▲ 스탈린의 1945년 9월 20일자 비밀지령

- 그러나 당시의 국제정세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심각했음.
- 스탈린은 시베리아 연해주의 군관구 및 제25군 군사평의회 앞으로 보낸 9월 20일자 비밀지령에서 38선 이북 한반도지역에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고 함.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공산주의 정권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단독정권을 의미함.
- 또한 이것은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발언보다 훨씬 앞선 것임.
- 스탈린이 이러한 지령을 내린 이유는 194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런던 외상회담에서 자신의 일본 점령 참여 권리 요구가 연합국으로부터 거부되었기 때문임. 스탈린은 미국과의 협조를 포기하고 한반도의 북반부만이라도(Socialism in One Zone by Erik van Lee)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임.
- 또한 1945년 12월 25일에 나온 소련군 총사령관 슈킨의 보고서는 9월 20일자 스탈린의 지령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이 시기는 미소협조노선에 근

거한 모스크바 3상회의가 열린 시점으로 소련은 실제 이 시기에 겉으로만 미소협조 노선을 추구할 뿐 실제로는 북한에 남한보다 먼저 단독정권을 수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사실상의 단독정권: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스탈린의 9월 20일자 비밀지령에 의해 1946년 2월 8일 수립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de facto government)”였음.
- 왜냐하면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주민사상개조운동, 경제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고, 특히 강력한 정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토지개혁을 불과 20여 일 만에 입안·시행하였기 때문. 또한 1948년 2월에는 심지어 ‘조선인민군’이라는 정식 군대도 창설함. 이 당시 남한에는 정식 군대가 없었음.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시점이 대한민국이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보다 2년 반 전이고, 이승만의 정읍발언보다 약 4개월 빠른 시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한반도 분단은 미국보다는 소련과 김일성정권에 의해 먼저 추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승만은 분단을 획책한 원흉이 아니었으며, 이승만의 1946년 6월 정읍발언은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지를 북한의 공산화에 대응하여 만들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었음.
- 혹자는 이런 맥락에서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이승만독트린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제연합(UN)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노력

- 이승만은 정읍발언 이후 1946년 6월 28일 자신의 측근 임영신을 미국에 파견하여 유엔을 통해 남한과도정부를 수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음.⁶³⁾ 이는 매우 이른 시기였음.
- 또한 신탁통치, 좌우합작, 남한단정 문제로 미군정과 갈등이 생기게 되자 이승만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1946년 12월초부터 4개월 동안 방미외교를 수행.
- 미국에 도착한 이승만은 1947년 1월 27일 측근인 올리버에게 ‘한국문제의 해결방안 (A Solution of the Korean Problem)’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문건을 국무부에

63) 이승만은 임영신을 1946년 9월 공식적으로 UN 한국 대표로 임명했다. 하지만 1946년 6월 28일 이승만이 굿펠로우에게 보낸 서신 내용에 따르면 그 때 이미 임영신을 미국에 보낼 결심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Louisa Yim will be going to the States soon I hope she will arrange to use her money there. She will deposit a certain amount for you and you can settle your business and come out to Korea as soon as possible. Of course it would be much better for us, if you could come out now.” 국사편찬위원회, 『大韓民國史資料集/ 國史編纂委員會 [편]. 28: 李承晩關係書翰資料集』1 (1944-1948)(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 p. 102.

전달하도록 함.

- 6개항으로 이루어진 이 문건 중 주요 내용은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남한을 다스릴 과도정부를 선거를 통해 수립하고 이 과도정부를 유엔에 가입시켜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미소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다.
- 이승만이 미국에 있는 동안 트루먼 대통령 등 고위인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⁶⁴⁾ 그의 도미외교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미국은 결과적으로 이승만의 노선을 받아들이는 모양이 됨.
- 왜냐하면 미국은 19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여 소련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1947년 9월에는 미소협조에 기반을 둔 신탁통치를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승만의 노선을 따르는 꼴이 됨.

■ 최초의 민주적 “5.10 총선거” 실시 성공

- 1947년 9월 17일 미국의 마셜 국무장관은 한국 문제를 유엔총회 공식 의제로 제안했고, 유엔총회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한국 문제를 의제로 채택.
- 10월 17일에는 미국의 유엔대표부는 유엔총회 정치안보위원회에서 ①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남북한에서 인구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② 선거 감시를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 파견, ③ 총선거 당선자들이 의회를 구성해 통일 한국정부 수립, ④ 한국의 통일정부가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즉시 미소양군 철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상정.
- 1947년 11월 14일 유엔총회는 정치위위원회가 상정한 결의안을 수정 없이 찬성 43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채택하여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기존 구도를 벗어나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담당하게 됨.
- 1948년 1월 8일 유엔위원단은 입국했으나 김일성과 소련의 그로미코는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여 북한에서의 총선거 불가능해지자, 유엔위원단은 이 문제를 유엔 소총회에 회부
-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유엔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31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통과시킴. 이것은 남북한에서의 총선거와 단일 정부 수립이라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남한만의 총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으로 변화시킨 것으로서 결정적 의미를 지님.
- 1948년 2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유엔위원단의 비공식회의에서 위원단은 접근 가능한 지역 내에서 선거를 감시하기로 결정함.

64) 그러나 이승만은 미 국무부 점령지역담당 차관보 힐드링을 만나 남한 과도정부 수립안을 설명할 수 있었고 힐드링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기도 했다.

- 1948년 1월 8일 유엔위원단이 입국하자 이승만은 이를 환영하면서 유엔위원단에게 조속한 남한 총선거 실시와 정부 수립의 필요성 역설. 또한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단독 선거를 결정하자 이 결정을 적극 지지함.
- 이승만은 유엔위원단 단장인 인도 대표 메논 설득하는 데 성공. 이는 이승만이 모운속을 이용한 계획이 성공한 것임.
- 메논은 원래 남한 단독정부 수립안에 중립적이었던 인도 정부와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유엔소총회에 이승만의 지도력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고, 2월 28일 유엔임시위원단 회의에서 소총회의 결의를 지지하는 찬성표를 던져 대한민국 건국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함.
- 5월 10일 투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부분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음. 등록한 선거인의 95.2퍼센트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이는 총 유권자의 71.6퍼센트.
- 유엔위원단은 6월 25일 “1948년 5월 10일의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접근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를 점하는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들의 자유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합법성을 인정함.
- 5.10 총선거를 면밀히 연구한 서울대 황수익 교수도 선거가 남로당의 폭력 투쟁에 대한 미군정의 강경 대응 속에서 전반적으로 경색된 분위기에서 시행되었지만, 유권자의 후보 선택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된 증거는 없었으며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사례도 거의 없었다고 결론 내림.⁶⁵⁾

■ 대한민국 헌법 제정 작업 총괄

-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소집된 제헌국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제정 작업을 총지휘해 그 임무를 완수함.
- 이승만은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마련한 헌법 초안의 정부 형태 관련 규정을 자기의 뜻에 맞게 수정하도록 설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권력 구조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
- 이승만의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소신: “대통령을 군주같이 앉혀 놓고 수상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민주제도일 것이다. 민중이 대통령을 선출한 이상 모든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대통령책임제를 강력히 주장함.(1948년 6월 7일 기자회견)
- 이승만의 내각책임제 반대: 6월 15일과 6월 21일 두 번 기초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내각책임제안을 대통령중심제 안으로 변경하도록 압력을 가함. “만일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 그러한 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직책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 국민운

65) 황수익: “5.10 총선거의 재조명”, 『한국사시민강좌』 38집, 2006, 101쪽.

동이나 하겠다”고 선언함.

- 이승만의 압력으로 헌법기초위원회는 6월 23일 ‘내각책임제 요소가 약간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됨. 결국 이승만이 주장한 대통령중심제가 채택되었고, 대통령 선출방법은 국회에서의 간선제로 결정됨.
- 이승만은 7월 19일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외국의 압력이나 도움 없이 순수하게 한국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또 자기의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만드는데 성공함.
- 이승만은 헌법 초안 심의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채택, 단원제 선택,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천권(提薦權) 부결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
- 대한민국 헌법이 참고한 헌법: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포한 대한민국건국강령, 1947년 입법위원의 조선임시약헌, 1948년초 북한에서 작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미국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일본의 메이지 헌법 등을 참고한 이상적인 헌법(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 유명익의 평가: “이 헌법의 제정과 공포로 신생 대한민국은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거의 완벽하게 모방해 법제화한 국가이자 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 대한민국 수립 선포와 유엔의 승인 획득

-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거행
- 새 정부가 수립된 다음 한미 정부 간에 정권 이양 협상이 시작되어 8월 24일 ‘한미 군사협정’이 조인되고, 9월 11일에는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소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정권 이양 절차가 마무리 됨.
- 12월 12일 유엔총회는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국제적 지위를 부여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함.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전 한반도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됨.

2)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

■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실천 공약

- 여섯 가지 핵심 내용 중 앞의 세 가지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것
- 특히 두 번째 핵심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함.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개인(individual)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이 점에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음.

1.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全的(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2. 民權(민권)과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3. 자유의 뜻을 바로알고 尊崇(존송)히 하며 限度(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4. 서로 理解(이해)하며 協議(협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國鍵(국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서 가장 專力(전력)하려는 바는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노동하며 고생하는 동포들의 生活(생활)程度(정도)를 改良(개량)하기에 있는 것입니다.
6. 우리가 가장 필요를 느끼는 것은 經濟的(경제적) 援助(원조)입니다.

■ 대통령직선제 확립

▲ 건국헌법의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둘러싼 대립

- 한민당의 내각책임제와 이승만의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가 대립함.
- 결과는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準내각제적 대통령제(semi-parliamentary presidentialism, 순수 대통령제는 아님)가 채택됨. 건국헌법의 국무총리제, 대통령의 국회 선출, 내각 개조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한 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을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한 점 등을 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승만과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대립은 제1공화국 내내 갈등의 씨앗이 됨. 왜냐하면 이승만은 1919년부터 미국식 순수대통령제를 신봉한 사람이었기 때문임.

▲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재해석: 대통령직선제의 확립

- 지금까지는 부산정치파동에 대해 이승만에 의한 헌정질서 중단에만 주목함.
- 그러나 올리버는 이승만이 1952년 8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산정치파동을 비폭력 무혈(bloodless) 혁명으로 규정함. 또한 한국에서는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라는 유일하게 옹호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점도 지적함.
- 이승만은 강력한 대통령제의 신봉자로서 그에 부합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함.
- ① 1948년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선제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하였고, ② 그 조건이란 국민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입증되면 대통령 선출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③ 한국 국민들의 공산침략에 대한 불굴의 저항정신이 바로 국민의 능력의 충분한 증거라는 것.
- 이승만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원하지 않는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압력 같은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함. 이승만은 국회를 불신함.
- 일본이 이승만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 ① 이승만의 한·일 강화조약 체결 거부, ② 일본의 산업부흥에 유리한 미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이승만의 반대, ③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군 병력의 사용 거부 등
 - 미국이 이승만의 당선을 원하지 않는 이유: ① 미국의 휴전 정책, ② 미국의 제한전 계획, 미국의 한국 재분단 정책에 이승만이 반대했기 때문임.
 - 미국은 이승만 대신 친미적인 장면을 원하고 있었고, 이승만은 장면이 미국의 정책에 순응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⁶⁶⁾
 - 이승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상과 같은 이유로 미국과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었음. 만약 이승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원하는 장면이 국회에서 간선으로 당선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이승만이 보기에 한국의 국익을 크게 해치는 일이었음.

▲ 부산정치파동 당시 정치인들의 회고

- 이재형의 회고: “개헌파의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 오래 전부터 탐닉되어 있는 민주주의 지상론을 방패로 들고 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가가 존립하는 것처럼 착각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확대한다면 마치 국가는 민주주의를 위한 한낱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때에는 국가의 독립 자체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를 해체하여도 가하다는 극단의 논리가 유도되는 것이다. ----- 정치파동은 개헌파들이 두고두고 되풀이 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성전이 아니고 민주주의 관념적 지상론에 대한 국가독립의 존엄이 가한 현실적 수정인 것이다.”⁶⁷⁾
- 이재학의 회고: “이박사는 미국식 직접민주주의의 신봉자였다. 그의 신념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보고 국민은 현명하므로 모든 판단은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박사는 일부 정객들을 믿지 않고 모든 권한을 직접 국민에게 돌리고자 했다. 부산정치파동에서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한 것이라든지 사사오입개헌에서 국민투표안을 통과케 한 것 등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부산정치파동의 결과가 민주주의 형태를 말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더욱 신장했다는 점에서 독재라고만 낙인찍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⁶⁸⁾

66) 로버트 올리버, 『건국과 나라 수호를 위한 이승만의 대미투쟁(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서울: 비봉출판사, 2013), 597-598, 588-589쪽.

67) 이재형, “정당정치와 이념과 구현”, 『신천지』 1953년 8권 1호, 28-29쪽.

68) 이재학, “안에서 본 이승만박사”, 『신동아』 1965년 9월호, 199쪽.

- 허정의 회고: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의 재선을 바라고 있으며 자신의 집권은 일종의 당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쟁의 와중에서 이 대통령이 재선을 바란 것은 개인적인 집권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자신의 계속된 영도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해 남북 분단이 고정된 데 대해 대단한 책임감을 느끼고 통일에 대해 비장한 의무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집념 때문에 대통령 재선을 일종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다.”⁶⁹⁾

■ 제1공화국 시기의 외양민주주의(facade democracy) (서울대 이정복 교수의 견해)

- 제1공화국 시기의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와 같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승만이 통치한 제1공화국은 ‘외양민주주의(facade democracy)’는 지켜졌음.
- 외양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파이너(S. Finer) 교수로부터 빌려온 것으로서⁷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체제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체제를 말함.⁷¹⁾
- 이정복 교수: “제1공화국 시대의 낮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그리고 초기 단계의 근대국가건설수준, 자유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정치적 전통과 구조의 결여,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제1공화국 시대의 정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외양으로는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1공화국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립을 지향하고 그러한 궤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 한국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이승만정권이 적어도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⁷²⁾
- 이와 비슷하게 최근 제1공화국의 정치체제를 단순히 독재가 아니라 半민주주의체제(semi-democratic system)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 등장.⁷³⁾

■ 제1공화국 시기의 외양민주주의(facade democracy) 평가

69)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서울: 샘터사, 1979), 180쪽.

70) 파이너 교수는 외양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적 제도·절차·안전장치들이 법에 의하여 확립되어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들이 역사적인 과두제에 의하여 조작되고 위반되어서 집권이 이루어지는 체제”라고 규정했다. S. E. Finer, Comparative Government(New York: Penguin Books, 1970), p. 441.

71) 이정복,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관계”,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 56.

72) 이정복, “제1공화국의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정책”, 『한국정치연구』 제5권 1호, 1996, p. 4.

73) 이철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이승만정권(1948-1960)”,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2023년 4월 26일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 첫째, 집권기간 동안 선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함. 심지어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함.
- 둘째, 국회를 한 번도 해산하지 않음. 대부분의 독재국가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
- 셋째, 집권말기에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로 상징되는 보수 양당제도를 용인함으로써 근대적 정당제도의 발전에 기여.
- 넷째,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기여. 1949년 7월 지방자치법 제정· 공포함.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5월 10일에는 도의원 선거가 실시됨.
- 다섯째, 언론의 자유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함. 『동아일보』, 『경향신문』, 『사상계』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1959년 4월 『경향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지 않았음.

▲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

-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전기(*Korea's Syngman Rhee*)를 쓴 리처드 알렌(Richard Allen, 본명 John Taylor, Maxwell Taylor의 아들)조차 이승만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한 사실을 인정함.
- 알렌의 발언: “한국은 다른 독재정권과 비해 볼 때 상당한 언론자유를 향유한 것이 눈에 띄었다. 물론 한국의 언론자유는 모든 일간지가 정부의 처사에 인종해야 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개별적인 비판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서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언론자유는 아니었다. 그리고 신문의 활동이 외국인 사절의 관찰대상이 되는 서울에서는 지방보다 더 많은 언론자유가 허용되었다.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와 연관된 헌법조항이 크게 침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녔던 언론자유는 정도는 괄목할 만하였다.”⁷⁴⁾
- 송건호도 자신의 저서 『한국 현대언론사』에서 “언론탄압도 심했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언론자유도 어느 만큼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⁷⁵⁾

3. 외교 분야의 업적

■ 대한민국의 승인과 6.25전쟁에 대한 미군의 즉각 개입

- 1948년 12월 파리 유엔총회에서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을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수립된 ----- 한반도 내 유일 합법 정부로”로 인정받고, 이어서 1949년말까지 미국

74) 리처드 C. 알렌, 윤대균 역, 『한국과 이승만』(서울: 합동통신사, 1961), 220쪽.

75)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서울: 삼민사, 1990), 99쪽.

을 비롯한 30여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을 이끌어낸 사실.

■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이승만라인’) 선포

- 1965년 6월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독도를 포함한 인접 해상에서 한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어족 자원을 보호한 것은 대일외교사상의 큰 업적

■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조직

- 1954년 한국외교관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로 제네바회담에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벌임
- 중화민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원수들과 긴밀히 접촉해 태평양동맹을 통한 아시아 집단안보체제의 결성 모색
- 1954년 아시아민족반공연맹 조직하여 이 지역의 반공, 반일 전선 형성에 앞장섬.

■ 1954년 7월 국민자격의 미국 방문

- 1954년 7월 27일고 28일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 7월 28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의회에서 연설; 한국 외교사상 이정표적 사건

■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 이승만의 노력

- 1949년 3월 장면 초대 주미대사와 조병옥 대통령 특사 겸 유엔대표단 단장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군 육성을 위한 군사원조를 요청하면서 상호방위조약(mutual security pact)의 체결 가능성 타진했으나 미국정부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대 이래 어느 나라와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일이 없다”면서 이 제의를 묵살
- 1949년 5월 17일 미군 철수를 인정하는 대신 양국의 상호방위협정 체결 요구했으나 미국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

- 1950년 10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극적으로 달라지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4월 맥아더를 해임하고 5월 13일 국가안보회의를 거쳐 ‘정치적 타결’을 통해 38선 부근에서 휴전을 모색하기로 결정
- 이승만은 휴전은 한국인에게 ‘사형 집행 영장’이나 다름없다며 휴전에 완강히 반대.
- 1952년 3월초 트루먼에게 보낸 공한에서 상호방위조약 체결만이 한국 국민이 휴전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미국이 이 요구를 거부하면 한국군은 단독 북진하겠다고 위협했으나 트루먼은 조약 체결 요구를 묵살함.

- 아이젠하워와의 교섭: 1953년 4월 14일 “만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조약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한국민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면서 조약 체결 제의했으나 미국은 계속해서 거부
 - 미국의 대안은 대제재선언(The Greater Sanctions Declaration)의 공포와 한국군의 20개 사단 증강: 휴전 이후 한국 파견 미군의 오키나와 철수와 한국의 안보를 위해 16개 유엔참전국이 공동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며 적이 만약 재침할 때는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내용.
 - 이승만의 확대제재선언 거부: 이 선언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하고 “당신들은 유엔군을 모두 철수시켜도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민주 국가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협조를 약속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응수함.
 - 1953년 6월 6일 아이젠하워의 대안 제시: 미필리핀 조약이나 ANZUS 조약에 준하는 방위조약 체결의 용의 있다고 밝힘.
 - 이승만은 미일안보조약(미군의 일본 영토 내 시설과 구역 사용권 허여)에 준하는 조약을 기대하고 강공책으로 6월 16일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독단으로 석방
 - 미국의 로버트슨 파견과 소휴전회담(mini truce talk)의 개시: 1953.6.26. - 7.10
 - 회담 도중 이승만의 미국의 양심을 건드리는 발언 내용: “우리는 1882년에 조미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을 확고히 신뢰했지만 과거에 미국에 두 번씩이나 배반을 당했습니다. 즉,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했을 때와 1945년에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은 또 하나의 배반 같은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친구(미국인)들에게 지금까지 품고 있던 무조건적인 신뢰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를 타트하겠습니까?”
 - 1953년 7월 9일 합의 도달하고 7월 11일 공동성명 발표
- 이승만의 약속: “휴전에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겠고”, 또 “유엔군이 한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한국군을 그 휘하에 남겨두겠다”라고 약속함.

로버트슨의 약속: ① 휴전 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② 한국의 전후 복구를 위해 장기간 경제원조 제공, ③ 한국군 병력을 육군 20개 사단으로 증강하며 해군과 공군의 장비 지원 ④ 휴전 협정에 따라 개최될 국제정치회담에서 90일이나 지나도록 별로 진전이 없으면 한미 양국은 이 회담과는 별도로 한국의 통일방안을 협의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변영태와 딜레스 사이에서 서울에서 8월 8일 가조인되었고, 양인

은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조약에 서명함.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식 발효는 1954년 11월 17일 “경제와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이 조인됨으로써 가능하게 됨. 조약 발효에는 1년 이상이 필요했음. 한국 국회와 미국 상원에서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했고 또 체약 당사국이 조약에 따라 수행할 경제, 군사 협력에 관한 협정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했기 때문임.
- 전체적으로 이 조약은 남한에 미군의 주둔권을 허용한 점에서 미필리핀조약 혹은 ANZUS조약보다 미일안보조약과 유사한 조약. 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따라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
- 이승만의 북진무력 통일의 포기과 한국군 72만 병력 증강의 교환: 한미합의의사록 제2조는 “대한민국은 ---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권하에 둔다”라고 규정하여 북진무력 통일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1955년 회계연도에 7억달러 규모의 군사, 경제원조를 받고, 10개 예비사단의 신설과 79척의 군함, 약 100대의 제트전투기를 받게 됨.

▲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의미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치에 대한 이승만의 평가(1953년 8월 9일 조약 가조인 다음 날)
“이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의 후손들은 앞으로 누대(累代)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공동노력은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우리의 안보를 오랫동안 보장할 것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 성립의 의의: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보호 우산’ 아래 군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게 됨. 이러한 변화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개혁가들이 추구했던 ‘문명 개화’와 ‘부국강병’이라는 국민적 이상의 성취를 의미함. (유영익의 평가)
- 이중봉쇄(dual containment) 효과
 - ① 미국의 입장: 북한의 무력 남침도 봉쇄할 수 있지만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권 하에 둠으로써 이승만의 무력 북진통일도 봉쇄할 수 있음을 의미.
 - ② 이승만 혹은 대한민국의 입장: 이승만은 공산주의의 위협과 공격을 사전에 봉쇄하는 동시에 그가 줄곧 심각하게 우려해온 일본의 팽창주의적 야욕도 저지시키는 이중봉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받기를 원함.
 - ③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휴전의 성립과 이승만의 단독 북진무력

통일을 견제하는데 성공했고, 반면에 이승만은 공산주의세력과 일본의 팽창주의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는데 성공.

■ 토론: 이승만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 대한 회고담

▲ 이승만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언술

① 1953년 6월 17일 이승만은 브릭스 대사와의 회동에서 한국은 오늘(today)은 공산주의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그리고 내일(tomorrow)은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궁극적인 지배라는 야욕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삼 역설. 이승만의 일본경계론은 일본의 전통적인 팽창주의와 한국민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함. 따라서 이승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편향적인 친일정책의 오류를 비판했고, 나아가 그것의 수정을 강력히 요구.

② 휴전협정의 체결 직전인 7월 25일 이승만은 델레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공산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산주의자들의 채침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야욕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위조약이 아니면 한국의 국가적 생존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주장.

다음 날 이승만은 또다시 델레스에게 휴전협정을 위반한 공산군이 무력으로 공격할 경우 실행될 미국의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군사적 대응이 한국에 대한 일본이나 다른 외국이 공격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③ 8월 4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델레스 국무장관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8월 5일 이승만은 델레스에게 가능한 한 강력한 방위조약이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하고, 한국민은 소련보다도 일본을 더욱 우려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저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나아가 이승만은 만약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어떠한 공격에도 한국은 방어될 것이라고 선언해 준다면, 한국민에게 있어서 그것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일본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며, 일본은 한국을 재점령하겠다는 야욕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델레스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또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서태평양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나 이승만은 일본인들은 서양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데에는 놀라운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이 한국을 또다시 필요하다고 미국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말함.

▲ 이승만의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에 대한 회고담

○ 부통령 닉슨의 회고

- 1953년 11월 중순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이승만의 강의는 반공주의자인 닉슨에게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평생 동안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함.
- 이승만이 닉슨에게 전한 말 : 한국의 단독적인 행동에 관한 나의 모든 말들은 미국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 미국이 이[승만]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에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협상수단을 잃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는 우리 모두의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항구적인 견제(constant check)가 된다. ---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평화를 너무나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제네바(Geneva)정치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1954년 4월 닉슨은 미국기자들에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현실주의자요, 동시에 음모자이며, [따라서] 복잡한(complex) 인물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이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동을 두려워하는 한 그들은 제네바회의에서 그것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하면서, 이승만을 옹호.
- 후일 닉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는 이승만의 용기와 뛰어난 지성에 감명을 받고 한국을 떠났다. 나도 역시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함에 있어 불확실성(being unpredictable)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승만]의 통찰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고 기록한 다음 정치가로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더욱 더 이승만의 현명함을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술회함.

○ 아이젠하워의 회고

-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아이젠하워는 자신의 일기에 이승만을 이렇게 묘사. “이[승만]이 철저하게 비협조적이고, 나아가 반항적이기까지 한 사례들을 담은 긴 목록을 여기서 열거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이[승만]은 지금까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동맹자(an unsatisfactory ally)였기 때문에 그를 가장 심한 말로 통렬히 비난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는다.”

4. 경제 분야의 업적

-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에 경제성장률이 낮아 대다수 국민의 생활이 궁핍했기에 이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많이 남김.

■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악성 인플레이션 수습

- 6.25전쟁 뒤 미국으로부터 22.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원조를 받아내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한 결과, 1955년까지 전화(戰禍)로 파괴된 경제시설과 기타 설비를 거의 완전히 복구하고 철도, 도로,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 1957년부터 해방 후 지속한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수습해 안정된 경제기반 조성

■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수립

- 3개년(1960-1962)경제발전계획안 작성: 부흥부(1955년 창설) 내의 '산업개발위원회'(1958년 5월)에서 1959년 봄 작성
- 연평균 5퍼센트 성장, 실업자 감소, 대외 의존도 축소 등을 목표로 함
- 1960년 4월 15일에야 비로소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제1공화국 기간 동안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 장면의 민주당 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활용됨

■ 제조업의 성장(우정은의 연구)

- 1950년대 한국의 연평균 공업 성장률은 10.8%. 이것은 1차 산업의 2.5%와 서비스 부문의 3.9%에 비해 훨씬 높은 것임.
- 1953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달러로 환산한 제조업의 생산 가치는 계속 상승하여, 1953년 1차 산업 부문의 절반을 약간 넘던 것이 1960년에 이르자 거의 동등해짐.
- 이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은 3배 성장, 경공업은 2.5배 성장함.
- 이렇게 보았을 때 이승만 시대를 단순히 경제 침체와 악화의 시대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음.

■ 정치적 수입대체산업화(방어적 산업화, defensive industrialization)의 추구

▲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 미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애치슨, 케닌, 덜레스 등)에게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더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였음.

- 한국은 일본에 대한 종속국가(dependent state)가 되어야 했음.
- 한국 전쟁 이후 지역 재건 논리(일본을 교역의 중심지이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으로 설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을 일본 경제 성장에 예측시키고자 함.
- 한국은 일본 상품의 시장이 되어야 했으며, 수입 대체가 아니라 수출 촉진 정책을 실시해야 함.
- 만약 미국 의도대로 정책이 실시된다면, 한국은 일본 경제에 예측될 터였음.

▲ 이승만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저항

- 이승만은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고 맹렬히 저항.
- 이승만의 저항은 한국이 일본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적 부속국**이 되느냐(미국의 개념), 한국이 자주성을 유지하고 **자족적인 국가**가 되느냐(미국의 자원이 한국 경제에 투입될 수 있다면)를 놓고 벌어진 갈등

▲ 이승만은 특히 동아시아 전체에서 원조 프로그램을 조정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반대

- 미국이 원조 자금을 동아시아에 순환시킨 이유는 두 국가를 동시에 원조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 재정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선정한 일본을 한국보다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행함.
- 이승만은 원조액으로 일본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허용할 수 없었음. 이승만은 한국과 일본의 제로섬 게임에서 미국이 달러를 모두 한국에 주고 한국의 산업을 키워 주기를 원함.
- 이승만은 **미국의 달러의 이중 작용(double service) 정책**을 비판, 즉 “미국의 정책은 달러를 쓸 때마다 1달러는 일본, 1달러는 한국에 주겠다는 것이다”라는 정책을 비판함.
- 이승만은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수입대체산업화를 실시. 그래서 그가 추진한 산업화는 방어적 산업화(Defensive Industrialization)라고 할 수 있음. 이승만은 원조 받은 달러로 일본 상품을 사느니 자국의 산업화를 위해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
- 이승만은 지역원조 프로그램의 우선 순위를 바꿔 달라고 아이젠하워에게 요청
“그것(원조의 조정)은 일본에서 더 많은 물자를 구입하고 그 결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재건이 늦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일본의 손아귀에 놓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이승만의 농지개혁 구상

- 1946년 3월에 발표한 민주의원 「임시정책대강」의 제9, 10, 11항⁷⁶⁾에서 농지개혁 구상 밝힘.
- 1948년 3월 20일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구상
“정부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 나라를 엄청나게 자유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파시스트, 반동세력 그리고 극우파 운운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대경실색할 것이요. 농지개혁법이 가장 먼저 제정될 것이고, 다른 많은 자유주의적 조치들도 차례대로 단행될 것입니다.”

▲ 이승만의 농지개혁 추진 동기

- ① 인도주의적 동기: 지주 계급의 착취에 시달려온 가난한 소작농을 사회경제적 질곡에서 해방하겠다는 동기
 - ② 경제적 동기: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해 상공업을 발달시키겠다는 동기
 - ③ 정치적 동기: 남한 농민들을 자기의 지지세력으로 포섭하려는 동기
- ※ 북한의 토지개혁(1946년 3월) 완료도 농지개혁을 재촉하게 함.

▲ 농지개혁법의 공포

- 국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기획처안’과 국회에서 만든 ‘산업위원회안’을 토대로 1949년 4월 농지개혁법안 통과되고 정부는 6월 25일 일단 공포
- 정부는 국회에 법안의 ‘줄렬한’ 부분을 수정 요구하여 농지개혁법 개정안이 1950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3월 10일에 공포됨
- 정부의 후속 조치: 농지개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월과 4월에 공포. 6.25전쟁 발발 이틀전인 6월 23일 농지분배에 관한 세부 규정과 요령이 담긴 농지분배점수제규정(農地分配點數制規定)을 공포

▲ 농지개혁법과 시행령의 내용

- 3정보를 상한(자정상한)으로 그 이상의 농지는 국가가 유상으로 몰수하고 이것을 다시 3정보 한도 내에서 영세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
- 토지를 분배받는 농민은 주 작물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를 5년간 분할 상환
- 지주는 주 작물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정부매상 가격으로 계산해 1951년부터 1955년까지 균분지급키고 약정한 지가증권을 교부받게 되어 있었음.

76) 모든 몰수토지는 農民의 耕作能力에 의존하여 재분배함, 大地主의 토지도 동일한 원칙에서 재분배함(現所有權者에 대하여는 적당히 보상). 재분배된 토지에 관한 대가는 國家에 장기적으로 분납함.

▲ 농지개혁의 시행, 완료 시점

-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원안)이 심의되고 있던 1949년 초부터 이미 ‘시행법률 부재하에서 행정조치’로 개혁 시행을 독려했다고 함
- 농림부는 이승만대통령의 “만난을 배제하고 단행하라”는 유시를 받들어 개혁을 추진한 결과 1950년 4월 15일 수배자호수(受配者戶數) 총120만호 42만 정보의 농지분배를 완료했다고 함
-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분배 예정 토지의 60퍼센트 가량이 6.25전쟁 발발 이전에 완료되었고, 그 나머지는 전쟁 중인 1951년 4월 농지개혁법 시행 규정이 발표된 후 실시,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60퍼센트 가량의 토지가 분배 완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덕분에 농민들의 좌경화, 급진화를 막을 수 있었고 농민들이 북한의 남한 점령지에서의 토지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남한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음.

▲ 농지개혁의 시행 결과

- 농지개혁으로 총 소작지 면적의 40퍼센트에 달하는 58.5만 정보(귀속 농지 26.8만 정보, 일반농지 31.7만 정보)의 땅이 소작농에게 분배됨.
- 지주들이 농지개혁 시행 이전에 임의로 처분(방매)한 토지가 약 71만 정보에 달함.
- 결과적으로 정부 분배 농지 58.5만 정보(45퍼센트)와 지주 처분 농지 71.3만 정보(55퍼센트)가 자작화(自作化)되어 전체 면적에서 자작지의 비율은 92.4 퍼센트에 달함.
- 92.4퍼센트라는 수치는 일본의 토지개혁 이후 자작화 비율 90퍼센트를 능가하는 수치.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한 자작 중심의 토지 소유제 확립됨.

▲ 농지개혁의 정치·사회·경제적 효과

- 자작농체제의 확립: 지주제 해체, 지주 계급 소멸. 이는 세 가지 효과 발생 시킴.
 - ① 농업 생산성 증대의 가능성 열림.
 - ② 무엇보다도 지주 계급 소멸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 ③ 지주 계급의 소멸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확립시켰고, 이는 1960년대 박정희 시대의 사회에 대한 자율성이 큰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토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
- 한국자본주의 태동시킴: 지주의 산업자본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주의 손을 떠난 지가증권이 신흥 기업가의 귀속재산 불하에 활용되어 한국자본주의 태동하게 됨.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는 이루어짐.

- 한국 농업 생산성의 현격한 제고: 농지개혁 분배 농지의 지가 상환과 보상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수입 발생. 농지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잉여의 약 반액이 농업 개량에 투자됨.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제1공화국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탁월한 업적을 성취하였다. 우선 정치 분야를 보자면 첫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승만은 해방 직후에 자유민주주의 세력에게 불리한 정치지형을 극복하고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유엔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을 이룩해 냈다.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이라는 이른 시점부터 대한민국 건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는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제1공화국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듯이 민주주의의 암흑시대는 아니었다. 적어도 제1공화국은 겉으로는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졌고 언론자유도 향유하는 체제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半민주주의체제(semi-democratic system)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부산정치과동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합의하고 있는 ‘대통령직선제’도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외교 분야의 업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대통령의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일명 ‘평화선’, ‘이승만 라인’) 선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시 외교 분야의 최대 업적이자 백미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문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여러 번 배신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조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해양문명에 편입되고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뿐 아니라 일본의 공세도 봉쇄하려는 이중봉쇄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벼랑끝 전술에 대한 닉슨 등 서방세계 정치인들의 찬사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의 업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치 제1공화국 시기는 경제적으로 침체 일변도였고 5.16 이후 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신화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분히 박정희 정권이 자신들의 집권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유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수치상으로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을 비교하게 되면 제3공

화국의 경제성장률이 압도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에서 단절이란 없는 것이고 제1공화국의 시기에도 6.25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고 장기 경제개발계획도 마련되었다. 특히 장기경제개발계획 구상은 그 이후의 정권에 활용된 것도 사실이다. 경제 분야의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역시 농지개혁의 시행이었다. 특히 농지개혁이 6.25전쟁 직전에 60% 정도 완료되어 북한의 ‘민족해방을 위한 토지개혁’ 공세를 이겨내고 남한의 공산화를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지개혁으로 계급으로서의 지주가 소멸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필리핀이나 남미의 길을 걷지 않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28: 이승만관계서한자료집』 1 (1944-1948)(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용삼, “산업화 기틀 다져 자유민주주의 뿌리내린 12년”,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2023년 4월.
- 김용삼,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 (북앤피플, 2013).
- 김일영,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이영훈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 로버트 올리버, 『건국과 나라 수호를 위한 이승만의 대미투쟁(*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비봉출판사, 2013).
- 리처드 C. 알렌, 윤대균 역, 『한국과 이승만』 (합동통신사, 1961).
- 문정인·김세중 편, 『1950년대 한국사의 재조명』 (선인, 2004).
-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 우정은,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이승만 시대 수입대체산업화의 정치경제학”, 이영훈 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 (책세상, 2006).
-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거시적 재평가”,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 이재학, “안에서 본 이승만박사”, 『신동아』 1965년 9월호.
- 이재형, “정당정치의 이념과 구현”, 『신천지』 1953년 8권 1호.
- 이정복, “남북한의 정치체제와 관계”,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정복, “제1공화국의 성격, 정치제도 및 주요정책”, 『한국정치연구』 제5권 1호, 1996.
- 이정식, “스탈린의 한반도정책, 1945: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일조각, 2006).
- 이철순,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이승만정권(1948-1960)”,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 자료집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2023년 4월.
-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2001.
- 한국역사정치연구회·김용직 편, 『자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1: 이승만·장면 정부』 (대영문화사, 2014).
-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샘터사, 1979).
- 황수익: “5.10 총선거의 재조명”, 『한국사시민강좌』 38집, 2006.
- van Ree, Erik, *Socialism in one zone :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New York: St. Martin Press, 1989).

이승만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발전의 토대다지기

홍후조(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1. 서론
2. 교육대통령으로 국민을 깨우다
 - 1) 문맹률을 80%에서 20%로 낮춘 교육기적
 - 2)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의 완성
 - 3) 대학과 유학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
3. 과학기술로써 ‘상공’사회를 시작하다
 - 1) 에너지 확보 기술 : 연탄 화덕 개발과 원자력 연구
 - 2) 식량자원 증대 기술 : 화학비료공장, 제분산업, 국민건강 개선
 - 3) 건설·토목·전자의 과학기술 : 판유리·시멘트·제철공장 건설과 라디오 개발
4. 근현대 사회문화생활로 전환하다
 - 1) 남녀평등을 지향한 여성의 지위향상
 - 2) 종교정책과 기독교 위에 세우려는 나라
 - 3) 출판산업, 영화산업 및 대중가요의 확산
5. 요약 및 결론

1. 서론

오늘날 학교교과서와 교사들의 수업을 들으면 이승만은 분단의 원흉이고, 독재자며, 부정 선거로 쫓겨난 ‘나쁜’ 대통령이다. 선입견대로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제1공화국은 정말 대한민국에 해코지만 했을까? 국민들 절대다수는 이승만에 관한 책 한권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선입견으로 진영의 논리를 따라 사실과 무관하게 그를 재단(裁斷)한다. 심지어 대학교수를 비롯한 성인남녀들은 이승만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대체로 네 번째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낮추어 본다(영남대 박정희기념관 홈페이지 자료 참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자고 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 반대한다. 자유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놓은 분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의 결과이자 폐단이며, 이를 적극 교정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친대한민국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본다.

영토, 국민, 주권을 가진 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국가가 된다. 구미나 일본 등 근대 국가건설(nation-building)은 국가정체성 확립, 국가통합 달성, 정치참여 확대, 분배와 복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한배호, 2022:19). 여기에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과업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구소련, 중공, 독일, 일본, 남북한을 보면 “한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내용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새롭게 국가와 정권을 건설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한배호, 2022: 16).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문제이다. 6.25전쟁은 반공을 국민의 정체성으로 확립시켰다.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냉전기

를 거치면서 우리는 친미 자유진영으로 우리나라를 자리매김했다.

국민은 정치적 주체로서 대다수는 친대한민국적 국민이지만 극소수는 반대한민국적으로 국가전복을 꾀한다. 거기에는 자유민주교육을 받지 않은 외부 세력이 합세한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 공화, 반공, 평등, 인권, 법치, 평화, 복지 등을 추구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건설단계에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공적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한배호, 2022: 22). 정부는 이런 국가건설 방향과 토대는 이승만정부로부터 그 토대가 놓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의 국가건설의 방향으로서 반공에 기초한 자유민주공화국으로의 국가정체성 확립과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통한 부국강병의 국가통합이 이룩한 업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한배호, 2022: 31).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에서, ①독재가 아닌 인민의 자유와 진흥을 가져오는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신뢰할 것, ②전제정치가 아닌 민주정체에서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할 것, ③자유¹⁾의 뜻을 알고 존중히 하며 한도 내에서 행할 것, ④서로 이해하고 협의하며 자유 권리와 참정권을 누리되 국민의 총선거로 성립된 민주정부를 전복기도(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용납되지 않을 것, ⑤ 노동자 농민의 생활을 개량하기 위해 국제통상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 ⑥국제평화와 친선을 위해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줄 것¹⁾ 등을 강조했다.

유영익(2019: 272-294)은 이승만의 건국비전으로, ①기독교 국가 건설(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 국가), ②자유민주공화제 정부 수립(동양의 모범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③반공노선의 확립(반공의 보루), ④평등사회의 실현, ⑤교육과 상공업을 통한 문명 부강국 건설로 보았다. 그의 건국 비전은 한반도에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양의 일등 국가와 동등한, 개명·부강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건국비전에 따라 6.25라는 초토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유영익(2011:21)은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공간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수립한 지 2년 만에 6.25전쟁을 맞아 이를 극복하면서 신생공화국의 기초를 닦는데 주력한 결과 정치,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성취하였다. 그가 이룩한 업적들 가운데 ‘①미국식 대통령제의 확립, ②한미상

1) <표> 중화학공업 생산시설의 지역별 배치(1948년 현재, 단위:%)

업종	남부(남한)지역	북부(북한)지역
금속공업	9.9	90.1
화학공업	18.2	81.8
기계기구공업	72.2	27.8
계	20.7	79.8

출처: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한국과학재단(1989),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기계분야, p.11에서 재인용.

분단과 전쟁으로 가스 전기는 북에 64%, 인쇄제본업은 남에 89%, 식료품 공업과 목제품 공업은 남에 65%였다. 위와 같이 중화학공업이 북의 편재된 이유는 총독부의 ‘남농북공’ 정책, 수력발전소와 지하자원이 북에 풍부했기 때문이다. 남북분단 이후 기계 공업의 기형성이 심화되었다. 전쟁으로 평남, 함흥, 경인, 삼척 공업지역이 파괴되었다. UNKRA의 원조로 비료공장, 시멘트 공장 등이 건설되었다. 자동차, 버스, 철도 차량의 부품 생산이 활발하였다. 1955년 국산 자동차 ‘시발’이 처음 생산되었다. 전후 1953~57년까지 5년간 공업 부분 총원조액 8777만불 중 섬유15%, 화학 75.8%, 기계 7.6%, 기타 1.5%에 투자되었다. 소비재 품목과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였다. 1960년대 한국경제의 침체요인을 들면, 국토의 분단, 높은 인구증가와 실업률, 거대한 망위예산, 정치적 불안정과 인플레이, 자원과 전력 부족, 파행적 산업구조, 미국 일본우선 원조정책의 실패 등이었다.

호방위조약의 체결, ③‘70만 대군’의 육성, ④농지개혁, ⑤교육기적, ⑥양반제도의 근절 및 남녀평등의 구현, ⑦기독교의 확산’ 등은 그가 아니면 실현될 수 없었던 그 나름의 고유한 업적이었다. 그리고 이들 ‘7대 업적’은 그가 현대한국에 남긴 유산이었다. 유영옥(2012)은 ①정치분야: ‘건국’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 ②경제분야: ‘농지개혁’, ③외교·군사 분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만 대군’ 육성, ④교육분야: ‘교육기적’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유산을 바탕으로 1961년 이후 공전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앞서 발표한 정치, 군사, 외교, 경제에 이어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영역에서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업적을 일별하려는 것이다.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즉 이승만대통령을 교육대통령이라고 칭하고 교육기적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 실상은 어떠했는지? 원자력연구를 비롯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의 토대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끝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의 실상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각 분야의 주요한 업적과 사항을 통해 개괄해보려는 것이다. 유영익(2011: 24-26)은 이승만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분야를 의 업적을 요약하였는데, 이 글은 교육, 과학기술, 사회문화 분야의 업적에 대한 그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²⁾

2. 교육대통령으로 국민을 깨우다

이승만대통령은 본인이 당대 최고의 학력과 지성인으로 살았다. 어린 시절은 모친의 영향으로 불교에 대해 안내받았고, 청년기에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선교사들에 의해 배재학당, 독립협회 등에서 ‘근대세계’를 배웠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최고 명문대학을 거치면서 학석·박사를 마쳤다. 해방된 조국에서 국민들에게 나라는 약하고 가난했지만 대통령은 강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를 이대통령보다 애정을 담아 ‘이박사’라고 불렀다.

이승만은 대한제국의 왕과 지도자 및 신민들이 영-러 간에 펼쳐진 패권다툼(그레이트 게임)을 알아채지 못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무지를 깨우치는 교육, 계몽, 문명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는 한성감옥, YMCA, 하와이에서의 교육의 연장선에 있다. 1차 대전과 같은 국제격변기를 이용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전제군주정에서 탈피하거나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것을 보면서, 근대국민국가의 국민들이 국제관계와 국제정세 및 근대 과학기술에 밝아야 하며, 그 기초는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문명화에 있다고 보았다.

1945년 11월 미군정청은 조선교육심의회를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의학교육 등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였다. 각급학교는 1946년 9월 1일부터 개교하였다. 무엇보다 건국헌법³⁾은 국민에게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강조하였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교육을 국가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였

2) 이 발표문의 초고 작성에는 양중보, 이의연, 차지환 원생의 도움이 컸음에 감사드립니다.

3) 건국을 앞둔 1946년 2월 서울중앙방송을 통해 이승만 박사가 발표한 **“과도 정부 당면정책 33항”**은 임시정책의 대강으로 이후 건국헌법에도 반영되었다. 여기에는 교육 관련 다음 두 가지 항목을 강조한다. “17. 강제 교육령을 발하여 학령에 참여한 남녀 아이는 학교에 안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교육 경비는 정부의 담보로 할 것입니다. 18. 국민의 문화를 발전하되 정부에서 경비를 담임할 것입니다.”

기 때문에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차별금지와 평등원칙에 따라 국민개(皆)교육, 민주주의와 공교육으로서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국민국가는 문해력을 갖춘 국민을 필요로 한다. 정치도, 경제도 국민이 모두 문해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국민이 똑똑해야 정부의 정책에 참여와 감시를 할 수 있고, 직원이 도면을 읽을 수 있어야 건물도 짓고, 기계나 도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1948년 제헌의원 선거는 ‘남녀’ 및 ‘문맹 · 비문맹’ 모두 선거참여를 가능하게 한 이승만의 놀라운 업적이었다. 당시 5.10 선거의 투표율이 71.6%에 달할 정도로 참여율이 높았는데, 이 모든 것은 문맹자를 깊이 배려한 이승만 박사의 노력에 기인한다(김학성, 2021). 국민이 무식하면 국민국가는 설 수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당시 학교 담벼락에 붙은 구호였다. 알아야 면장(免牆)도 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교육의 기본제도와 내용이 마련되는 시기였다.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for all Korean children)이 시작되었고, 학기제나 학년제, 인문과 실업을 차별하지 않고 한 울타리 속에 두는 단선형 학제(6-3-3-4제 확립, 1951년 3월 10일)가 정착되었다. 1954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82.5%였고 1959년에는 96.4%였다. 이 시기는 미군정청의 교수요목과 제1차 교육과정령이 공포되었다. 교과 편제상 일제하의 수신, 일본어, 일본사, 일본지리 등은 폐지되었고, 대신 공민(일제하 수신 과목 오늘날 도덕과), 국어, 국사, 지리가 도입됨으로써 일제 잔재를 지우려는 노력이 있었다.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의 영향으로 새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공민이나 ‘사회생활’이 도입되었고, 듀이의 실용주의적 새 교육도 이식되었다.

또한 전쟁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⁴⁾을 강조하고 반공도의교육도 강화되었으며, 전후 재건을 위한 실업교육, 직업기술교육이 강조되었다. 1948년 11월 13일 문교부는 안호상 장관 명의의 일민(一民)주의를 강조하였고(못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중학교 이상에서 군사훈련을 정규과목으로 부과하고, 교내 좌익과 싸워 이기고 반공, 호국, 통일, 애국심 고취를 위한 학도호국단을 학교별로, 그리고 중앙에 창설 운영하였다(이혜영 외, 1998:236). 이로써 일제하의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훈육방식이 계속되기도 하였고, 민주 시민교육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학도호국단은 4.19를 계기로 해산되었다가,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으로 다시 부활하였다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학교에서 사라졌다.

교육성공의 다른 하나는 **교과서**의 보급이다. 일제하에서는 조선인을 교과서 업무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들 역량이 부족했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어학회의 국어 교과서와 진단학회의 국사 교과서 외에는 일제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이혜영 외, 1998:121). 1946년 1월에는 국어, 국사, 공민 교과서만 준비되어 있었다. 1948년 6월 30일 초등학생수는 234만명이었으나 국어 교과서 211만부, 공민 150만부, 이과 57만부, 노래책 4만부, 교사용 사회 14만부가 배부되었다(이혜영 외, 1998: 137). 1950년 12월 21일에 ‘교과용도서 검인정 규정’이 마련되었고, 전후 유네스코의 10만불과 운크라의 14만불의 지원을 받아 1954년 9월 16일 서울 대방동에 대한문교서적(주) 인쇄공장이 들어섰다. 일본에서 들여온 인쇄기 등으로 연간 3천만 부의 교과서를 찍을 수 있었다(김현태, 2020: 346).

4) 중공군 포로 중 2/3가 대만을 택한 것이나, 북한군 포로들 절대 대다수가 남쪽을 택한 것이나, 국민들은 공산당 치하에서 겪은 잔인함과, 몸서리칠 정도의 억압과 강제는 사람 살만한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정이라고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이다.

1955년부터 1958년까지 4년 계획으로 초중등학교 국정교과서 발행을 적극 추진하였다(이혜영 외, 1998:140). 학생 1인 1책의 교과서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배포하여 교육의 보편적 평등과 질 향상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여기서는 1) 성인 문맹퇴치, 2) 초등 의무무상교육, 3) 중등교육의 확장, 4) 여성교육의 급속한 확대, 5) 대학졸업생 확대와 전시에 대학생 우선보호, 6) 유학을 통한 최고 인재 육성⁵⁾ 등에서 다음 세 가지로 묶어서 살펴보고 한다.

1) 문맹률을 80%에서 20%로 낮춘 교육기적

일반 국민들을 일정 수준으로 문해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공산주의의 선전선동의 위협에 처한 나라를 자유민주공화정으로 만드는 데에는 국민 교육이 가장 선급과제였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였다. 그는 **인민이 무식하면 전제군주나 독재자의 신민(臣民)으로 전락하고, 유식한 국민이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국가가 보장할 국민 권리의 근본은 ‘자유’이고, 이는 전제왕정이나 식민지 아래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사상, 표현, 정치참여 등에서 자유가 근본적이면서 이를 소중히 누릴 것을 ‘교육’하였다. 자유는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일상의 의미가 아니라, 각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바를, (다른 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다른 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전제군주정이나 독재정과 달리 민주정체에 대해서도 계몽하였다. 민주정이 빠지기 쉬운 중우정으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 왕정, 귀족정, 입헌군주정 등의 장점을 취사선택한 공화정의 나라를 지향한 것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은 국민들이 스스로 글을 깨우칠 때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이 일정 수준으로 윤택할 가능한 정치체제였다.

국민들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왕정과 식민지에서 민주주의적 근대국가로,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자급자족적인 농업사회에서 상공업 위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사회적으로는 귀속적인 신분사회에서 업적위주의 계층사회로, 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유교문화에서 근대적인 서구적인 문화로 이전한 나라에 점차 적응해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유민주정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의해 추가적으로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가 다듬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다.

국민의 경제수준은 정치수준과 밀접하다. 국민은 경제적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적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가르쳐야 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는 삼각측량을 할 수 있었던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런던에 지하철이 운행될 때 고산자 김정호는 전국을 발로 밟으면서 대동여지도로 완성하였다. 서양과 달리 조선의 최고 지식인들은 유교 성리학 경전에 빠져 수학이나 자연과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구식 문명개화가 늦었고 급기야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제하에서도 문맹을 줄이기 위해 브나르도 운동이나 야학 등이 성행했으나 일제의 차별적 교육기회 제공과 신분제 농업사회의 가난한 농민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었다.

5) 특히 대학교수 연수, 군의 장교와 기술하사관 연수 훈련, 비료공장, 철강공장, 시멘트공장, 관유리 공장(3F), 광산, 발전소 운영, 원자력 연구 등을 위한 인재 육성이 시급했고, 이승만 정부는 이에 주력하였고, 성공적이었다. 당시 인력난은 해방 직후 일인 기술자들을 철저히 한국시킨데 있었다. 북한은 일인 기술자를 억류하여 기술전수를 받는데 반해, 좌우합작과 농업사회를 강조한 미군정 등은 일인 경영자와 기술자를 모조리 내쫓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방 직후 문맹을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은 80%대였다.

가난한 나라에서 자주독립의 나라를 세우려면 국민들의 교육이 가장 절실했고, 그 출발은 글자를 깨우치는 것이었다. “없어지는 눈 뜬 장님, 자라나는 민주 대한” “작대기식 투표 일소 및 완전 문맹 퇴치,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당시부터 내려온 구호였다. 이승만정부는 **문맹퇴치 5개년 계획(1954-58년)**을 통해 학교, 단기강습, 사회단체의 계몽활동 등을 통해 1959년 이르러 국민들의 문맹률은 20%대로 떨어뜨렸다. 초등 2학년 수준의 3R's(읽기 쓰기 셈하기) 등은 4.1%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다. 국민들이 글자를 읽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거나 투표를 작대기로 표시하여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무식한 상태에서는 후보자의 정책을 해독하지 못하여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없게 된다. 한글 전용정책은 배우기 쉬운 한글로 인해 문맹자⁶⁾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승만정부의 **한글전용정책**이 주효했고, 한글은 그만큼 배우기 쉬웠다. 국민들은 글을 읽음으로써 자기생활을 개선하고, 직업직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며, 정치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국민의 문식력이 높아진 것이다. 이를 두고 올리버는 이승만을 ‘교육대통령’으로 칭하였고, **교육대통령이 대한민국에 ‘교육기적’을 낳았다고** 하였다.

2)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의 완성

다음으로 모든 국민들을 일정 수준의 기초 기본 공통 생활 교양교육으로 하는 데에는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있었다. 흔히 저개발국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도 국민들은 신분질서 아래 숙명론에 빠져 공부해 해서 무엇하냐는 투로 쓸모(필요성)를 못 느끼기에 학습동기 유발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불을 지피려고 해도 ‘장작’이 뿔뿔이 흩어지는 형국으로 국민들에게 교육열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국민들에게는 승문의 전통이 있었고, 일제하, 미군정기, 대한민국 건국 이후 배운 사람들은 ‘출세’를 하였기에,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귀하고 남부러운 일이 되었다. 신분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상승이 가능했기에 학교에 가는 일은 중요하고 귀한 기회였다.

건국헌법은 국민의 의무교육을 규정하였다. 당시 학생을 수용하기에 교실은 부족했고, 일제하에 군국주의적 교육을 받은 교사들도 있었으나 자격을 갖춘 교사들은 부족해서 정부는 임시양성소를 통해 단기로 교사를 양성 배치했다. 일제의 주입식 교육을 미국식 새교육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으나, 그런 미국식 아동중심의 새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교사들로서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가지고 분필로 칠판에 적어주면서 교육하는 수준이었고, 학생들은 이를 정책에 받아 적고 외우는 수준으로 교육하였다.

건국헌법은 ‘적어도’ 초등교육이라고 하여 최소한 누구나 초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초등학교를 세워서 국민의 기초교육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계획(1954-59년)**에서는 목표연도에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6%로, 적령아동의 취학률을 99%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혜영 외, 1998:36). 이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완전 취학을 달성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교육과 모든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과서의 발행과 보급이었다. 초등교육위원회에서는 1946년부터 1951년까지 6년 동안 66억원을 투자하여

6) 문맹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한글을 읽고 쓰며, 숫자를 세고, 간단한 셈을 하는 정도, 즉 초등 2학년 수준을 말한다.

만6세에서 12세까지 ‘모든’ 학력아동을 취학시킨다는 계획을 가졌다. 부족한 시설과 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2부제 수업을 하고 교사는 매년 1만2800명씩 증원한다는 방침을 가졌다. 1946년에는 교육예산의 68%를 초등교육비로 배정하였다. 1948년에는 교육예산의 69.4%를 의무교육비로 책정하였다. 또한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은 6-4-2-4제를 기간 학제로 채택하였다. 다시 1951년 3월 20일에 현재와 같은 6-3-3-4제의 기간학제를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완성은 6.25의 초토화와 전통농업사회에서 낮은 교육의 필요성 등으로 1958년까지 미루어졌다.

해방 직후 소학교에 취학한 학생은 14%에 불과했고, 해방 후 증졸 이상 인력은 2만5천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당시 교실부족⁷⁾, 교사 부족, 교과서 부족, 학용품 부족, 교육재정 부족, 영양 부족에 풍족한 것은 교실에 넘쳐나는 학생과 그들의 교육열이었다.**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된 1960년 일인당 국민소득은 158달러 수준이었다. 초근목피로 끼니를 이어가는 농민이 부지기수였고 도시민 상당수가 품팔이, 지게꾼, 미장이 같은 하루살이 삶에 기대었다. 1960년대 당시 서울 시민 중 월급이 제대로 책정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했고, 도시민의 60% 이상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저소득층이었다. 학급 당 학생수가 70명이 넘는 초등학교에서 도시락을 제대로 챙겨오는 아이는 많아야 5명 이내였다는 관련 자료는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51-52). 영양실조가 심하여 심지어 조식을 하다가 쓰러지는 교사들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GNP가 50달러 선이었고 국가 예산의 50%, 수입의 70% 및 외환의 80%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음에도 제1공화국은 정부예산 중 문교예산을 10% 상회하도록 유지하여 교육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교육예산의 70%를 교사(校舍)신축과 교사양성에 투입하였다. 해방 전 교사의 35%는 일본인이어서 이들이 철수한 후 교사부족현상은 심각하였다. 정식 사범학교만 아니라 임시 단기의 강습소, 양성소 등을 통해 교사양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9년에는 문맹률이 20% 이하로 떨어졌으며, 96% 이상이 초등교육을 받았다. 일제하에는 어떤 형태로든 교육을 받은 사람이 14%에 불과하였다. 초등학교는 2800개에서 4600개로, 중학교는 10배, 고등학교는 3.1배로 증가했다. 사립학교 설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농지개혁이었다. 대지주들은 농지 판 돈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직접 사립학교를 설립하거나 토지를 회사하였고, 정부는 이를 허용하였다. 소작농과 영세농은 분배받은 자작농지로 자녀교육을 더 시킬 수 있었다(장상환, 2002). 물론 당시 정부는 가난했기에 대체로 유엔 특히 미국의 원조와 중대지주층이 농지증권을 매각한 돈으로 세운 사립학교 등의 힘을 빌려야 했고, 무상이라고 했지만 사친회비(기성회비, 육성회비 등) 명목으로 돈⁸⁾을 걷어야 했다.

당시 국민학교에 취학생이 증가하자 수업은 오전반과 오후반의 2부제나 심지어 3부제로 진행되었다. 예산이 부족해 월사금이나 기성회비(육성회비)를 내야 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점심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못되었고, 외국 원조로 나온 우유가루나 급식 빵을 먹을 수준이었다. 당시 통계를 보면 외국의 원조로 마련된 교과서도 보급하기도 구입하기도 어려웠다.

7) 1957년도까지의 복구 실적을 보면 전과 총수 1만891교실에 대하여 6,679교실(약61%)이 복구되고, 반소반파의 총수 1만2,063교실에 대하여는 6,457교실(53%)만이 복구되었을 뿐이다(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1999: 102). 임시 가건물이나 천막교실, 파손되어 비새는 교실은 당시 흔하였다.

8) 1955년 4월말 현재 사친회비의 학생 개인 부담액을 보면 서울의 경우 공립중·고등학교는 각각 월회비 600환, 국고나 지방비 보조가 없는 사립 중·고교는 각각 960환이었다(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1999: 103).

아동노동의 어두운 면도 있었으나 1959년에 이르러 96%가 넘는 초등입학률을 달성한 것은 거의 완전 취학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특히 농어산촌 가정에서 남녀차별이 여전해서 상대적으로 여아들의 취학률이 낮았다. 그럼에도 한 번 불붙은 교육열은 중등학교 진학이라는 열망을 낳았고, 차례로 대학교육으로까지 이어졌다.

3) 대학과 유학을 통한 고급 인재 양성

나라의 각 분야의 심화 특수 전문 직업 교육을 통해 고급 인재를 대학 이상의 수준에서 양성하는 것은 자유민주공화국과 상공업입국에서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 이승만은 정치외교학 혹은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문과 출신 수재였다. 그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버드대학도 필요했지만 MIT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근대국민국가에서 국민의 과학기술의 수준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국가 경영에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인재들이 가장 절실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자신을 닮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대학을 세웠고, 외국으로 (대통령 장학금의 국비) 유학을 내보냈다.

6.25의 폐허 위에서도 ‘유학’을 통해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의 각 분야를 이끌 지도자를 양성, 확보하였다. 1951년 2월 16일 ‘전시하 교육특별조치 요강’은 전쟁 중임에도 피난 학교 설치, 전시독본과 같은 임시교재와 교과서 발행, 전시연합대학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였다. “‘이곳은 우리의 싸움터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배운다.’ 피난통에 밥은 못 먹어도 아이들 손에 책이 쥐어져 있었다.”(김현태, 2020:337).

이상섭(1931~)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서울대학교 약대에 입학해 1956년 석사(생화학) 학위를 받았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부산으로 옮긴 서울대학교 임시 교사(校舍)는 판잣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교수,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학생의 열정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 이상섭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의자는 각목을 가운데 끝에서 6개 정도 세우고, 긴 나무판자를 두 장 정도 얹어서 쪽 앉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책상은 없었고요. 필기를 하려면 노트를 들고 받쳐서 써야 했어요.”(과학의 거인 편집팀, 한국 천연물 바이오텍의 선구자 이상섭 박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9.11;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또한 1950년 2월 28일에는 대학생들에게 징집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⁹⁾ ‘**대학생 징집연기잠정령**’을 발표하자 청년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숫자가 폭증하였다. 이는 6·25전쟁기에도 유효하여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당시 부산 대구 전주 광주의 4개 연합대학에 등록한 학생수는 4,358명이었고, 단독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는 약 7천명이었다. 전국 대학생이 정원의 175%에 이르자 고려대 총장 유진오는 “대학 간판만 붙여놓으면 삼시간에 학생 수천이 몰려든다.”고 탄식했다.”(문갑식, “자해(自害) 병역 기피” 조선일보, 2008.3.22.). 고급인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 잠정령은 1956년 11월 7일 폐기되었다. 전후 내 나라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고급인재를 아끼기 위해 징집을 피하게 한 것이다. 미국 등지에서는 장군의 아들을 포함해 젊은이들이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땀을 흘렸던 것에 대비된다. 1960년도 사립대학의 정원은 53,921명인데 재학생수는 77,726명으로 정원보다 44.7%나 많았다. 여대생은 집권 초기보다 17배나 늘었으며,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즈음

9) 조선시대 “향교에 다니면 군역이 면제되자 인조 때 전국 향교 재학생이 4만을 넘었다고 한다. 가짜 학생을 가리려고 시험을 보여 낙방생을 군에 보내는 낙강충군법(落講充軍法)이 시행될 정도였다. 6·25 전란 중 대학 재학생에게 징집을 유예해 준 것도 비슷한 발상이었다.

에 국내 대학생은 10만명 정도로 그 비율은 인구 5천만인 영국보다 많았다고 한다(김현태, 2020:332).¹⁰⁾ 당시 이공계 교육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기 어려워 외국의 책자를 번역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쳤고, 심지어 미국 등지에는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학과를 서울대학과 인하대학에는 학부에 설치하였다(김용삼, 2019: 328-329). 국가 전체 산업 기반이 취약한 초기 단계에서는 학교교육과 현장실무 사이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었다. 현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산현장에 취직한 인력은 교재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은 부족했다. 이 시기에 생산현장의 교재는 외국에서 도입한 매뉴얼밖에 없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168-169).

일제하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고, 고급인력을 길러낼 교수요원들도 적었다. 1946년 5월 20일에 문교부는 다수의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켰다. 1946년에 대학은 30개교를 넘어서었다(김자중, 2022:312). 1948년 8월 15일 무렵 종합대학이 4개교, 단과대학이 23개교(국립 3, 공립 4, 사립 18), 초급대학이 4개교, 각종학교가 11개교였다. 당시 대학교원수는 1265명, 재학생수는 24,000명에 이르렀다(김현태, 2020:328). 1960년에 대학은 63개교로 늘었고 학생수는 10만여 명에 이르렀다. 6.25 공산 침략을 당한 이후 정부의 제1목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 정치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일이었다. 해방 후 이전의 전문학교는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교수요원을 교육하기 위하여 서울대 교수연수를 위한 미네소타프로젝트, 고려대 연세대와 워싱턴대학간의 협정, 미국교육사절단의 방한과 피바디대학의 도움으로 교원의 양성과 훈련 등 미국의 원조와 영향은 지대하였다(김자중, 2022:313).

인천에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과 기독교원을 정리한 자금을 합하여 한국의 MIT를 지향한 인하공대를 설립한 것은 그가 얼마나 공업화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애썼는가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을 설립하는데 정성을 들인 것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 그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1960년까지 4800명이 미국 등지로 유학을 했고, 기술연수를 받은 사람은 2300명, 군사학교 연수를 받은 장교 등은 9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길러낸 인재들이 외국에 단기 기술연수를 거치고 철강공장, 비료공장, 발전소에서 일했다. 가령 미국이 파키스탄에 지어준 10만KW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데 1500명이 필요했으나, 유사한 규모의 당인리발전소는 180명이 가동할 정도로 유능했다(오정환, 2022: 462).

3. 과학기술로써 ‘상공’사회를 시작하다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우주에 내보낼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한 ‘상등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다. 미국 등의 원조로 연명하던 상황에서도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원자력, 제철, 기계, 병기 등을 배우라고 대통령의 관비 유학생을 보낼 정도로 과학기술, 공업입국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인하공대와 한국외국어대 설립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외국어와 외교를 아는 국제

10) 1960년 63개 대학에 97,919명이 재학, 농지개혁으로 자작농이 된 농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이 있었다. 문교예산이 15.2% 학교 학급 증설해 대중교육을 확대하였다(한국출판학회, 2012: 63).

적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로써 과학기술은 산업을, 산업은 경제발전을 이끌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경제발전, 산업발전, 기술발전은 서로 다른 깊이의 층위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간다. 경제발전은 표층의 성장 결과를, 산업발전은 중층에서 이 표층의 경제발전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술발전은 더 깊은 심층에서 다시 이 산업발전이 어떤 기술의 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 세 층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표층의 경제사나 중층의 산업사와 달리 심층의 기술발전사는 느리지만 강한 추세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기술경쟁력의 추세는 경제와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한국공학한림원b, 2019: 25-26).

교육을 통한 근대적 과학기술자 양성은 ‘사농공상’의 사회를 ‘상공농사’의 근현대사회로 변화시켰고, 대륙문명에서 벗어나 해양문명권으로 이동하여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토대를 갖추었다. 과학기술은 실험, 실습, 실기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에 적지 않은 투자가 필요했다. 즉 해방 후 초중등학교나 대학교육의 교육은 주로 교수와 학생, 칠판과 외국도서를 번역한 교과서가 교육의 전부였다고 한다. 공대교육도 외국의 공장의 제조 매뉴얼을 번역하여 가르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¹¹⁾

전쟁으로 초도화된 그라운드 제로¹²⁾의 한국의 산업기술 발전단계는 도입기술, 체화기술, 자체기술, 선도기술의 4단계로 발전해왔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35-38). 생산역량 확보가 최우선이었던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는 노동집약적인 농업과 경공업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과감하게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일으키고자 기획했고,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282-283). 현실타개를 위해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했고, 그것은 관련 산업의 중흥을 위한 법률, 제도, 행정 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였기에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었다.

산업발전을 시작할 당시 한국은 생산성이 낮고 영세한 농업 위주의 낙후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960년 당시 총인구 2,500만 명 가운데 약 1,400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절반 이상의 농민이 비료대금은커녕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농사기술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제조업에서는 신발 한 켤레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57).

건국 후 인재난은 극심했고, 더구나 전쟁으로 죽거나 납북되어 전후복구가 지연되었다. 1959년에 가서야 전전 수준을 회복했다. 1930년에 경공업(식료품, 방직, 제재, 목제품, 인쇄, 제분)과 중화학공업(금속, 기계기구, 화학, 요업, 가스 전기 등)공장 수는 4,261개였고 직공 수는 83,900명이었다. 1925~45년까지 공업회사가 234개 설립되었다. 1942년 현재

11) 가령 인촌 김성수 선생이 고려대학 전신인 보성전문을 키울 때 공적 영역으로 법과를, 사적 영역으로 상과를 먼저 설립했고, 사회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과대학과 농업발전을 위해 농과대학을 먼저 설립했고, 기초이론인 이과대학이 앞섰고, 공대나 의과대학 등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오늘날에도 고교나 대학들은 대규모 투자가 드는 이공계나 보건의료계를 발전시키기는 국가적 노력이나 기업이나 독지가의 특별한 노력(울린공대, 포스텍)이 들지 않으면 설립 유지하기가 어렵다.

12) 전쟁으로 내수시장이 붕괴된 산업기술 개발 초기, 생산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시장과, 이 제품을 구매할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겪으며 생산설비뿐만 아니라 수요 기반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1958년에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시기 낮은 구매력은 매우 심각한 조건이었다. 실제로 1958년 상반기 전국 2,757개의 공장에 대한 조사 결과 가동률이 35.4%에 그쳤으며, 휴업률이 33.7%에 이르는 등 공장이 있어도 물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201-202).

주요산업 자본의 조선인 지배율은 6%에 불과했다.

<표 1> 업종별 조선인 기술자의 비중 (1944년 말 현재, 단위: 명)

업종별	구분	기술자 총수(A)	조선인 기술자수(B)	B/A(%)	조선인 기술자 점유 순위
금속		1,214	133	11.0	5
기계 기구		609	150	24.6	3
화학		2,004	222	11.1	6
식료품		336	121	36.0	1
방직		484	132	27.3	2
요업		245	48	19.3	4

출처: 한국과학재단(1989),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기계분야. p.11.

<표 2> 1945년 해방 전 한국인 기계기술자 배출 현황

	1941	1942	1943	1944	1945	소계	합계
경성공업전문학교	9	3	3	1	4	20	49명
경성광산전문학교	5	10	4	1	-	20	
경성제대 공학부	-	-	4	1	4	9	

출처: 한국과학재단(1989),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기계분야. p.10.

최소한의 경제활동도 유지할 수 없던 시절 외국의 경제 원조는 생명줄이었다. 195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원조액은 3억8천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 7%를 넘는 수준이었다. 1950년대 동안 한국 경제가 받은 원조액은 총 29억 7,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 시기 동안 연간수출액 최고치가 약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조가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55).

광복 이후 한국 최초의 무역선에는 울릉도와 강원도 지역을 포함한 동해 앞바다의 오징어와 해조류가 가득 실려 홍콩과 마카오를 향했고, 강원도에서 채굴한 텅스텐은 미국으로 팔려나갔다. 현대적 생산 기반이 없어 수출품은 광물과 수산물이 고작이었다. 1964년 1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을 당시 주요 수출품 중 하나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생사(한국공학한림원, 2019b: 61-62)였고, 채굴한 텅스텐, 가발이거나 옷가지 보세산업이었다.

산업발전의 초기 단계에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 정책의 특징은 바로 선택과 집중형 산업육성이라 할 수 있다. 안동혁(1906~2004)교수는 해방 후 공학교육 및 산업체 기술지원 등에 공헌했으며 상공부 장관으로 공업건설계획안을 수립하였고, 1953년 정부에서는 전쟁 이후 폐쇄해진 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산업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연료, 농업 생산에 활용되는 비료, 그리고 산업 건설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중심으로 소위 ‘3F(Fund, Fuel, Fertilizer) 산업정책’을 제시하여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은 본격적인 산업기술 개발의 시작에 앞서 에너지, 연료, 비료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 1955년 충주비료공장을 착공하면서 비료산업이 시작됐으며, 석유의 경우 미국의 원조자금을 사용해 수입·공급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통제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연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254). 한국은 산업기술 개발을 시작할 당시 몇 개의 특정 핵심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가 재건을 위해 부서별로 가장 시급한 복구 및 증산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비료, 시멘트, 판유리’가 3대 육성 산업으로 선정되

었다. 유엔한국재건단에 지원에 의한 인천판유리공장(1956), 문경시멘트공장(1957), 충주 비료공장(1961)은 국가 3대 기간산업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시기에 이룬 과학기술적 성과를 개괄해보기로 한다.

1) 에너지 확보 기술: 연탄화덕 개발과 미래에너지 원자력 연구

(1) 땔나무를 대신한 ‘연탄 화덕’

1952년 무렵, 전쟁으로 산림이 소실되고 남은 나무들마저 땔감으로 남용되어 전 국토가 황폐해지고 있었다. 전후에 난방용 석탄이 원활히 공급되기 전이어서 도벌, 난벌, 과벌 등이 성행하였다. 정부수립 초창기 조림의 기본방향은 식수조림 권장으로 5植1伐주의에 두고 민유림조림 10개년 계획(1949~1958)을 수립하였고, 외국원조시대(1954~56년)에는 농용림조림, 지력개량림, 용재림조성, 특수림조성에 노력했다. 이 계획으로 총 3,906천 ha의 인공식재조림으로 3,147천 ha에 묘목을 심었다. 첫 임학박사 현신규(1911~1986) 교수는 삼림학자로서 리기다테 소나무, 포플러나무, 현사시나무 등 우리 토질에 잘 자라는 수종을 개발해 산림녹화에 기여하였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탄광과 영암선 철도공사에 **김일환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들을 투입했다. 유재성 공군 항만창장에게 무연탄을 활용한 에너지원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구팀은 개량형 ‘연탄화덕’을 완성하였다. 연탄 화덕과 개량형 구멍탄인 19공탄, 22공탄의 발명은 무연탄의 연소성을 크게 개선했다. 연탄 화덕이 보급되자 정부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를 중심으로 석탄 생산을 확대했다. **정인옥(강원산업, 삼표연탄 창업)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강행**하고, 1962년 정부는 세계 최초로 통일된 연탄 규격을 만들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석탄생산량은 1955년 130만t에서 1960년 535만t으로 수출도 할 수 있었다.** 연탄은 1960년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민의 취사와 난방에 활용되었다. 연탄 난방 시스템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된 국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졌으며 이후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에너지원 역할을 했고, 땔나무의 대체연료로 사용되어 국토의 황폐화를 막는 데에도 공헌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53-55). 1956년에는 100만분의 1 대한지질도가 간행되었다. 지하자원탐사, 금속광업, 비금광업, 석탄광업, 광업교육사, 도시의 난방과 화력발전을 위한 석탄의 필요성으로 탄전 지질 조사보고(1958~67)가 있었다. 증석은 주요 수출품이었고 실업고에는 광산학과가 설치되었다. 석탄 등을 도시와 항구로 실어 나르기 위한 영암선(1955), 영월선(1955), 함백선(1957) 등이 개통되었다(철도청, 1979).

(2) 미래에너지를 준비한 ‘원자력연구’

1948년 5월 14일 북한은 남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서울 당인리와 강원도 영월의 화력발전소 정도가 고작이었던 대한민국은 산소 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환자처럼 미국에서 급파한 두 척의 발전선박에 산업과 생활의 동력인 전기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전쟁 전 7.5KW가 전후에는 1만KW가 되었고, **다행히 화천수력발전소를 탈환해왔고, 괴산수력발전소를 짓고, 미국 지원으로 당인리, 마산, 삼척 화력발전소를 지어 1958년에는 발전량이 37만KW가 되었다(오정환, 2022: 458).** 그러나 공장 증설과 더불어 전력난이 심각했다.

1953년 12월의 UN 총회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을 주창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 과학기술을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 전수하기 시작했다. 전후 국가 재건을 위한 동력으로서 원자력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55년에는 한미 간에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국회 비준을 거친 뒤 한미 간 원자력에 관한 기술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6년 2월에 미국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체결했고, 같은 해 7월에 미국 디트로이트 전력회사의 사장이었던 월터 시슬러(Walter L. Cisler)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라늄이 들어 있는 25cm³ 크기의 작은 상자를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석탄의 220만 배가 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전후 에너지와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c: 266-267). 이승만 대통령은 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선 우라늄이 100년을 준비하는 에너지라고 천명하고, 원자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10년간 238명 교육훈련을 시켜서 20년 후에 고리원자력발전을 돌릴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 연구는 이승만이 82세 때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된 직후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정부는 원자력 이용 개발을 위한 국가적 정책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했다. 1956년 3월 정부는 대통령령 제 1140호에 의거 당시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설치했고 원자력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했다. 원자력과의 노력에 힘입어 1958년 3월 「원자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비록 개별 기술에 관한 것이지만 국가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제정한 법령으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시행과 관련한 과학기술 법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을 설치하여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의 양성, 원자력 생산 기관의 운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의 연구·개발·이용과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958년에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행정기관인 원자력원을 발족했다. 1959년 2월3일에는 마침내 국내 최초 과학기술연구소인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되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73-75).

원자력원이 1959년 1월에 설립되면서 원자력 행정 조직이 구성되었다. 원자력원 산하에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연구소’ 등의 2개 기관이 설치되었고, 원자력 연구소가 1959년 2월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을 전담하게 되었다. 1959년 11월 원자력 위원회에서 「원자력 사업 5개년 계획」이 심의·의결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이용·개발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c: 266-267). 이승만 대통령은 20명의 인재를 뽑아 직접 유학비를 손에 쥐어주면서 나라를 밝혀줄 것을 당부했다. 미국은 한국이 원자탄을 개발할 것을 우려해서 이들 유학생들(이동녕, 이관, 김호철, 현경호, 김호길 등)은 받지 않아 이들은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김용삼, 2019: 330-332). 윤세원 좌장으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공부를 하였다. 이창건 원장(1930~)은 원자력 국산화에서부터 한국형 원전 개발에 기여한 한국 원자력 1세대 연구자다. 1950년대 후반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현재 한국형 원전 개발에 이르기까지 한국 원자력 발전 역사에 크게 기여했다.[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한 명의 1급 원자력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드는 교육훈련비는 그 사람의 몸무게에 버금가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자끼리 서로를 금 선생, 은 선생, 동 선생이라고 불렀다. 이 금속 선생들이 기술 습득에 정진한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귀금속은 아

니고 평범한 나무다. 내 몸을 태워 겨울철에도 금속 선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온기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타오를 때 발산하는 빛으로 금속 선생들이 밤에도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불사르며 일했다.” 이창건, 「걸어온 길과 나아갈 방향」, 원자력산업, 2016.01, 47쪽(네이버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원자력 연구관 해외파견 시험에 합격한 이창건은 미국으로 떠나 아르곤원자력연구소가 운영하는 국제원자력학교에 입학했다. 1958년 국비로 100명을 미국 아르곤연구소에 기술연수 유학(10개월에 1인당 6천불 소요)을 보냈다(오정환, 2022: 459). 교육과정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이창건은 한국과 원자로 도입을 체결한 제너럴 아토믹(General Atomic)사에서 트리가 마크(TRIGA Mark)-II 운전훈련을 받으라는 긴급훈령을 받았다. 그는 GA사에서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후, 미국원자력위원회 최종 시험에 합격해 한국 최초로 트리가 원자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귀국했다[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1961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연구용 원자로인 트리가마크-II 가동을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 개발 활동에 착수하였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계획에 발맞추어 35만 달러를 무상 원조했고, 우리나라도 1958년 예산에 38만2,000달러를 책정하여 원자로 및 부속 기자재를 도입하는 자금을 마련하였다. 1958년부터 4년간 240명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지로 원자력 유학을 보냈다. 1962년에 가서 연구용 원자로에 불을 붙였다. 두뇌가 만들어 내는 전기에너지라는 것을 알아챈 지도자의 통찰은 에너지산업의 quantum leap을 만들었다. 그 바탕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발전소 수출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2) 식량자원 증대 기술 : 화학비료공장, 종자 개량과 제분산업, 국민건강 개선

(1) 토지의 농업생산성 향상의 기초로서 충주 비료공장 건설

비료생산은 토지의 농업생산력 증대에 직결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였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87-89). 1955년 한국 최초의 요소비료 공장인 충주비료 공장이 착공에 들어갔다. 1955년 착공한 충주비료공장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턴키베이스로 설계부터 건설까지 외국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당초 1958년 준공 목표였으나 건설을 담당했던 외국 기업과의 의견 차이로 5번이나 계약이 수정되었고, 건설비용은 당초보다 70% 늘어났다. 공사기간도 21개월이나 연장되어 1961년에야 준공되었다. 이 일을 겪은 당시 현장기술자는 기술이 없으면 클레임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학습은 이루어졌는데, 공장운영과 관련된 기술자문을 위해 미국 엘라이트 케미칼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장기술자의 기술역량을 크게 높인 것이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186-187).

충주비료공장은 최초의 요소비료 공장으로서 한국 비료 산업의 초석을 놓았으며, 국내 최초로 고온고압 공정을 갖춘 화학공장이었다. 이후 1958년 제2비료인 호남비료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비료 국산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공장의 건설 과정은 전적으로 외국 회사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때 익힌 선진기술은 이후 한국 화학공업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한국 산업발전 초기에는 비료공장이 바로 그 기술 파급 효과의 원천이었다. 1961년 건립된 충주비료공장은 국내 최초의 화학비료공장인 동시에, 사실상 근대적 의미의 대규모 산업시설 면에서 볼 때 제대로 모양을 갖춘 첫 공장이었다. 이곳에서 건설과 생산, 운영상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기술자가 이후 다수의 다른 화학공장 건설과 운전 및 가동에 핵심인력으로 활약하였다.¹³⁾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기술적으로 가까운 화학산업은 물론이고 제분,

주조 등의 경공업은 넘어 제철, 건설 등의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충주비료공장 출신 기술자가 진출하여 지식 과급을 일으켰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178).

또한 수출시장에 나서면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접하지 못하던 국제 수준의 산업기술 기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비료공장 건립 1년 뒤인 1962년 정부는 최초로 비료 공정 규격을 제시했는데, 이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생산하던 약 28종의 비료에 대해 해당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술 규격을 제시하였다.

합성고무용 고분자 소재 부문은 한국이 산업기술 개발을 시작하던 1960년대 초반 당시 미국, 유럽의 전통적인 화학기업과 일본의 몇몇 기업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자는 이들로부터 기술과 운영매뉴얼을 배워야만 했다. 1962년 설립된 한 국내 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관리자를 초빙해 직접 제사 및 직물 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169). 산업기술 발전 초기,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술을 가져오는 사람이자,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의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지는 관리자였다. 이러한 전천후 기업가의 모습은 다양한 산업의 시작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제지산업이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던 1960년대 청년 기업가가 종이공장을 설립했지만, 종이를 말리는 공정의 핵심인 드라이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라이어를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위해 드라이어의 설계, 철판 가공, 주물작업 등 기계 제작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드라이어를 만들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기업가 몫이었다. 수많은 노력을 거듭한 끝에 국산 드라이어를 정상 가동하는데 성공했다. 인쇄종이가 부족하여 닥종이를 가공한 누런 색깔의 '선화지(仙花紙)' 한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기업가의 이러한 전천후 활약으로 탄생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230-231; 한국출판학회, 2012: 100).

(2) 종자개량과 제분산업(밀가루·설탕 생산)

1956년에 전국에 12개의 농과대학이 설치되었다. 1957년 7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58년부터 실업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확충에 힘썼다. 1960년 농업고등학교 학생 수가 2만7천명에 달하였다(1980년 최대 10만명이었음). 졸업생들 일부는 식량·특용·원에 작물과 축산과 잠사에 종사하였고, 수출품에서 잠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번데기는 서민의 간식이 되었다. 우장춘 박사(1898-1959)는 수량이 적고 크기와 모양이 균일하지 못한 재래종 배추와 중국 배추의 장점을 개량해 '원예1호'를 개발하였고, 무, 고추, 양배추,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가지, 양파, 파 등 채소, 과일, 원예 등에서 유전육종연구의 선구적 활동을 하였다. 이후 허문회(1927~2010)교수는 1966년 통일벼를 개발하여 쌀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작물육종기술 발전과 품종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조백현(1900~1994)교수는 해방 후 각종 농학 교재를 펴내 선진 농업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통 식품의 현대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근대적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한국인 최초 농학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일제하 주로 일본인에 의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식품산업은 195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13) 일제하 인촌(김성수)과 수당(김연수) 형제로부터 1만엔을 지원받은 이태규 KAIST 명예교수(1902~1992)는 세계적인 이론화학자로서 '리-아이링 이론' 등의 연구결과를 내며 세계 화학계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했으며, 국내 최초로 노벨화학상 후보 추천자로 위상을 높이고 화학 분야에 양자역학을 최초로 도입하여 국내 화학 발전에 기여했다(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두 형제로부터 1만엔을 지원받은 리승기는 북으로 넘어가 석탄에서 비날론을 뽑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본계도에 올랐다. 삼분(三粉)에 해당하는 설탕과 제분 사업을 시작으로 청과 음료, 빙과류, 조미료, 맥주 등이 출시되면서 국내 식품산업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공공 부분에서도 중앙농업기술원의 농산물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가 늘어나며 시험조사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중앙공업연구소에 식품공업과가 설치되어 식품가공기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국립화학연구소는 보건사회 및 복지와 관련된 시험 연구기관으로서 식품 영양분야의 연구를 수행했다(한국식품과학회, 1998: 273).

밀가루는 국민의 배고픔을 달래는 제2의 쌀이었다.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만드는 톨분쇄기 제분 공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일제하에 일본인들이 전남포에 세운 만주제분(1918년)이 시초였다. 해방 이후 밀가루를 생산하는 제분업은 4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에 모두 파괴되었다. 휴전 직후인 1952년 12월1일, 대한제분 복구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제분산업이 발전한다. 1957년 대한제분은 인천항의 인접한 곳에 당시 ‘동양 제일’이라는 가치를 내걸 만큼 과감한 투자로 신관 제분공장을 신축하였다. 본격적인 제분 생산에 들어간 대한제분은 60~70년대 제면, 제빵 산업의 급성장을 견인했다. 국내 제분기술은 지난 60여 년 동안 꾸준한 연구와 기술 개발 및 투자의 결과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들도 인정하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57-59).

한국전쟁 직후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특히 원당을 수입해 만드는 설탕은 턱없이 부족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설탕 생산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수입품이나 주한 외국인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군수품에 의존하였다. 1953년 10월, 국내 최초로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부산 전포동에 (CJ)제일제당 설탕공장을 세웠다. 이후 삼양사(1955년), 대한제당(1956년) 등이 차례로 설탕 제조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동양제당, 금성제당, 한국정당, 해태제과 등도 진출하면서 국내 수요는 모두 국산품으로 대체되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61-63).

(3) 국민건강과 의료보건위생의 개선

사회적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947년에 태어난 신생아 중 첫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은 아기가 1천 명당 83.4명으로, 출생아 12명 중 한 명이 1세 이전에 사망하였다. 전쟁 중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죽거나 다쳤고, 전염병은 일상적이었다. 장티푸스와 발진티푸스 환자가 급증했고, 4만 명 이상 발병한 두창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b: 72-73). 수명이 늘어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덕분이기도 하지만 영아·아동의 사망이 준 것도 크게 기여했다. 1965년에는 아기 100명이 태어나면 평균 여섯 명은 돌도 안 돼 숨졌다. 열악한 영양상태로 폐결핵 환자가 많았다. 당시 사망 원인 1위는 폐렴·기관지염·결핵 같은 폐병이었다. 특히 결핵은 공기로 전염될 수 있어 격리·치료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치료제 개발 덕분에 한 해 3만 명에 이르던 결핵 사망자 수는 이제 1/10수준으로 줄었다(중앙일보, 2005: 260). 1960년대에는 환갑이 장수의 상징이었다. 1960년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간이 생명표에 따르면 평균 수명은 52.6세였다. 이때는 환갑을 맞은 이가 있으며 친지와 이웃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다. 장수 인구도 늘었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60년 6만 명 남짓이었지만, 2005년 67만 7,883명에 이르렀다. 한구동(1908~2010)교수는 전후 복구기간 중 대학을 이끌며 한국 약학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식품위생, 환경위생 분야 20여 편의 논문 발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최고 엘리트 과정을 밟은 식민지 지식인이자 한국 최초 병리학자 윤일선(1896-1987)의 정체성은 내내 존재했다. 경성제국대학을 떠나 세브란스의전에 자리 잡으면서 윤일선은

생애 처음 한국어를 사용해 의학을 탐구했다. 소학교부터 경성제국대학까지 줄곧 일본어와 독일어를 사용했던 윤일선은 제국주의 자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세브란스의전으로 옮기면서 한국인 의학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세웠다(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백과).

3) 건설·토목·수송·전자통신 산업의 과학기술: 판유리·시멘트·제철공장과 라디오 개발

(1) 판유리, 시멘트, 제철 공장 건설

토목과 건설의 바탕인 시멘트산업은 1919년 평양 근교의 승호리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무렵에는 6개 공장의 총 생산능력은 연간 170만 톤 규모였다. 전쟁 직후 남한에는 연8만 톤 규모의 삼척시멘트 공장 하나만 남았다. 1956년 동양그룹의 창업자인 이양구 회장이 삼척시멘트를 인수하였다. 1957년 동양시멘트공업(주)로 상호를 바꾸면서 연간 8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 제조 회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또한 1957년 UNKRA의 지원을 받아 이승만정부에서는 문경시멘트공장을 건설하였다. 이후 영월공장이 준공되었다(한국공학한림원, 2019a: 69-71).

건설과 토목은 평화 시나 전쟁 시에 공히 필요한 산업이다. 전쟁으로 철도 40% 파괴, 영구교량은 542개, 목교는 777개가 파괴되었다. 1952~62년까지 512개의 교량을 복구했고 307개의 교량을 개수복구하였다. 건축자재 부족, 주택 부족, 판자집촌 형성, 토막집 등이 많았다. 미국의 ICA 원조, UNKRA 원조, AID자금을 이용해서 공장, 영화극장, 종교기관, 사옥과 빌딩, 의료기관, 주택건물 등을 신개축하였다. 철도본국청사 일부, 이화여대 과학관, 한국은행·반도호텔·중앙우편국·상공회의소·상공장려관 등을 복구했고, 1958년부터 기와 창호·PSC 생산공장을 운영하여 주택단지(후생·부흥·국민·희망·외인 주택)를 건설했다. 1959년 농촌 주택 개량에 착수했으나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주택건설 실적은 6,555호였다.

1955년 8월 서울에서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씨는 4기통 1323cc 엔진과 전진3단·후진1단 변속기를 장착한 지프형 승용차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차의 이름은 ‘첫 출발’을 의미하는 ‘시발(始發)’로 지었다. 엔진과 변속기는 미군이 사용하던 지프형차의 부품을 활용했고, 차체는 드럼통을 펴서 제작했다. 시발자동차는 55년 10월 광복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되면서 주문이 폭발했다.

산업의 쌀인 제철은 6.25로 생긴 많은 고철은 한국 제강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했다. 제철회사의 건설은 1957~62년 사이 ICA(미국 국제 원조처) 자금 249만불을 사용하여 대한중공업공사와 삼화제철공사의 5개년 확장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계분야에서 화천기공은 1959년 국내 최초 수동식 선반을 세계 4번째로 개발했는데 이는 수치제어 선반 ‘WNCL-300’으로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제조업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데 기여했다.

(2) 전자산업의 태동을 알린 금성사의 국내 1호 라디오 ‘A-501’

국산 라디오 생산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1957년 금성사를 창립한 구인회 회장이었다. 그는 낮은 기술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서독에서 초급공대를 나온 행케를 기술 책임으로 채용하고 1958년 12월 공채 공고를 통해 기술 사원을 채용했다. 1959년 11월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제품이자 진공관식 라디오 국산 1호인 ‘A-501’이 미도파백화점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 제품은 부품의 60% 이상이 국산화된 최초의 국산 라디오였다. 금성라디오 제작은 전자회로 설계와 제품 생산 기술 축적 등 전자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이루었다(한국공

학한림원, 2019a: 81-83).



[사진] 금성사의 초기 라디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근현대 사회문화생활로 전환하다¹⁴⁾

문화는 국민의 의식과 생활 및 국가의 각종 제도 성립과 유지 발전의 맥락을 형성한다.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 이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적 근대국가, 시장경제, 업적위주의 계급사회, 그리고 근대적 서구 문화로 가속적인 변화를 겪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를 근대화나 발전이라 부르며, 일부에서는 독특한 아시아적 가치 논쟁과 연구에 주목한다.

조선은 약500년 동안 유교를 지배적인 이념으로 채택했다. 유교는 조선 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사회, 정치, 도덕, 학문 등에 영향력을 발휘하며 일상생활에서 규범을 형성했다. 유교적 가치와 규범은 정치제도, 교육제도, 가족제도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 다양한 외환과 정치적 쇠퇴, 신분 질서 붕괴로 이러한 질서가 위기를 맞았고, 천주교 등 서양 문명의 도입이 이어졌다. 이후 일본의 합병으로 조선은 식민지 시대를 맞이했지만, 유교적 가족제도와 조상숭배 사상은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 유교의 지배적 가치체계는 조선조가 멸망할 때까지 중심성을 유지한 편이다.

1945년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내부적 혼란에 이은 3년간의 전쟁으로 한국사회는 상전벽해를 겪었다.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한국전쟁 이전의 한국사회는 가부장제, 신분위계제, 충효사상 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남성위주의 사회였으며, 신분제도가 비교적 엄격했다. 또한, 유교는 가족을 매우 중요시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했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해야 했다. 유교는 또한 조상숭배를 강조하여 조선 사람들은 매년 명절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난을 떠났고,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졌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미국의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 도입되었다. 김경동은 전쟁으로 인한 가치관 변화를 ‘허무주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현재지향적 의식의 강화,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축적과 과소비’ 등으로 요약한다. 또한 전쟁은 사회의식의 차원에서 ‘불법과 규칙위반의 편법주의 만연, 평준화 의식의 강화, 권위주의적 의식, 남아선호 사상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그리고 확대된 지역적의식’ 등이

14) 근현대사회는 전근대사회와 구분되는 근대성(개인, 자유, 평등, 인권, 과학기술 실증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낙관주의, 기독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대륙 문명권에서 세계 만국공법질서의 해양문명권으로, 사농공상에서 상공산업사회로, 반공(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남녀평등사회, 언론(신문 방송), 문학과 서적출판의 성장, 반공과 자유민주적 사상과 의식의 변화, 일상생활과 의식의 서구식 변화 등은 다루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 한국 사회에 미친 깊이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는데, 이 경제성장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와 제도를 더욱 변화시켰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감소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가 혼재된 사회이다.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를 채택하고 경제제도는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근대적인 제도로 개편하였으나, 가족제도는 유교적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는 편이다.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유교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편이다. 그러나 신세대를 비롯하여 한국인들은 또한 현대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재와 혼란은 한국사회의 특징이다.

아래에서는 ①남녀평등을 지향한 여성의 지위 향상, ②종교정책과 기독교 위에 세우려는 나라, ③대중가요와 영화산업의 확장 등을 통해 이승만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일별해보기로 한다.

1) 남녀평등을 지향한 여성의 지위향상

본래 남녀는 인간으로서 상호존중의 평등이었으나 유교는 반상, 남녀, 서열, 출신지역 등의 차별을 당연시하였다. 그 유습은 오래된 것이나, 이승만은 하와이 시절부터 교육과 예배에서 남녀공학과 남녀평등을 실천하였다. 그는 미군정기에 사회부의 부녀국이 설치되었고 이승만정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이를 계승하였다. 1948년 5.10선거에서 여성도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이는 스위스 등이 1971년에 허용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편이다. 과거제도, 신분제도 폐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한 농지개혁은 반상의 차별과 남녀차별의 근원인 양반지주제도 근절의 최대 요인이 되었다.

제1공화국의 여성 장관급으로는 임영신(초대 상공부 장관), 김활란(국제연합파견특사), 박현숙·박순천(감찰위원회 위원), 김철안(제3대 국회의원), 고헌경(국회선거위원회 위원) 등을 들 수 있다. 각종 ‘여성 1호’의 탄생은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한 영역 한 영역씩 빗장을 푸는 과정이었다. 금녀의 벽을 깨는 과정이었다. 광복 이후 ‘최초의 여성’은 정치라는 공적인 영역부터 파고들었다. 제헌의회 의원이던 임영신씨는 1948년 최초의 여성 상공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여성 최고 공직자의 길을 열었다. 여성 리더의 출현에 남성의 거부감이 컸다.¹⁵⁾ 1954년 황윤석은 최초 여성판사로 임명되었다.

정현주(2008)에 따르면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은 다음 3단계를 거쳤다고 하였다. 첫째, 1948~50년의 **계몽 위주의 여성정책** 실시로, 여성단체의 지도·육성을 통해 의식계몽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새 국가 건설을 위한 5.10 선거계몽운동, 의식주 생활 개선 사업, 가정생활 개혁에 앞장섰다. 남녀간 전통적 역할분담과 차별의식과 유습으로 인해 1950년 5.30 선거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2명밖에 당선되지 못했다.

둘째, 1950~56년의 전재민 **구호·보호 위주의 여성정책** 실시로, 전시생활 개선법 제정(전쟁 미망인 구호사업, 윤락여성 및 혼혈아 및 기아 대책, 여성단체를 통한 구호정책의 실시), 도의확립, 건설부흥, 과학적 합리적 생활개선으로서 신생활운동이 전개되었다. 한글전용정책

15) 1948년 8월, 임영신 초대 상공부 장관이 장관실에 들어서자 부하직원들이 쑥덕했다.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결재 서류를 들고 가 고개를 숙이겠느냐.” 그러자 그가 일갈했다. “서서 오줌 누는 사람 못지않게 뛰어다녔다. 결재 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은 당장 보따리를 싸라.”(중앙일보, 2005: 204).

으로 여성 대상 문맹퇴치나 문자계몽운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53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여성의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었다. 당시 공직에 진출한 여성들은 주로 우익 여성단체 출신, 교사 등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개신교 신자들이었다.

셋째, 1956~60년의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으로, 정부의 민법안이 국회에서 수정 제출되어 신민법(친족상속편)의 제정(호주제도의 존속, 동성동본 금혼제)이 있었다.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인 이태영은 야당 인사(고 정일형)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에서 거부되었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53년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이름으로 남녀평등 가족법안을 제출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¹⁶⁾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가정법률상담소가 발족되었다.

위와 같은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운동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여성=가정영역 전담자’ 또는 ‘남성=사회영역 전담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그러한 교육이 여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학교교육과정 속에 담긴 성차별로 여학생들은 사회·정치·경제 현장에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키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교육도 부진하였고,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1952년에는 여학생수의 비중이 51.8%였고, 1954년에는 남학생 2,358,280명에 여학생은 1,398,980명 정도로 59%, 1958년에는 68.5%로 늘어났다. 가정에서 남아가 정규학교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여아는 대안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초등수준의 대안학교인 공민학교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데서 드러난다.

<표 3> 1952년과 1958년의 각급학교에서 남녀 학생수의 차이

각급학교상향 별	1952			1958		
	소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소계 (명)	남자 (명)	여자 (명)
2) 계	3,172,662	2,089,494	1,083,168	4,254,742	2,525,638	1,729,104
국민학교	-	1,486,840	883,021	-	1,839,220	1,422,460
중 학교	-	243,384	68,687	-	305,178	125,110
고등학교	-	100,469	22,090	-	206,999	61,281
전문고등학교	-	-	-	-	-	-
실업고등학교	-	-	-	-	-	-
사범학교	-	7,696	2,549	-	7,317	4,522
대학	-	28,429	3,943	-	65,849	13,716
3) 기술학교	-	473	337	-	5,801	1,513
고등기술학교	-	806	454	-	3,168	6,242
공민학교	-	179,067	96,437	-	70,014	82,687
고등공민학교	-	41,425	5,645	-	22,092	11,573
기타학교(대학병동)	-	-	-	-	-	-
각종학교	-	-	-	-	-	-
대학원	-	155	15	-	-	-
종독교원양성소	-	750	-	-	-	-
여건대학	-	-	-	-	-	-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https://kostat.go.kr/ansk/>)

또한 여성의 산업인구는 남자보다 4백만 명 이상 적었고, 남자는 60% 이상이 1차 산업 이외에 종사하는 데 비해, 여자는 산업 인구의 89%가 농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여성의 2차 산업 진출이 저조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미진한 속에서 아직은 주부가 생계충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그것은 편견이었다. 1950년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많았다. 그 당시 주부의 전형은 ‘억척부인’이었다. 식물을 거느린 전쟁미망인 1명이 2.07명의 아이를 책임져야 했다. 박완서의 소설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바느질·식모살

16) 호주제 폐지, 양성 평등 사회로(중앙일보, 2005: 210). 2005년 3월 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는 여성들의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예고한다.

이·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생선 몇 마리를 이고 골목길을 오르내리는 뚝심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고된 노동에서 오는 요통, 관절염, 고부갈등, 말 안 통하는 남편과 사느라 얻은 화병 등이 그들의 고된 인생살이에 남은 잔해였다(중앙일보, 2005: 176). 1960년대 들어 사회가 안정되면서 ‘전업주부’가 등장했다. 그들은 남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랑받는 아내, 현명한 어머니’ 역할을 했다.

다른 한편 도시근대화의 익명성과 여유로움은 가정의 결속과 엄격한 성윤리를 약화시켰다. 1954년 1월, 서울신문에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소설은 현숙한 가정주부가 연하의 대학생과 몸을 부비는 ‘판스’에 빠지고, 외간 남자와 성적 탈선을 벌인다는 이야기다. 『자유부인』은 ‘춤’이라는 외피를 통해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을 대변했다. 개방적인 서양 문물은 전후 재건 붐을 타고 쏟아져 들어와 집에 갇힌 여성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호기심을 유발했다(중앙일보, 2005: 182).

1955년 5월,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한 혐의로 검거된 박인수는 폭탄 증언을 했다. “내가 상대한 여성 중 순결한 여성은 단 한명밖에 없었다.” 법원도 “법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라는 인구에 화자된 판결문을 남기며 박인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적용받지 않았다. ‘정조에 관한 죄’는 이후 1990년대 여성단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때까지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기제로 작동했다(중앙일보, 2005: 183).

2) 종교정책과 기독교 위에 세우려는 나라

종교는 국민의식의 저변을 형성한다. 인간은 뭔가를 믿는 존재이고, 그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종교는 인간의 의식과 생활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대사회의 오랜 전통의 무속, 신라와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조선후기의 천주교와 개항기의 기독교 중에서 한국이 서구화되면서 이승만정부에서 변창한 것은 개신교, 기독교였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소에서 성령세례를 받고 회심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어릴 때의 모친의 불교와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때의 유교적 영향을 안고 있으면서 구미 기독교 국가들을 모방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기독교에 대한 선호를 나라의 각종 제도와 의례 속에 녹이려고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군정은 미국선교사들의 조언에 따라서 한국개신교인들이 다양한 정치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한국교회에게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 그런 특혜에 대한 자연스런 연장에서 한국교회는 이승만정부의 정책에 열정적으로 협조했다(배덕만, 2016). 아래에서는 당시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의 변화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비구승 중심의 불교혁신

8·15 해방 이후 불교계는 일제 말기의 교단집행부가 퇴진한 가운데 식민지 불교의 극복과 불교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단 건설을 위해 매진하였다. 그러나 그 혁신에 대한 대상 및 방법을 둘러싸고 교단과 불교혁명당, 조선불교혁신회 등의 혁신단체 사이에는 일정한 갈등이 연출되었다. 갈등의 주요내용은 대처승의 처리와 사찰 토지 개혁이었는데, 특히 대처승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상당하였다. 혁신계열에서는 대처승을 식민지의 잔재로 보았지만, 교단집행부에서는 대처승을 인정한 구도에서 제반 문제를 생각하였다. 이러한 교단과 혁신단체의 대립은 결국 교단 분열로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혁신계열 승려들이 김구의 북행에

동참한 것은 그들의 투철한 현실인식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들의 사상과 배후를 의심케 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일단의 비구들의 근본 불교를 지향한 봉암사 결사는 교단 내부의 개혁이 좌절되었을 당시에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사실이었다(김광식, 2000: 200).

1950년대 불교사는 6·25 전쟁의 피해와 함께 6·25 직후 가시화된 불교 정화로 요약된다. 이 시기의 불교계를 큰 변동으로 몰고 간 것은 농지개혁이었다. 이 농지개혁으로 인해 사찰은 자경할 수 있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땅을 해당 농민들에게 반환해야만 했다. 사찰은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지가증권을 받긴 했지만, 이것을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다. 이렇게 위축된 사찰 경제는 선방과 비구승들의 위축을 야기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 내부적인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승만은 유년시절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제하 일본식 대처승이 주도했던 불교를 비구승의 불교로 돌려놓기 위해 특별담화를 7차례나 하면서 화엄 위주의 비구승제도를 강조했다. 대처승과 비구승 사이에 갈등을 낳기도 했다. 대처승의 태고사는 비구승의 조계사는 현판이 바뀌었다(오정환, 2022: 463-465). 사회부장관 전진한, 내무부장관 백성옥, 문교부장관 김법린은 불교도였다. 농지개혁법으로 사찰이 어렵게 되자 ‘사찰보호에 관한 건’(1952.4.21.), ‘사찰을 보호유지하자’(1953.5.4.)을 통해 사찰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로부터 1957년 말까지 88%를 되돌려 받게 했고, 돌려받지 못한 논지에 대해서 사찰은 농림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발행한 지가증권을 2배로 받게 했다(이주영, 2011: 203-205).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정화 유시는 불교정화를 위한 가속화한 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하였고, 1955년 8월 전국승려대회에서 비구측의 종헌이 제정되고 정부가 인정하였기에 이후 전국 사찰은 비구측에게 인도되었다. 해방직후 비구승은 40명에 불과했고, 불교개혁시에는 200명이었으나 대처승은 7000명이 넘었다(오정환, 2022: 464).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처측은 이에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비협조적이었으나, 비구측의 논리와 행동은 일면 공권력과 일반 사회에서 후원을 받았고 그 이면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김광식, 2000: 224). 그러나 이는 불교의 정화에는 기여하였으나 불교자주화에는 어긋났다.

(2) 예의범절의 유교 숭상과 구교와 갈등

유교문화 속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했던 이승만은 ‘삼강오륜’을 지키는 예의지국을 강조했다. 또한 ‘명심보감’을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도록 했다. 다만 이승만을 반대한 김창숙과 이승만을 지지한 이성주로 유도되는 분쟁이 일어났다(이주영, 2011: 205-206). 유교는 근세까지 조선시대의 성리학과 실학의 영향과 인근 중국의 사대자소의 사상적 영향 등으로 여전히 우리사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심지어 신 앞의 단독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앙인이라는 기독교회조차 위계적인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제도를 표방한다. 한국인들은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전근대적인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고, 주요 절기마다 조상에게 제례를 지내고, 서울의 주요 거리명과 광화문의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화폐의 인물 등에서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마지막 성취기준도 세계, 해양문명의 만국공법질서로 나갔던 우리나라를 동아시아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승만정부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었다. 한국현대사에서 1950년 대만큼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없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과 개신

교의 관계는 대표적인 정교유착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의 기독교 우대 정책으로 개신교가 각종 특혜를 누리면서 자유당의 유사 기간단체로 전락한 결과였다. 한편, 천주교는 처음에 이승만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으나 부산정치파동을 겪고 천주교를 대표하는 정치인인 장면이 야당의 지도자로 부각되면서 야당의 지지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천주교는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견제와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1950년대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개신교로 대표되는 ‘정교유착’과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교갈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승만정부와 개신교의 천주교억압은 야당탄압과 연결되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 시기에서도 표출되었다(강성호, 2014).

(3) 기독교 국가 건립 의지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과 이후에 기독교를 나라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확신을 거듭 표명해왔다. **기독교**는 이승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독립운동과 건국운동 및 국가 경영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 특히 그는 기독교(주로 개신교)를 장려함으로써 원래 유교국가였던 한국을 아시아 굴지의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①국가의 주요 의례를 기독교식으로 행하고, ②국기國旗에 대한 경례를 주목례注目禮로 대체하며, ③미군정기에 도입된 형무소의 형목제形牧制 유지, 군대에 군목제軍牧制를 도입하며, ④정부의 주요 부서에 기독교인을 대거 등용했으며, ⑤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언론매체(CBS, 극동방송)의 발달을 지원하며, ⑥6·25전쟁 중과 그 후에 외국(특히 미국)의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보내오는 구호금과 구호물자를 친여親與적인 ‘한국기독교연합회(KNCC)’를 통해 배분하도록 조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 교세확장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이승만 정부가 내세운 다양한 정책들의 친 개신교적 성격이 분석되었다. 강인철(2019)은 이승만정부 전반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일민주의’는 기독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은 성탄절 공휴일제도, 국회의원 취임선서, 국회개원식, 대통령 취임식, 국가적인 장례식 등의 주요한 국가의례들이 기독교식으로 제정되거나 거행되었다. 교회가 한국 최초의 민영 방송국을 설립하고 이후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점, 이른바 ‘주일성수’를 가능하게 해준 점, 첩을 둔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조치, 미신타파운동이나 사이비 종교 추방운동 등도 이승만정부가 교회에 제공한 특권들에 포함된다. 교회 인사에게 훈장이나 감사장 등을 수여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도움, 그리고 재정지원이나 면세 혜택 혹은 적산불하와 같은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민특위 피의자 중 개신교계 인사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 월등하게 많았다는 점에서, 그 무력화 조치는 교회가 공신력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본다(강인철, 2019). 또한 개신교회에서는 전쟁미망인과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도 확충하였다. 이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의 19개 부 장 · 차관 242명 가운데 38% 그리고 국회의원 200명 가운데 약 25%가 개신교 교인이었다. 각 부처의 장 135명 가운데 개신교인의 비율이 47.7%였다. 그 당시 남한의 총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요직에 기독교 교인이 과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대통령 집권기를 고비로 남한의 기독교 교세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유영익, 2011:25-26).

강인철(2009)은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승만 정부의 개신교 독주체제가 공고화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즉 (1)이승만 정부 핵심 구성원들의 종교적 구성과 개신교적 색채, (2)이승만 정부 정책의 친 개신교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에 집중했다. 먼저, 이승만정부가 정치지형의 역동적인 재편을 통해 ‘개신교 정권’의 성격을 강화해가

는 과정을 이승만이 구사한 종교적 동맹 혹은 배제 전략을 통해 분석한 결과 ①거국내각과 여당의 형성(1948.8~1950.6), ②전시체제를 위한 야당과의 일시적 제휴 및 배제(1950.7~1951.5), ③야당과의 대립, 장면과의 갈등 심화와 배제(1951.6~1952.4), ④죽청계와의 제휴와 배제, 이승만 일인지배체제의 확립(1952.5~1953.12)라는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정치지형 재편의 종교적 측면’을 추적했다. 이승만정부 전반기에 걸쳐 정권 핵심부로부터 대중교, 천주교, 불교계 인사들 그리고 흥사단계 개신교 인사들이 차례로 축출됨으로써, ‘개신교(특히 동지회계) 중심의 권력구조’가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결국 이승만의 독자적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승만정부의 ‘개신교적’ 성격은 정부 출범 직후보다는 집권 전반기의 끝 무렵인 1953~1954년경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급격한 정치지형 변동을 거치면서 정치영역 내에서 ‘개신교의 독주체제’가 형성되었다. 즉 정치지형 변동의 종교적 결과는 “기독교 중심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나타났다.

3) 출판산업, 영화산업 및 대중가요의 확산

출판은 지식(학술서), 교육(교과서 교재), 교양(문학,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정보(실용서, 잡지), 오락(대중물, 만화 등) 등의 기본 텍스트 역할을 하는 정신활동의 기간산업이자,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산업이다(한국출판학회, 2012: 25). 출판은 문학, 영화, 방송 등과 연결된다.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나 이범선의 오발탄은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다.

유행가 가요와 같은 대중예술이나 영화는 그 이면에 제작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움이 필요하다. 레코드 취입이나 영화에 쓰이는 카메라 필름 영사기 등은 해당 분야의 산업발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라디오 방송국과 TV 방송국의 개국은 가요와 영화의 대중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1948년 국영 방송 KBS가 발족하였고, 1950년 KBS 부산, 제주 등 지방방송국이 개국했으며, AFKN 라디오방송도 개국했다. 1952년에는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정·부통령 선거 방송을 했고, 1954년에는 -최초의 민간 방송인 기독교방송(CBS) 개국했다. 1954년에 텔레비전 수상기 일반에 첫선을 보였고, 1956년 최초의 민간 TV 방송사인 HLKZ(대한방송주식회사) 개국하여 소규모 실험적 수준의 방송이었으나 한국 TV사에서 개척자의 역할을 담당했고, 이는 화재로 문을 닫아야 했다. 1958년 부산 MBC 라디오 개국, 첫 민간 TV 방송국 TV가 개국했으며, 1959년 CBS 대구 방송국과 부산 MBC TV가 개국했다. 1959년 국산 라디오의 생산은 대중문화를 일상 속으로 전파하였다(서정우 외, 2006). 아래에서는 당시의 대중가요와 제작 상영된 영화를 중심으로 예술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출판산업

1945년 을유문화사를 창립한 정진숙(1912~2008)은 해방공간의 출판시기를 나누어, 1945년 8월~1946년 9월은 좌익 팸플릿 시기, 1946년 9월 이후 교과서 참고서 출판시기, 1950년대에는 교양서 출판시기, 1960년대 본격적인 출판시기, 1970년대는 사회과학서적 출판시기였다고 한 바 있다.

해방직후 국내 출판계를 주도한 것은 **좌익 팸플릿**이었다. 당시 유일하게 좌익서적 통계를 내놓은 [조선해방연보]에 따르면 1946년 7월 5일까지 간행된 220종 책 중에 좌익서적이 66종(32.7%), 시·소설 문학이 31종(15.3%), 한글 15종(7.4%), 국사 9종(4.5%), 영어학습책 9종(4.5%), 창가 6종(3%) 등의 순서였다. 좌익서의 반 이상이 100쪽 미만, 그중에서도 50쪽 내외의 얇은 4·6배판 크기의 팸플릿이 많았다. 좌익서적이 많이 출판된 것은 선전활동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수요와 ‘좌파 상업주의’도 한몫했다(한국출판학회, 2012:

102-103). 건준을 꾸린 여운형의 건의로 1945년 8월 16일 서대문 형무소를 비롯한 일제 하 ‘좌익사상범¹⁷⁾’ 1만여 명이 석방되었다. 이들은 출판물을 통해 국민을 공산주의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했다. 이강국 등이 쓴 “민주주의 12강”(1945년 9월 출간)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참칭한 도서였다.

1960-70년대는 문예영화 붐으로 출판은 만화, 애니메이션, 형화 등으로 이어졌다(한국출판학회, 2012: 20). 해방을 전후로 우리나라 출판은 대체로 개화기에서 해방 전까지, 독자층이 양반에서 일반대중으로 확대되는 국민계몽운동기였다면, 해방 후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경제가 파폐해졌으나 이후 상업적 출판이 시작되고 독자는 구매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한 것이다. 곧 1960년대 이후 출판의 기업화, 상업화에 대중문화가 흥성하였다. 1958년 대형전집 기획물 출판과 외판을 통한 출판의 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¹⁸⁾.

전반적으로 출판산업이 침체되었던 피난 시절, 출판계의 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문교부가 출판사들에게 국정교과서 발행권을 사립학교재단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위촉한 것이었다. 1951년 9월의 신학기를 앞두고 교과서 수요가 급증하자 문교부는 10여개 출판사에 각각 1억원의 융자혜택까지 주어, 출판계는 교과서와 참고서 발행에 열중하며 잠시나마 전쟁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한국출판학회, 2012: 39). 1951년 798종, 1952년 1391종, 1953년 1100종이 출간되었다(한국출판학회, 2012: 39). 1952년 교과서는 420종이었다. 교과서 출판이 출판업을 이끌었다(한국출판학회, 2012: 40). 1950년대 교과서 출판이 중심이었고, 출판사의 기업화를 이끌었으며, 기획전집과 문고본의 활기로 원고의 정선, 활자 개량, 최신 인쇄기 도입, 인쇄 제본 기술의 향상을 자극해 순식간에 출판물 제작기술을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발행종수와 발행부수의 급격한 신장도 있었다(한국출판학회, 2012: 63).

(2) 대중가요¹⁹⁾

박성서(2010)는 이승만정부 당시 대중가요의 발전을 상세히 전해준다. 해방과 함께 우리 말과 노래도 해방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음반 산업은 일본 레코드사들이 모두 철수한 뒤였기에 물자와 기술 부족으로 제작 환경이 열악했다.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 내 레코드 프레스 공장이 단 한 군데도 없었으며, 1944년경 일본의 한 레코드사가 레코드 프레스 시설을 우리나라로 옮겨다 놓고 공장을 차릴 계획을 세우던 중 전쟁으로 무산되었다.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는 혼란기를 전후해 가요계도 남북으로 갈라졌다. 강홍식, 박영호, 이면상, 조명암 등이 월북하고, 계수남, 김동진, 전오승, 한정무, 한복남 등이 남하했다. 이후 월북작가의 곡들은 한동안 남한 가요사에서 묻혀졌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까지는 수공업으로 제작되던 레코드보다 무대를 중심으로 한 공연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의 활동이 많았다. 유명, 무명의 악극단들이 조직되어 전국 공연무대를 누볐는데 제법 인기가 있었던 것은 국악과 연극을 가미한 창극단 무대였다. 버라이어티 쇼라는 명칭으로 가요무대의 2부를 구성했다. 오페레타 형식인 무대에서 인기를 얻었던 인물은 김백희, 심연옥, 백설희, 김미선, 이예성, 계수남, 강준희 등이었다. 쇼 형식의 무대 가수로는 박단마, 박혜옥, 이인숙, 유정희 등이었는데 이들은 광복 이후 가장 먼저 팝송을 부른 가수들이었다. 미군이 주둔하

17) 이들은 주로 전시통제기의 좌익계 독립운동가였고 민족주의 계열도 포함되었다(황민호, 2005 참조).

18) 1970년대 한글세대의 등장 후 출판이 더욱 팽창하였고, 오늘날 양적으로 세계 10위 권 출판대국이 되었으며, 2000년대부터 디지털 출판이 시작되었다.

19) 대중가요 부분은 경희대 박정은 박사님의 도움으로 작성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면서부터 각 곳에 ‘재즈’밴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댄스홀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댄스뮤직 밴드가 잇달아 등장했다. 초창기 미군부대를 위문하는 미8군계통의 연예인들은 일정한 조직이나 계통 없이 통역관이나 밴드 마스터가 미군 주둔지를 찾아다니며 위문공연을 가졌다.

광복 직후 혼란기에는 연예인들이 모여 ‘한국무대예술원’이란 단체를 만들었는데, 모든 무대예술 공연단체는 이 산하에 전부 집결했다. 1948년 5·10총선 때에는 모든 가요인들이 총동원되어 테리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 방방곡곡 순회하며 선거참여홍보전에 나서기도 했다. 악극 출신의 연기자 중에는 전옥, 송달협, 김정구, 양석천, 양훈, 김진규, 이예춘, 김희갑, 김근배, 황해, 장동휘, 장혁, 최성호, 백설희, 도금봉, 이경희, 신영균, 문정숙, 구봉서, 허장강, 노경희, 남춘역, 백운봉 등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했다.

전쟁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무찌르자 오랑캐 몇 백만이나, 대한 남아 가는데 초개로구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등 전쟁가요의 노랫말이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하였다. 전쟁 당시 한반도는 포성소리와 함께 진중가요로 넘쳐났으며, 대표적으로 <승리의 노래>, <전우야 잘 자라>, <통일행진곡>을 비롯해 <전선야곡>, <임 계신 전선>, <아내의 노래> 등의 가요가 전후방에서 울려 퍼졌다. 아울러 쇼 무대나 악극공연도 활발했다. 피난지 수도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스타 플레이어>라는 공연은 매우 흥행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선언과 함께 포성이 멈췄으며,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함께 3년간의 피난살이도 종지부를 찍었다.

휴전 이후 대중음악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였다. 제법 규모를 갖춘 레코드사들도 속속 설립, 창작 진용과 전속 가수들을 두고 가요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피난 시절의 임시 수도 부산에서 설립되어 이후 지구와 그레드로 분리되는 미도파를 비롯해 오아시스, 킹스타, 유니버설 등의 음반사들이 잇달아 설립되었다. 1956년에는 라디오 주제가 1호 <청실홍실>이 등장하였는데 이 <청실홍실>의 히트로 라디오 드라마는 반드시 주제가가 있어야 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56년에는 가요의 품위 향상과 저작권 옹호, 그리고 작품료 조정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대한레코드작가협회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미8군 쇼 무대에서만 활약하던 가수들도 차차 일반무대와 방송, 레코드에 등장하기 시작하며 1960년대 세대교체의 주역이 되었다.

(3) 영화산업

안태근(2013: 55-57)에 따르면 당시 한국영화는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광복기(1946~1950)로 광복영화는 일제하 상징적인 저항영화의 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 시기의 광복영화를 살펴보면 1946년 최인규의 <자유만세>, 이규영의 <안중근 의사>, 윤봉춘의 <3.1 혁명기>, 1947년 김영순의 <불멸의 밀사>, 윤봉춘의 <윤봉길 의사>, 이규환의 <민족의 절규>, 1948년 윤봉춘의 <유관순>, 윤대룡의 <조국의 어머니>, 최인규의 <독립전야>, 이규환의 <민족의 새벽> 등이 있다. 이런 광복영화가 사상적 혼란과 14연대 좌익군인반란사건 이후 **반공영화**로 제작되기 시작한다. 1949년에 한영모의 최초의 본격 반공영화인 <성벽을 뚫고>와 <전우> 등이 있다.

둘째, 동란기(1950~1953)로 한국전쟁으로 영화인들은 군부대 정훈국에 모여 전선의 기록영화 제작에 투입된다. 1951년 윤봉춘이 1사단 15연대의 전투기록을 담은 <서부전선>을 완성했고, 국방부 소속의 한영모는 <정의의 진격>을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들었다. 신경균이 <진격만리>(1953년)는 최선전에 죽음과 맞서며 활약한 영화인들의 피와 땀의 결정이다. 이 시기에는 극영화 8편이 제작되었는데 전쟁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

화인들은 극영화를 만들었다. 정창화의 <최후의 유혹>과 신상옥의 <악아>는 후세 영화인에게 귀감으로 남는 한국영화의 맥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중흥기(1954~1959)로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강천의 <피아골>은 휴머니티를 추구했던 반공영화이다. 1956년 이강천의 <격퇴>와 이용민의 <포화 속의 십자가>등에서 전쟁활극을 거쳐 1959년 김목의 <나는 고발한다>, 신상옥의 <이 생명 다하도록>, 최훈의 <장마루촌의 이발사>, 홍성기의 <비극은 없다> 등이 제작된다.

이렇듯 전쟁영화로 활극의 맥을 이어오던 한국영화가 드디어 195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무성영화시대 활극의 전통을 새로이 전개된다. 이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스릴러풍 미스터리영화인 한형모의 <마인>(1957), 이성구의 <정열 없는 살인>(1960), 이봉래의 <백주의 암흑> 등과 복싱 액션물인 김목의 <피묻은 대결> 등이 있다(안태근, 2013: 55-57).

1954년 국산영화에 대한 면세 정책 시행과 지정좌석제, 교차입장제 등이 실시되었고, 1950년대 후반 한국영화 제작 편수가 급증하며 관객들의 숫자와 극장의 숫자 또한 대폭 늘어나면서 한국영화산업이 정비되고 발전하던 시기였다. 코미디영화가 늘어났고, 악극단의 인기 스타였던 홀쭉이 양석천과 뚱뚱이 양훈을 대동한 ‘무대인사’나 관객을 끌기 위한 실연 무대와 어트랙션 쇼가 유행했다(박선영, 2017: 135-175).

5. 요약 및 결론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승만이 이끈 제1공화국은 분단, 6.25전쟁, 부정선거, 독재, 외국원조로 연명한 ‘암흑시대’일까? 이승만은 조선의 전제군주정 극복, 일제의 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 공산주의로부터 침략을 방어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의 기틀 위에 세웠다. 당시 국민의 문화수준으로 볼 때나 사회경제적 여건 상 도저히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에도 이승만은 이를 ‘고집스럽게’ 추진하였고 또한 성공하였다.

필자는 위에서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분야에서 국민의 문맹율을 80%대에서 20%대로 낮춘 점, 초등 6년제 의무교육을 완성한 점, 대학과 유학을 통해 고급인재를 육성한 점 등을 들어 교육기적을 낳은 교육대통령이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와 산업의 기틀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에너지 확보기술로서 땔나무 대신 연탄 화덕을 개발하여 19공탄을 보급하여 산림녹화를 시작하였고, 이를 도시로 실어날랐으며, 당시로서는 불가능해보이고 파격적인 원자력연구를 위해 최고 두뇌들을 유학 보내고 외국에서 기술을 익혀오도록 하였다. 토지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비료공장을 건설함으로써 화학공업의 전후사방 연관효과를 최대화하였으며, 주택과 도로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공장과 건물과 주택개량에 필요한 판유리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산업의 쌀인 제철과 제강공장을 세웠다. 라디오 개발은 전자산업을 선도하였고, 선반을 설계하여 제조기술을 열었으며, ‘시발’자동차 제조와 철도건설로 수송기술을 발전시켰다.

전근대적 국민들로 하여금 남녀평등을 지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지위향상에 노력하였으며, 근현대문명의 초석인 프로테스탄티즘의 기독교도를 우대하고 각종 제도와 의례에서 기독교적 양식을 존중하였다. 신문 방송 출판 등과 함께 영화산업을 진흥하였고, 대중가요가 활성화되는 데에도 노력하였다. 해방 직후 1년간 좌익의 출판을 통한 공산주의 사상계몽활동으로 건국과 이후 정국을 내내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승만이 이끈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에 맞도록 각종

제도와 문화를 혁신하고, 인재 양성에 주력한 정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산업, 과학기술, 언론 미디어, 문학과 출판 등에서 어떠한 초석을 놓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승만시대를 국민교육, 국민형성교육에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끝으로 건국의 어버이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두 가지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홍후조, 2022). 첫째, **정치시민교육**에서 반대한민국 세뇌교육을 축출하고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를 지키자. 계기수업을 반대한민국세력에게 맡기지 말자. 계기수업을 빌미로 마을활동가, 해직노동자 등 비(반)교육자가 학생의 인격과 정서를 해치는 학교특강을 없애자. 반대한민국 교육을 축출하고, 선진일류국민형성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국제관계와 국제정세, 세계사 속의 한국근현대사, 자주국방과 집단안보와 미군주둔 필요성, 국가패망사 교육, 남북한 실상 대조교육, 김가 조선해방과 통일교육, 기업가정신 및 경제금융교육, 애국심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1세기형 국민교육현장 제정도 할 필요가 있다. 정치시민교육에서 1976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존중하자. 강제성(주입, 세뇌, 교화 등)의 금지, 논쟁 재현성의 유지(학문과 정치영역의 실제에서 논쟁적인 사안은 수업 시간에도 양편의 주장을 그대로 고르게 드러낼 것), 학생 정치행위능력의 고양을 지향하는 사회과교육을 하자. A. Gramsci의 문화마르크스주의나 1968년 프랑스 학생운동(모든 것은 상대적, 모든 차이는 차별, 모든 금지를 폐하기)의 후신인 PC, 젠더교육, 강만길 식 역사교육 등을 벗어나도록 한다.

둘째, **‘자유’**를 법철학적 개념으로 가르치고, 국제관계를 비중 있게 가르쳐 선진일류의 자유민주시민을 양성하자. ‘자유’를 정직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자. 선진일류교육을 향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재설정한다. 남북분단과 월남인과 탈북민의 원인은 ‘자유’에 있다. 인민, 민중, 진보적 민주주의로 오염된 민주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주권을 자결할 수 있는 여지로서 법철학적인 개념인 ‘자유’를 확실히 가르치자. 그래야 우리는 공산주의 아편에서 벗어나고 김가 조선의 압제로부터 양민을 구해내고 통일을 기약할 수 있다. 사회과교육에서 국제관계, 국제정치, 국제이해, 외교안보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자. 주변국으로부터 존재를 부정당하는 우리나라는 국가의 안보와 존속(security), 우방국과 가치안보동맹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국가주권의 안정적 행사(power), 자유통상을 통해 경제적 번영(prosperity)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신(prestige)을 지켜낼 수 있다. 제2의 김춘추, 서희, 이승만을 키워내자.

국민국가의 토대는 국민교육이다. 국민형성이 되지 않으면 국가는 바로 설 수 없다. 문명국에서 국민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일제하 교육구국, 건국기 교육입국, 전쟁기 교육호국, 산업화기 교육흥국, 민주화기 교육보국**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홍후조, 2020). 한강의 기적은 곧 교육의 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천세영, 2021).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교육은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짐’ 혹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단순히 사교육비로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라기보다 학생들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의 어버이들이 건국할 때 소망하였던 나라와 점점 멀어지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다. 자유민주가 아니라 다른 민주를 채택해도 되는 것처럼 그릇된 혹은 안이한 생각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건국의 어버이들이 소망했던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우방과 동맹 등)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교육으로 일어난 나라 교육으로 망할 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 정도로 교육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지 오래다. 교육이 문제

가 되는 것은 정부나 학부모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잘 할 것으로, 사교육을 통해 학원에서 책임져 줄 것으로 여기고 그냥 맡겨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학창시절에 전교조식 교육을 받았고, 대학에서도 유사한 이념 썬클에서 훈련받았으며, 이들은 교직에 들어와 유사한 사상을 가진 이들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점에서 한배호(2022:46)의 다음과 같은 국가건설의 과제와 방향 제시는 여전히 유효한 지적이다.

“오늘의 정부나 내일의 정부 모두가 그동안 이룩한 국가정체성이나 국민통합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정부가 국가건설 단계의 나머지, 정치참여의 완성과 분배 즉, 복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건설의 완성을 의미하는 통일의 단계를 달성하기까지 계속해서 국민과 함께 목적달성을 위해 전진해야만 한다. 한국의 국가건설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국가건설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할 이유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4),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권·개신교와 천주교의 갈등,”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강인철(2009),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30: 91-129.
- 강정모(2014), “경제발전 정신으로서의 홍익인간 이념의 고찰,” **제도와 경제**, 8(2), 87-1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a), **과학기술 50년사(1): 과학기술의 시대별 전개**. 경기도: 경성문화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b), **과학기술 50년사(2):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경기도: 경성문화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c), **과학기술 50년사(3):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경기도: 경성문화사.
- 교육법(1949.12.31.), 법률86호.
- 곽병선(2023), “나라가 먼저다.” KEDI 동문세미나 발표자료.
- 김광식(2000), **한국불교100년(1900~1999)**, 민족사.
- 김용삼(2019), **대한민국 근대화대통령 박정희: 혁명②**, 지우출판.
- 김자중(2022), **한국대학의 뿌리, 전문학교**, 지식의 날개.
- 김주성(2021), “건국헌법의 이념성” 청구역사연구소 제1회 학술세미나(2021.4.29., 온라인 화상회의) 발표논문.
- 김학성(2021), “건국헌법의 이념과 가치” 청구역사연구소 제1회 학술세미나(2021.4.29., 온라인 화상회의) 발표논문.
- 김현태(2020), **교육혁명이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입국론**, 한경사회복지회 도서출판 샘.
- 김효선(2009), “실종된 건국이념, 암담한 대한민국 미래,” **한국논단** 8월호, 36-51.
-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1999), “제3장 정부 수립 후의 사학(私學)”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80년사**.
- 박선영(2017),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극장의 영화 상영 관행 : 실연무대와 무대인사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6권, 135-175
- 박성서(2010),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 있는 풍경, 290-298.
- 배덕만(2016), 정교분리의 복잡한 역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를 중심으로, 1945-2013, **한국교회사학회지**, 43, 175-224.
- 서정우 외(2006), **한국 언론 100년사 3· 미디어 가이드 2006**, 서울: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
- 안태근(2013), **한국영화 100년사**, 부천: 북스토리.
- 오정환(2022),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 타임라인.
- 유영옥(2012), “이승만의 업적에 대한 기호학적 해석: 긍정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63호(2012), 257-282.
- 이정락·정재훈·이윤경·유호웅(2020), “농지개혁 실시에 따른 사립대학 팽창에 관한 심층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205-231.
- 인보길 엮음(2011), **우리가 버린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다시보기**, 기파랑.
- 장상환(2000),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 발전,” **경제발전연구** 6(1), 141-176.
- 정현주(2008),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한국학술정보(주).
- 제성호(2021),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헌법정신” 청구역사연구소 제1회 학술세미나(2021.4.29., 온라인 화상회의) 발표논문.
- 중앙일보(2005), **아!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40년, 격동기의 100대 드라마**, 랜덤하우스 중앙.
- 천세영(2021),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철도청(1979), **한국철도 80년 역사**.

한국공학한림원(2019a), **꿈이 만든 나라 대한민국 산업기술 100장면**, 다니비앤비(DANI B&B).

한국공학한림원(2019b), **한국 산업기술의 대담한 도전 대전환**, 지식노마드.

한국과학재단(1988a),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농업분야**.

한국과학재단(1988b),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금속분야**.

한국과학재단(1989a),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기계분야**.

한국과학재단(1989b),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광업분야**.

한국과학재단(1990a),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화공분야**.

한국과학재단(1990b),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건축분야**.

한국과학재단(1991a),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토목분야**.

한국과학재단(1991b),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임업분야**.

한국과학재단(1991c), **한국 근세 과학기술 100년사 조사연구: 수산분야**.

한국출판학회 편(2012), **한국출판산업사**, 한울아카데미.

한배호(2022), **한국의 국가건설 단계와 자유민주주의의 진로**, 도서출판 오름.

허현미 외(2014), **한국 여성 체육 100년사, 제 1권 여성과 학교체육**.

홍후조(2020.7.), “국민형성 교육의 7대 과제” 청구역사연구소 세미나 발표문.

홍후조(2021.1.21.), “헌법정신을 가르치자” 에듀인뉴스 칼럼.

홍후조(2022.6.24.), “건국과 교육입국: 국민국가의 설립 토대로서 국민형성,” (사)역사연구원 제5차 학술세미나,
주제: 대한민국 건국, 바로 세워야 할 건국기념일(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황승흠(2011), “건국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2), 549-589.

Butts, R. Freeman(1988), *The Morality of Democratic Citizenship: Goals for civic education in the Republic's third century*(김해성 역, 2007, **민주시민의 도덕**, 나남).

Koch, Richard & Smith, Chris(2006), *Suicide of the West*(채은진 역, 2009, **서구의 자멸**, 말글빛남.).

<패널토론>

우남정신의 계승과 발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효숙(좌장, 리박스쿨, 시민단체) 김재동(목사, 교회) 김정민(박사, 학계)